



총회제반규칙집 정치치리총람집

2025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총회제반규칙집

2025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2025년 『총회제반규칙집·정치치리총람집』 발간에 붙여

제109회 총회는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복음의 본질이 되는 ‘생명’과 ‘평화’를 교회의 과제로 안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파괴되고 평화가 무너지는 절박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며, 하나님과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총회제반규칙집·정치치리총람집』은 제109회 총회에서 개정되고 신설된 법규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총회는 ‘총회 취업 세칙’에 변화를 주고,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 17인(이사회 추천 이사 2인, 이사장 포함)”을 “이사 17인(이사회 추천 이사 2인 주 여성 1인, 이사장 포함)”으로 조문을 수정 정리하였습니다. 정확한 규칙과 정보를 위해 변화된 부분을 반영하여 새롭게 인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뿐만 아니라, 규칙과 규정들이 복음의 본질 안에서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시행세칙으로 자리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주체들인 가장 교회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모든 법은 문자적 적용을 넘어선 그 바탕에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과 협력이 건강한 교단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며, 생명이 충만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뤄가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제109회 총회에서 개정되고 신설, 보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규칙
 - 1) 제6장 상임위원회
 - (1) 제13조(상임위원회) - 개정
 - ① 20.학교법인 한신학원이사회
 - 2) 제7장 본부
 - (1) 제18조(직원의 선임 및 임기) 2., 3., 4. - 개정
2. 평화·통일위원회 규정
 - 1) 제1장 총칙
 - (1) 제1조 - 개정
 - (2) 제2조 - 개정
 - 2) 제2장 조직
 - (1) 제3조 - 개정

- (1) 제4조 - 개정
- 3) 제3장 임원
 - (1) 제5조 - 개정
 - (2) 제6조 - 개정
 - (3) 제7조 - 개정
- 4) 제4장 회집
 - (1) 제8조 - 개정
- 5) 제5장 사업
 - (1) 제9조 - 신설
 - (2) 제10조 - 신설
 - (3) 제11조 - 신설
 - (4) 제12조 - 개정
- 6) 제6장 재정
 - (1) 제13조 - 개정
- 7) 제7장 개정 절차
 - (1) 제14조 - 개정

3.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 운영세칙

- 1) 제2장 자격 취득과 상실
 - (1) 제5조(특례연금) - 삭제
(이하 조순연)
- 2) 제5장 급여
 - (1) 제21조(급여의 종류) 10., 11. - 개정
- 3) 제6장 각 급여지급 사유 및 지급기준
 - (1) 제33조(환불) 6. - 개정
 - (2) 제38조(장애연금) 3. 1) - 개정
 - (3) 제39조(유족연금) 4. - 개정
- 4) 제7장 장애연금 등급기준 및 특약가입 약관
 - (1) 제46조(특약가입) 4. 특약에 의한 납입금 환불 (4) - 개정

4.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 1) 제3장 기관
 - (1) 제14조(임원의 자격과 종류 및 구성) ② 1. - 개정
 - (2) 제1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② - 개정
 - (3) 제2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② - 개정
 - (4) 제25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③ - 개정
- 2) 제4장 수익사업
 - (1) 제31조(수익사업의 명칭) - 개정
 - (2) 제32조(수익사업체의 주소) 2. - 삭제
- 3) 제6장 교직원
 - (1) 제37조(기본 자격과 임용) ① - 개정
 - (2) 제37조(기본 자격과 임용) ⑮, ⑯ - 신설
 - (3) 제41조(강사, 겸임, 초빙 교원) - 개정
 - (4) 제46조의2(면직의 사유) ① 7. - 삭제
 - (5) 제46조의2(면직의 사유) ② - 개정

- (6) 제48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③ - 개정
- (7) 제48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④ - 신설
- (8) 제77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 개정
- (9) 제77조(징계 및 재심청구) 1., 2., 3., 4., 5. - 신설
- 4) 제7장 직제
 - (1) 제81조(하부조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개정
 - (2) 제81조(하부조직) ⑪, ⑫ - 삭제
 - (3) 제81조(하부조직) ⑬ - 개정
 - (4) 제81조(하부조직) ⑭ - 신설
- 5) 제8장 대학평의위원회
 - (1) 제90조(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 개정
 - (2) 제93조(평의위원회의 임기) ① - 개정
- 6) 제9장 영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1) 제99조(위원의 선출 등) ① - 개정
 - (2) 제10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⑤ - 개정
 - (3) 제113조(운영 경비 등) - 개정
- 5.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 1) 제1장 총칙
 - (1) 제1조의3(설치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② - 개정
 - 2) 제6장 신학대학원운영위원회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삭제
(이하 장, 조 순연)
 - 3) 제9장 재심위원회
 - (1) 제17조(목적) - 개정
 - (2) 제30조 - 개정
- 6.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취업세칙
 - 1) 제1장 총칙
 - (1) 제3조(직원의 정의 및 선임 임기) 2., 3., 4., 7. - 개정
- 7. 정치치리총람집
 - 1) 장로(65세 이전 은퇴예식)의 노회 회원 자격에 관한 질의
- 6.노회 1)노회의 회원 [5] 추가
 - 2) 노회 헌의 주체에 관한 질의 - 6.노회 2)노회의 직무 [13] 추가
 - 3) 당회의 청원에 노회의 헌의 및 기각 결정에 관한 질의
- 6.노회 2)노회의 직무 [14] 추가
 - 4) 노회의 결의성수에 관한 질의 - 6.노회 3)노회의 회집 [5] 추가
 - 5) 제명과 출교에 대한 책벌 해당 여부 질의 - 10.권징 [62] 추가
 - 6) 1노회 1인 공천 시 한신학원 개방이사의 이사장 자격에 관한 질의
- 9.공천 [24]) - 삭제
(이하 번호 순연)
 - 7) 총회 교육원장 임기에 관한 질의 - 11.기타 [18], [20]) - 삭제
(이하 번호 순연)

2025년 『총회제반규칙집 · 정치치리총람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025년 5월 30일

총회 총무 이 훈 삼

총회제반규칙집

목차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규칙	13
---------------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제반 규정 · 정관 · 세칙

1.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33
2. 헌법위원회 규정	36
3. 고시위원회 규정	39
3-1)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시행세칙	49
4.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정관	54
4-1)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유지관리 시행세칙	61
4-2) 장학기금 관리세칙	65
4-3) 선교기금 관리세칙	68
5. 교육위원회 규정	71
5-1)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목회신학대학 정관	74
6. 선교위원회 규정	78
6-1) 이주민선교운동본부 시행세칙	81
7. 국제협력선교위원회 규정	85
8. 교회와사회위원회 규정	89
8-1) 사회선교사운영위원회 시행세칙	93
9. 평화 · 통일위원회 규정	98
9-1)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시행세칙	101
10. 기후정의위원회 규정	105
10-1)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시행세칙	108
11. 양성평등위원회 규정	112
12.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 정관	114
12-1)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 운영세칙	122
13. 신도위원회 규정	142
14. 재정위원회 규정	144
15.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146

15-1) 무임교역자 생활보장제 지급 시행세칙	150
16.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152
16-1)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154
17. 공천위원회 규정	159
17-1) 총회 공천업무 시행세칙	161
18. 총회 역사위원회 규정	164
18-1) 총회 역사유적 지정 및 관리 규정	167
18-2) 총회 역사자료관 운영세칙	177
19. 노회록검사위원회 규정	181
19-1) 노회록검사위원회 시행세칙	183
20.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186
20-1)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236
21.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운영위원회 규정	251
22. 기독교농촌개발원운영위원회 규정	253
23. 영성수련원운영위원회 규정	259
24. 목회와신학연구소 정관	264
24-1) 목회학박사원 정관	270
25.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정관	274
25-1)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운영세칙	284
26. 총회 감사 규정	316
27. 총회본부 처무 규정	321
28.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취업세칙	325
29. 재정회계 세칙	358
30. 여비 지급 세칙	366
31. 총회장(葬) 규정	370
32. 총회 의전 규정	371
33.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	375
34. 한국기독교장로회 법제업무 규칙	389
35.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기록관리 규칙	397
35-1)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보관소 시행세칙	402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규칙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라 칭한다.

제2조 (본부)

본회의 본부는 서울 시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총회 산하 지교회의 일치와 발전을 도모하며 각 노회와 지교회를 통찰하며 모든 국내 교회 및 세계 교회와 협력하여 한국과 세계를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교, 봉사, 교육사업을 계획 추진하며, 산하 지교회와 노회를 지도하고 치리하며, 국내외 교회 간에 친교와 협력 관계를 수립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각 노회로부터 파송된 총대를 회원으로 하되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하고 당해년도 상회비 납부 노회 총대 중에서 총대 점명 후 회원권이 발

동한다. 각 노회의 총대 파송 비율은 전년도 통계보고에 의하여 무흠 입교인 500명마다 목사, 장로 각 1인씩으로 하고, 250명 이상의 단수에 대해서는 1인씩 추가할 수 있다. 단 총대가 10명 이상인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의 여성 총대를 파송하여야 한다. 총회는 목사인 국제협력선교동역자와 남신도회·여신도회·청년회 대표 각 2인을 정회원으로 할 수 있다.

2. 초청 언권회원

총회는 초청 언권회원 35인 내외를 총회 실행위원회 추천으로 초청하며 본회와 안전심의부에서 언권을 가진다.

3. 당연직 언권회원

- 1) 증경총회장, 증경부총회장
- 2) 전직 총무
- 3) 총회 총무
- 4) 총대 아닌 위원장 - 해 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발언케 한다.
- 5) 공천위원회 위원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 회 장 1인, 부총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 기 1인, 부 서 기 1인

회 계 1인, 부 회 계 1인

제7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 회 장

- 1)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회의를 사회하고 통괄한다.

- 2) 총회의 모든 부, 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의하며 지도할 수 있다. 총회장은 임기 중 실행위원회 위원장, 직책상 위원 및 대외 관계 위원직을 제외하고 위원이 되지 못한다.

2. 부총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그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서 기

- 1) 총회의 개회 및 진행의 절차를 준비한다.
- 2) 총대의 천서를 접수하여 총회원의 명부를 작성 배포한다.
- 3) 접수된 사건의 서류를 정리하여 헌의위원에게 인도한다.
- 4) 전화에서 유안된 사건을 총회에 제출한다.

4. 부 서 기

서기를 도와 회의 진행에 따라 각 항 내용을 정리한다.

5. 회 계

총회 재정 회계 사무 규정에 따라 경리사무를 관장한다.

6. 부 회 계

회계를 협조하고 회계가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제8조 (선임 및 임기)

임원의 선임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1. 총회장은 부총회장(목사 1인, 장로 1인) 중에서 등록한 자를 후보자로 하고 투표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임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 1) 후보 등록자가 경선일 경우에는 결선투표로 선임한다.
 - 2) 단독 후보 등록자일 경우나 총회장 후보 등록자가 유고될 시에는 부총회장 후보 등록자 중에서 투표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임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다점자 2인을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부총회장(목사 1인, 장로 1인)은 후보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 등록한 후보자 중에서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임한다. 득표자가 없으면 다점자 2인을 놓고 결선투표를 한다. 단, 단독 입후보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실격되고, 총회에서 구두 호전을 받은 사람 중 3인을 임직순으로 정하여 투표한다.
3.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4. 기타 임원은 총회장, 선임된 총회장, 부총회장(2인)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5. 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재임기간 중 정년에 해당되면 선임될 수 없다.
6. 임원은 안전심의부 부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7. 총회장, 부총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과 유지재단이사장을 제외하고 임기를 마친 후 3년 동안 안전심의부장 및 상임위원회의 장을 하지 못한다.
8.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에 등록하는 목사, 장로는 소속 교회의 재산(교회의 본당과 대지 포함)이 총회(노회)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 (총회)

1. 총회는 매년 1차 9월 중에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 공고와 절차, 총대 명단 및 회의서류는 개회 10일 전에 총회원에게 발송한다.
3. 총회 각 부서 및 위원회는 총회 전에 모여 필요한 보고 안건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4. 총회 각 부서, 위원회 및 노회가 제출하는 청원, 현의, 문의 등 모든 서류는 소정 양식에 따라 안전별로 2통씩 총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행위원회)

총회 운영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회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며 사업을 종합적인 계획 아래 운영하기 위하여 총회 폐회 기간 중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그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안전심의부원 및 정기위원

제11조 (안전심의부)

1. 구성

총회 본회의 안전심의부를 총회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부원 수는 회원 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1) 정치부 100인 내외 2) 법제부 100인 내외 3) 선교부 100인 내외
- 4) 국제협력선교부 100인 내외 5) 교육부 100인 내외
- 6) 사회부 100인 내외 7) 신도부 100인 내외 8) 재정부 100인 내외

2. 임무

각 부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정치부 : 모든 법규에 따르는 모든 행정 사건에 관한 현의를 심의하여 보고하고 또 그와 관련된 사건을 본회에 제의한다.
- 2) 법제부 : 법규에 대해 해석하는 일과 총회의 규칙 및 총회 안의 각 부서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3) 선교부 : 교회 안의 모든 선교에 관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4) 국제협력선교부 : 국제협력선교에 관련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5) 교육부 : 교회의 모든 교육에 관련된 현의안과 교회학교교사전국연합회와 관련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6) 사회부 : 교회 안의 복지와 구호 및 사회의 제 문제에 관련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7) 신도부 : 남녀신도회와 청년회에 관련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8) 재정부 : 총회 안의 모든 예산 및 재정에 관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3. 배정과 임기

안전심의부의 각 부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배정되며 임기는 총회 기간 중에 한한다.

- 1) 부원은 한 부서 이외의 다른 부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 2) 정치부원은 목사를 과반수로 하고 재정부원은 장로를 과반수로 한다.
- 3) 각 부의 첫 모임은 그 첫머리의 기명자가 소집한다.
- 4) 총회장, 부총회장이 소속된 노회 총회원은 안전심의부 부장에 선임될 수 없고, 부장으로 선임된 자는 3년간 모든 부서의 부장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또한 동일 안전심의부 부장에 같은 노회의 총회원이 2년 연속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2조 (정기위원)

1. 위원

- 1) 현의위원 2인 - 총회 서기와 총무
- 2) 천서위원 2인 - 총회 서기와 부서기
- 3) 절차위원 3인 - 총회 서기와 총무, 총회 집회장소 노회장
- 4) 지시위원 2인 - 총회장 지명
- 5) 질서유지위원 2인 - 총회장 지명
- 6) 통계위원 2인 - 총회 전 서기와 총무
- 7) 총회주제위원 6인 - 총회 목사 부총회장, 서기, 총무, 한신대학교 총장,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전문인 2인(여성 1인 이상)

2. 임무

- 1) 현의위원
 - (1) 총회가 개회하기 1개월 전에 각 노회 또는 해당 부서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또 직접 안전을 총회에 현의할 수 있다.
 - (2) 현의위원 보고는 총회 개회 후 먼저 하며, 언제나 우선 보고할 권한을 가진다.
 - (3) 안전의 내용을 요약하여 총회개시일 10일 전에 각 총회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2) 천서위원

총회의 천서를 접수하여 회원 명부를 작성하되 분명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는 현의위원에 회부하여 검사케 한 후 총회에 보고케 한다.

3) 절차위원

총회의 회의 진행 절차를 준비하여 총회 개회 10일 전에 각 총회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4) 지시위원

총회의 회의 진행상의 광고 및 모든 지시 사무를 담당한다.

5) 질서유지위원

(1) 총회에 불참한 회원과 조퇴한 회원의 사유를 청취, 조사하고 허락 여부를 결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2)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모든 여건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3) 질서유지위원의 허락 없이 귀기한 회원에 대하여 여비 지출에 따르는 조치를 한다.

6) 통계위원

총회 산하 전국 각 지 교회의 교세 통계를 일정한 서식에 의해 각 노회로부터 수집,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7) 총회 주제위원

총회 주제위원은 매해 총회 주제를 선정하여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장 상임위원회

제13조 (상임위원회)

총회의 각종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게 기획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추천위원이 있는 부서 및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여성 1인 이상 공천한다.

1. 헌법위원회

1) 위원은 29인(여성 위원 1인 추가)으로 하고 헌법 정치 제16장 제80조 1.에 의하여 조직하되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 폐회 기간 중 헌법과 제 규칙, 규정 제정 및 개정안을 연구하여 총회에 현의할 수 있다.
- 3) 총회 폐회 기간 중 헌법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

2. 고시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위원 1인 추가)으로 하되, 그 중 위원회 추천 전문위원은 1인으로 하며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별정 규정을 둔다.
- 2) 목사고시 업무를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다.

3. 총회유지재단이사회

- 1) 이사는 15인(여성 1인 이상), 감사는 2인으로 하되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별정 재단 이사회 정관을 둔다.
- 2) 총회 소유 부동산을 재단에 편입하여 보존한다.
- 3) 노회와 지교회의 재산 보존을 위해 협력한다.
- 4) 선교기금 및 장학기금을 관리하며 그 관리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4. 재판국

- 1) 국원은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하고, 여성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며, 그 국장에는 목사로 선임한다. 단, 교회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에 한하며 한 노회에서 2인 이상을 선임할 수 없다.
- 2) 총회에서 위탁한 사건을 심리, 판결한다.

5. 교육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위원 1인 포함)으로 하고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 교육국의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한다.
- 3) 총회의 교육정책을 입안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6. 선교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별정 규정을 둔다.
- 2) 본 교단의 제반 선교방향을 개발하고 선교적 과제를 창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7. 국제협력선교위원회

- 1) 위원은 17인(여성 1인, 각 신도회 1인 포함)으로 하고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본 교단의 국제협력선교에 대한 정책 입안과 사업을 수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8. 교회와사회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 추천 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본 교단의 사회 정의 구현 및 사회 문제 대책을 강구하여 실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이를 위한 사회선교사를 임명·파송하고 운영위원회를 두어 관리한다.

9. 평화통일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위원회 추천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민족의 염원인 자주적 통일의 성취와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선교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를 위한 연구와 협의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0. 기후정의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 추천 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창조세계의 회복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하여 교단 내외적으로 선교활동을 수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1. 양성평등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위원회 추천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창조하신 뜻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동역자 정신으로 교회와 가정, 사회 속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2. 총회연금재단이사회

- 1) 이사는 15인(여성 1인 이상), 감사는 2인으로 하되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별정 재단 이사회 정관을 둔다.
- 2) 총회 연금사업과 가입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13. 신도위원회

- 1) 위원은 13인으로 하되 총회 공천 6인(목사 3인, 여성 1인 이상 포함), 총회 신도부장, 각 신도회 대표 2인으로 하고 별정 규정을 둔다.
- 2) 각 신도회가 함께 연대하여 공동 선교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그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14. 재정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총회 공천 12인, 총회 회계, 부회계, 재정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기획하여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15. 생활보장제위원회

- 1) 위원은 각 노회 생활보장제위원회 위원장, 여성 위원 1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 산하 교역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생활보장제 사업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6. 선거관리위원회

- 1) 위원은 공천위원회가 해 총회 목사 회원 6인, 장로 회원 5인을 구성(여성 1인 이상)하고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며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효율적으로 이룩한다.

17. 공천위원회

- 1) 위원은 각 노회가 선임한 1인과, 여성 위원 1인으로 구성하되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에서 맡긴 공천 사무를 전담한다.

18. 역사위원회

- 1) 위원은 12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 추천 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한국 교회 및 총회와 관련된 역사유적, 유물, 인물, 문화유산, 기록물을 지정, 관리 보존한다.
- 3) 총회 역사자료관을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세칙을 둔다.

19. 노회특검사위원회

- 1) 위원은 9인으로 하되,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별정규정을 둔다.
- 2) 총회 산하 모든 노회의 노회록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0. 학교법인 한신학원이사회

- 1) 이사와 감사는 본 교단의 목사와 장로로, 교육공무원법 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단, 공인회계사인 감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2) 이사는 이사 17인(이사회 추천이사 2인 중 여성 1인, 이사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총장은 이사를 할 수 없다. (단, 재임 기간 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법인이사회가 정한 일정금액을 재정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 3) 감사는 2인으로 하며 개방 감사를 제외한 1인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총회가 선임한다.
- 4)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5) 한신대학교 총장은 이사회가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6) 목사후보생을 양성하는 신학교육과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한신대학교를 운영한다.
- 7) 소정의 정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1.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 1)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3인(이사장, 총장, 신대원장), 이사회 추천이사 2인, 총회추천 10인(여성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총회추천 10인은 4년조와 2년조로 하되 공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인선한다.
- 3)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가 선임하고 이사회가 승인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4) 소정의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2. 기독교농촌개발원운영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 추천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기독교농촌개발원을 운영 관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3. 영성수련원운영위원회

- 1) 위원은 9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공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인선한다.
- 2) 총회 영성수련원 운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4. 목회와신학연구소이사회

- 1) 본 연구소 이사는 33인(여성 위원 1인 추가)으로 하되 총회 공천 29인, 당연직(한신대 총장, 소장), 이사회 추천이사 2인으로 하고 그 임기는 4년이다.
- 2) 소정의 정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5. 사회복지법인 한가정복지재단이사회

- 1) 본 이사회 이사는 11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당연직 1인(총회총무), 이사회 추천이사 2인, 총회 추천이사 5인, 외부 추천이사 3인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감사는 2인(외부추천 1인, 1인은 공인회계사 및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이다.
- 2) 소정의 정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6. 감사

- 1) 3인을 3년조로 하되 목사 1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하고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 2) 장로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 3) 총회의 재정 및 업무는 2월과 7월에, 자체 감사가 있는 산하단체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하며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4) 각 상임위원회 감사는 위원장과 서기가 받아야 한다.
- 5) 실행위원회 언권위원이 된다.

27. 특별위원회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본 부

제14조 (본부의 직무)

본부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집행, 처리한다.

제15조 (본부 직원)

총무 1인, 부총무 1인, 국장 약간인, 부장 약간인, 간사 약간인, 사무원 약간인, 협동직원 약간인

제16조 (본부의 직제)

본부에는 총무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운영한다.

- 1) 교육국 : 교단 교육, 교재 연구 개발 등
- 2) 선교사업국 : 선교사업, 정의평화봉사사업, 에큐메니칼 협력사업, 본부의 제반 행정, 서무, 홍보, 출판 등
- 3) 행정사무국 : 총회 제반 재정 및 산하 재단, 법인의 업무 등

제17조 (직원의 임무)

1. 총무

- 1) 총회의 업무책임자로서 총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총회 결의를 집행한다.

- 2) 총회의 모든 문서를 접수하고 보관한다.
- 3) 총회본부 직원의 보직을 명하고 통솔한다.
- 4) 총회 산하 각 기관의 업무를 연계성 있게 조정한다.
- 5) 총회의 각 부서와 위원회에 참석하여 언권을 가진다.

2. 부총무

총무를 보좌하고 유고 시 그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국장

총무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해당 부서와 해 위원회에 참석하여 언권을 가진다.

4. 부장, 간사

총무와 해당 국장의 지시하에 해당 부서의 맡은 직책을 수행한다.

5. 사무원

소속 부서의 일반 업무를 수행한다.

6. 협동직원

소관 업무를 협조 수행한다.

제18조 (직원의 선임 및 임기)

1. 총무

총대로 선임되지 아니하였어도 가하며, 총무는 부총회장 선거의 규정에 준하여 선거하고 총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부총무

총무가 제청한 자를 실행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로 인준하여 총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미만으로 한다.

3. 국장

총무가 제정한 자를 실행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로 인준하여 총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미만으로 한다.

4. 부장, 간사

총무의 제정에 의하여 총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미만으로 한다.

5. 사무원

총무가 임명한다.

6. 회계 사무의 직책을 맡은 직원은 재정보증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7. 총회 산하 유급 실무직원은 총회 총대와 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단, 재단 이사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처무 규정)

본부의 처무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연합회

제20조 (연합회)

총회는 남여신도회, 청년회, 교회학교교사전국연합회를 산하에 두며 지도, 보조, 감사한다.

제9장 재 정

제21조 (총회의 재정)

총회의 재정은 각 노회의 상회비와 소속 단체 및 개인이 기부하는 재산과 그밖에 총회가 조성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상회비는 노회의 재정 실적에 준하여 배정하되

세례교인 부담금으로 한다.

제22조 (상회비의 납입)

상회비는 노회가 4분기로 납입하되 1월초, 5월초, 8월초, 총회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월에서 6월까지를 상반기로 하고 7월에서 12월까지를 하반기로 하여 총회에 전년도 결산보고와 함께 상반기 수지 상황 보고를 해야 한다.

제24조 (여비 규정)

총회의 여비 규정은 총회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장 회원권 제한

제25조 (회원권 제한)

1. 생활보장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 기관의 목사(부목사, 준목, 전도사 포함), 장로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 1) 총회의 모든 위원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 2) 노회의 모든 피선거권(총회 총대 포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 3) 총회 혹은 노회의 서류 발급을 제한한다.
2. 총회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 기관의 목사(부목사, 준목, 전도사 포함), 장로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단, 연금가입 자격이 상실된 자는 예외로 한다).
 - 1) 총회의 모든 위원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 2) 노회의 모든 피선거권(총회 총대 포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총회가 공천한 법인 이사(위원)는 총회나 총회 실행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단의 이익과 임명권을 훼손할 경우 총회의 결의로 해임하고 모든 공천에서 배제한다.

4. 각 상임위원회와 기관은 회원권 제한을 특정한 총회의 결의와 지시에 대한 안전을 다룰 때 반드시 기명식 투표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장 개정 절차

제26조 (개정)

이 규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1975년 9월 제60회 총회 제정
1976년 9월 제61회 총회 개정
1981년 9월 제66회 총회 개정
1984년 9월 제69회 총회 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89년 9월 제74회 총회 개정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개정
1992년 9월 제77회 총회 개정
1993년 9월 제78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1999년 9월 제84회 총회 개정
2000년 9월 제85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제97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2024년 2월 제108회 총회 실행위원회 개정
2024년 9월 제109회 총회 개정

한국기독교장로회
제반 규정 / 정관 / 세칙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실행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총회 운영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회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며 사업을 종합적인 계획아래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조직)

본회는 아래 위원으로 조직한다.

1. 총회 임원
2. 각 노회 당연직 대표 -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
(노회장이 장로일 경우 : 노회장, 목사 부노회장)
3. 각 안건심의부서 7인
4. 상임위원회 위원장
5. 국제협력선교동역자 2인
6. 연권회원 : 총회 총무, 한신대학교 총장,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장, 목회와신학연구소장, 기독교농촌개발원장, 영성수련원장, 신도회 대표 3인(남신도회·여신도회·청년회), 교회학교교사전국연합회 대표 1인
7. 단, 현 노회 구성분포에 따라 안건심의부서에서 선출하는 각 7인은 공천위원회에 일임하여 총대 목사 또는 총대 장로를 4인 이하로 하고, 한 노회에 편중되지 않도록 숫자를 조정한다.

제4조 (임기)

위원 임기는 당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무)

1. 총회 본부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2. 총회가 맡긴 업무와 다른 부서에 관계되지 않은 돌발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총회에 제출된 1심 재판권(고소, 고발, 위탁판결, 직할판결, 행정심판)에 대한 기소는 기소결정위원이 결정하지만, 상소(고소, 고발)와 항고(행정심판)는 접수하는 대로 총회 재판국으로 하여금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한다. 기소결정위원은 부총회장 2인, 총회 서기, 헌법위원장, 법제부장으로 한다. 기소결정위원 업무 지침은 별도로 둔다.
4. 총회를 상대로 사회 법정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경우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며 분쟁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5. 정책개발 및 헌의 임무를 수행한다.
6. 총회 규정에 관계된 인사 사무를 관장한다.
7. 에큐메니컬 관계 사업에 필요한 연구와 방침을 수립한다.

제6조 (임원)

본회는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총회장과 서기가 각각 이에 해당한다.

제7조 (회집)

본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가진다.

1. 정기회는 총회 직후에 회집한다.
2.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회는 개최 7일 전에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긴급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7일 전이라도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회집할 수 있다.

제8조 (결의)

본회의 모든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 (개정)

이 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73년 9월 제58회 총회 제정
1977년 9월 제62회 총회 개정
1981년 9월 제66회 총회 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1989년 9월 제74회 총회 개정
1993년 9월 제78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3년 9월 제88회 총회 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헌법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임무)

1. 본회는 법규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현의할 수 있다.
2. 총회가 개정하기로 의결한 법규의 조문을 정리한다.
3. 총회 폐회 기간 중 법규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
4. 총회가 연구를 위임하면 그 결과를 법규 개정안은 현의하고, 기타 안건은 보고서로 제출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조직)

본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가 선정하는 노회별 각 1인씩, 여성위원 1인으로 하며 목사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4조 (위원)

본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조별로 3반으로 나눈다. 총회 후 정기회부터 기산한다.

제5조 (임원)

본회는 정기회에서 위원장 1인, 서기 1인의 임원을 투표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회의)

본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한다.

제7조 (개회성수 및 의결정족수)

본회의 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요하며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서면결의)

본회는 필요에 따라 안건을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유권해석)

본회의 법규 해석은 회의 결의로만 한다.

제10조 (분과위원)

본회는 필요한 연구를 위해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76년 9월 제60회 총회 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91년 9월 제76회 총회 개정
1999년 9월 제84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고시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목사고시를 시행하는 데 있다.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15인(여성 위원 1인 추가)으로 조직하고 그 중 위원회 추천 전문위원 1인을 둔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5인 이상 교체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비 총회원 중에서도 선임될 수 있다.

제4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과 선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1인, 서기 1인
2. 본 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정기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하고 출제위원은 호천으로 정한다.

제5조 (회의)

정기회는 총회 후 첫 번째 회의이고, 위원장이 필요를 인정할 때나 회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를 수시 소집한다. 개회 성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6조 (결의)

1. 본회의 모든 결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찬성 결의로 한다.
2. 서면 결의는 전원 일치 찬성 결의로 한다.

제7조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고시위원회 대표 9인(위원장 포함),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전문인(약간 명)으로 구성된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 단, 고시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제8조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1. 수련대상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의 대상은 2003년도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입학생부터 해당되며, 다음과 같다.

- 1) 총회 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필수 교역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M.Div.)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 2) 총회직영 한신대학교 대학원에서 필수 교역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Th.M., M.A.)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 3) 총회직영 한신대학교 대학원에서 필수 교역과목을 이수하고 박사학위(Th.D., Ph.D.)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 4) 타 신학대학 대학원 졸업자로서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에서 1년 동안 필수 이수과목을 이수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단, 위탁교육 교과목 선정은 위원장과 신학대학원장이 정한다.)

2. 수련과정 특별사항

군목의 경우는 헌법 정치 제20조 2항에 의거하여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예외자로 한다.

3. 수련과정 기간

수련과정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전임사역자가 아닌 경우 3년으로 한다.

4. 수련과정 교과목

교과목 편성은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5. 수련과정 주관 및 장소

- 1) 고시위원회 지도 하에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가 시행한다.
- 2) 장소는 총회와 필요한 장소로 한다.

6. 수련과정 재정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실시함에 있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재정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고시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허락을 받는다.

- 1)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총회와 수련생이 소속한 노회들이 각각 2분의 1씩 분담한다.
- 2) 수련생이 소속한 노회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 총액의 2분의 1은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참여하는 노회와 수련생의 수를 감안한다.
- 3)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의 노회 분담금은 수련생의 등록 당시 소속 노회가 부담한다.

7. 등록절차

- 1) 총회 고시위원회는 매년 1월에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등록절차를 공고한다.
- 2)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지원하는 사람은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등록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1) 등록서류

- ① 신규(1년차) - 등록신청 소정양식,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추천청원서(노회제출용),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추천서, 제직회의록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 ② 계속(2, 3년차) - 등록신청 소정양식,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계속추천 청원서(노회제출용),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계속추천서, 제직회의록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2) 등록기간 - 매년 5월 중으로 한다.

- (3) 등록접수가 완료되면,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는 그 등록 현황을 총회 고시위원회와 소속 노회에 보고한다.

8. 등록 연기신청

수련기간 중 군입대,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지도목사를 통해, 소속 노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연기 신청을 한다.

9. 수련과정 이수

- 1) 본 과정은 수련과정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목회실습(지도위원의 지도), 집중교육, 중간평가로 진행되는 1년차 과정과 수련과정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목회실습(지도위원회 지도), 집중교육, 종합평가로 진행되는 2년차 과정(3년차 과정)에 이르는 총 2년(3년)에 걸쳐 시행된다.
- 2) 총회는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헌법 정치 제38조 2항에 의하여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제9조 (수련과정 지도목사)

수련생의 목회실습을 지도하기 위해 ‘지도목사’를 두며, 지도목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도목사는 소속교회 당회장(준당회장)으로 한다.
2. 지도목사는 수련생의 목회실습을 관리하고 지도하며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매 분기별로 해당자에 대한 ‘목회실습 평가서’를 작성한다.
3. 목회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및 불합격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에 따른다.
 - 1) 평가점수는 A(100-90), B(89-80), C(79-70), D(69-60), F(59점 이하)로 하고 F로 판정되면 불합격으로 한다.
 - 2) 불합격 시에는 목회 실습을 1분기 연장할 수 있으며, 불합격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4. 지도목사는 매 분기별로(총 4분기 또는 6분기) 작성한 ‘목회실습평가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수련생의 ‘목회실습 평가서’를 취합하여 총회 고시위원회와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제10조 (총회 위탁교육)

1. 대상

- 1)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위한 총회 위탁교육 과정
 - (1) 정부 인가 타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 2) 타교파 목사의 총회 위탁교육 과정
 - (1) 정부 인가 타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본 교단이 협력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계개혁신교회커뮤니온(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 (2) 회원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사람이며, 그 외 사항은 총회 고시위원회 2/3 결의에 의한다.
-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제협력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사람

2. 위탁교육 기간

- 1) 총회 위탁교육은 1년(2학기)을 기본 과정으로 하되, 피교육자의 이수 과목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1) 신학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는 6개월(1학기), 교단 신학과와의 관련성 및 이수 과목이 미흡할 경우는 1년 이상(2학기 이상)의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2) 고시위원장, 신학대학원장 및 담당 교수가 심의하여 피교육자의 교육 기간(이수 과목)을 정한다.

3. 위탁교육 주관 및 장소

총회 고시위원회가 시행하며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교육한다.

4. 위탁교육 교육비

총회 위탁교육 교육비는 총회 고시위원회가 책정한다.

5. 접수절차

- 1) '총회 위탁교육'에 지원하는 사람은 접수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접수기간 내에 접수한다.

(1) 접수서류

타교파 소속 정부인가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본 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고자 하면, 노회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총회 위탁교육과정을 청원한다. 총회 위탁교육과정 이수자는 총회 직영 신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를 청원할 수 있다.

①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위한 위탁교육

- 노회제출서류 : 총회 위탁교육 추천 청원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노회에만 제출), 주민등록초본, 최종 졸업증명서

와 성적증명서, 증명사진 각 1부 및 해당 노회의
추가 요청 서류(해당 노회 문의)

- 총회제출서류 : 총회 위탁교육 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최종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증명사진 각 1부

② 타교파 목사편입을 위한 위탁교육

- 노회제출서류 : 타교파 목사 편입을 위한 노회 추천 청원서
 - ▶ 첨부서류 : 목사임직(안수) 증명서 2부, 이력서(총회양식, 사진첨
부)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노회에만 제출), 주민등
록초본 2부, 해당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부, 대
학원) 각 2부, 해당 노회 목사 2인 이상의 추천서 2
부, 및 해당 노회의 추가 요청 서류 (해당 노회 문의)
- 총회제출서류 : 타교파 목사 편입을 위한 총회 위탁교육과정 추천서
 - ▶ 첨부서류 : 타교파 목사노회가입 확인서, 목사임직(안수) 증명서,
이력서(총회양식, 사진첨부), 주민등록초본, 해당 졸
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부, 대학원), 증명사진(이
력서와 별도) 1매

(2) 접수기간 - 매년 1월과 6월 둘째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6. 총회 고시위원회는 노회가 추천한 자를 심의하여 결과를 본인과 노회에 통보한다.
허락된 자는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일정한 교육비를 총회에
납부한다.

7. 위탁교육 연기

위탁교육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총회 고시
위원회에 연기 신청하여 최대 1년간 연기할 수 있다. 단, 위탁교육 허락 후 첫
학기 연기는 할 수 없다.

8. 위탁교육 이수

- 1)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위한 총회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는 헌법 정치 제40조
5항에 의하여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등록자격을 부여한다.

- 2) 타교파 목사 편입을 위한 총회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는 헌법 정치 제23조 3항에 의거 총회 목사 편입고시(헌법, 면접)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제11조 (목사고시)

1. 응시자격

- 1)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2) 타 신학대학원 또는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하고 타 교파에서 목사 안수 후 목회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에서 1년간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
- 3)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개신교파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목사로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4) 단 군목으로 입대할 경우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과 함께 목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2. 고시과목

- 1) 필답고사
 - (1) 성경
 - (2) 설교
 - (3) 교단 헌법
- 2) 면접

소명, 품성, 자질에 대한 종합평가

3. 고시의 일시와 장소

- 1) 일시 - 연 2회 실시한다.
- 2) 장소 - 서울을 원칙으로 한다.

4. 고시방법

- 1) 합격표준 - 100점 만점에 70점을 합격점으로 하고 합격된 과목은 1년간 유효하다.
- 2) 서류 심사는 위원장과 서기가 전담한다.
- 3) 시험지에는 수험번호와 답안만 쓰고 그 외의 것은 일절 금한다.

- 4) 시험지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것 이외의 것은 무효로 한다.
- 5) 시험 감독은 본 위원회 위원과 출제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 6) 면접시험은 3인 시험관을 1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원 합의로만 합격한다.
- 7) 출제위원이 채점한 후 시험지를 개봉하고 성적을 집계하는 일은 위원장과 서기가 한다.

5. 고시연기

- 1) 군 복무, 유학, 기타 본 위원회가 인정할 만한 사유로 고시연기 청원이 있을 경우 해 기한만큼 유효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고시의 수속)

1. 서류제출

노회는 목사고시 응시 지원자를 심의한 후 적격하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고시일 1개월 전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통은 노회가 보존하고 1통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목사고시 청원서
- 2) 목사고시 추천서
- 3) 총회 양식에 의한 이력서
- 4) 최종 출신 학교장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5) 18개월 이상 생보부담금 납입증명서
- 6)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이수(예정)증명서
- 7) 증명사진
- 8) 목사고시 추천 청원서(노회 제출용)
- 9)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확인서(전문인증기관 또는 총회 등)

2.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는 총회장과 고시위원장 명의로 즉시 해당 노회에 통지하고 발표한다.

제13조 (경비)

1. 수험료 - 목사고시 응시 지원자는 수험료를 목사고시 서류접수 시에 납부하고 수험 번호를 받아야 한다.
2. 예산 - 총회 예산에 의한다.

제14조 (총회 고시자료집 집필 및 관리)

1. 총회 고시자료집을 집필하고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한다.

제15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60년 6월 제45회 총회 제정
1988년 9월 제73회 총회 개정
1991년 9월 제76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제97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은 급변하는 21세기 목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회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지향하고, 목회의 각 부분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목회자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새 시대의 교회 환경에서 목회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과 인격, 소명과 정체성을 확립시켜 실제적인 교역 실무를 담당하는 능력있는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설명회)

수련과정 설명회는 등록을 마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수련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며 파송예배 등을 실시한다. 그 시기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시기 : 매년 6월 중
2. 기간 :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3조 (교과목)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목회실습 교과목 : 예배, 예식, 설교, 심방, 상담, 교육, 행정, 영성과 리더십 등의 교역실무를 실습, 분석, 평가하는 과정으로 구성한다.
2. 집중교육 교과목 : 목회실습과정에서 배운 교역 실무에 필요한 이론적인 정립과 교단 및 목사의 정체성과 기타 전문목회 분야들에 대한 과목으로 구성한다.

제4조 (목회실습)

목회실습은 수련생이 소속한 교회에서 수련하는 동안 소속 교회의 협조와 지도목사의 지도 하에 실제적인 교역 실무를 훈련하고 실습하며 평가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수련생은 목회실습을 하는 동안 소속한 노회의 지도를 받고, 소속 교회에서 수련 과정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속 교회가 아닌 곳에서 목회실습을 원하는 수련생은 소속 노회의 허락으로 다음의 각 호에서 수련과정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수련방법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 1) 총회 산하기관과 유관 에큐메니칼 협력 및 선교기관
 - 2) 총회 사회선교사 운영위원회가 허락한 특수선교지 또는 기관
 - 3) 개척 및 단독 목회
 - 4) 해외
2. 지도목사와 목사수련생의 관계가 부부나 부모 자녀의 경우, 목회실습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해외 유학을 앞둔 자녀, 특수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수련생은 목회실습을 포함하여 수련과정 동안 교단이 인정하는 전임전도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예우를 받으며, 소속 노회는 수련생이 수련하고 있는 소속 교회와 협의하여 소속교회가 수련 기간에 필요한 사례비와 경비를 책임지도록 한다.
4. 소속 교회는 수련생에게 설교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련기간 동안 일정하게 정기적인 설교 기회를 주어 이를 훈련하고 지도한다.

제5조 (목회실습 교과목 편성)

1. 목회실습 교과목 편성은 지도목사가 본 시행세칙 제3조 1항의 범위 안에서 수련생이 소속한 교회 상황을 고려하여 교과목을 정한다.
2. 목회실습이 매 분기별로 운영되는 만큼 총 4분기(6분기)에 맞게 교과목을 편성한다.

제6조 (목회실습 기간)

목회실습 기간은 총 2년에 걸쳐 다음과 같이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1. 1년차 과정 : 1분기(6월-11월), 2분기(12월-5월)
2. 2년차 과정 : 3분기(6월-11월), 4분기(12월-5월)
3. 3년차 과정 : 5분기(6월-11월), 6분기(12월-5월)
4. 목사수련생이 목회실습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속교회를 사임하고 실습지를 이명할 경우, 목회 실습지 이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5. 목사수련생이 목회실습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속 교회를 사임할 경우, 목회실습과정이 매 분기별로 진행되는 만큼 순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집중교육)

집중교육은 수련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그 일정은 매년 8월 말 혹은 9월 초로 한다.

제8조 (집중교육 교과목 편성)

집중교육을 위한 교과목 편성은 수련과정 운영위원회가 본 시행세칙 제3조 2항에 따라 정하되, 1년차와 2년차의 해당자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서 각 교과목을 편성한다.

1. 1년차 범위 :

성서와 설교구상1, 설교기법1, 교회헌법1, 교단역사와 선교정책1, 목사의 품성과 리더십1, 전도방법론1, 교회개혁과 모델 연구, 성경공부 지도론, 국제선교, 관혼상제와 목회, 상담의 실제, 영성과 기도훈련, 예배와 찬양(찬송가학/실연), 기독교와 사회변화, 한국의 종교문화(타 종교), 이단 문제, 성서지리, 개혁교회와 장로교,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1 등

2. 2년차 범위 :

성서와 설교구상2, 설교기법2, 교회헌법2, 교단역사와 선교정책2, 목사의 품성과 리더십2, 전도방법론2, 교회행정(공동의회/당회/제직회/회의법)과 재정(재정운용/예결산), 소그룹목회(구역운영/제자훈련 등), 교회력과 예전, 교회학교의 운영방안, 지역 교회의 에큐메니컬선교, 선교와 사회복지, 목회심리 치료, 심방의 실제, 정보화 목회, 기독교 문화선교와 목회, 교회와 예술(미학/건축/음악 등), 부교역자론,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2 등

3. 3년차 범위 :

성서와 설교구상3, 설교기법3, 교회헌법3, 교단역사와 선교정책3, 목사의 품성과 리더십3, 전도방법론3, 목회영성, 갈등대처 및 대화 프로세스,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3 등

제9조 (목회실습일지, 보고서 작성)

목회실습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수련생은 다음과 같이 목회실습에 대한 일지와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수련생은 매주 목회실습 내용과 느낀 바를 ‘주간목회실습보고서’로 작성하여 지도 목사에게 제출한다.
2. 수련생은 목회실습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바를 매 분기별(6개월)로 ‘분기목회실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 목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수련생은 성경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성경을 통독한다.

제10조 (중간평가)

중간평가는 1년차(2년차) 수련과정을 마무리하면서 평가하는 과정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시행한다.

1. 중간평가 모임을 통하여 목회실습과정 동안 얻었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2. 운영위원과의 면담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목회현장의 요구와 이의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
3. 중간평가의 시기는 1년차(2년차)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6월 중에 실시한다.
4. 운영위원회는 수련생이 제출한 실습일지와 보고서, 지도 목사가 제출한 평가서를 기초해서 수련생의 1년차(2년차) 과정을 평가하여 수료와 유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 노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종합평가 및 수료)

종합평가는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총 마무리하고 수료하는 과정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시행한다.

1. 종합평가 모임에서는 수련생이 2년(3년) 동안 수련과정을 통해 자신의 목회방향 결정과 목회지도력 형성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발표하도록 하고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는 이를 평가하고 지도한다.
2.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총 2년(3년)간의 모든 수련과정을 종합평가하고 수료식을 한 후 그 결과를 해 노회에 보고한다.
3. 수료증은 ‘총회장’ 명의로 발행한다.
4.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5. 종합평가의 시기는 2년차(3년차)의 전 과정이 마무리되는 5월 중에 실시한다.

제12조 (개정)

이 시행세칙은 고시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제정
2007년 10월 29일 실행위원회 개정
2008년 8월 11일 실행위원회 개정
2008년 11월 10일 실행위원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1.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1) 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35 총회회관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재산을 소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유지 경영한다.

1. 본 재단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처리
2. 학생 육성 및 봉사 사업
3. 기독교 선교 활동
4. 보육시설 및 유치원 사업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기관을 설립 유지 경영한다.

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15인(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여성위원 1인 이상 포함), 감사 2인

제6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의 임원의 반수 임기는 전항의 임기의 반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공천위원회의 공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하며, 지체 없이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기 전의 임원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총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 총회를 거쳐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상임이사 선임)

총회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서 상임이사를 겸임한다.

제10조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의 지정)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3. 전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4.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자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이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전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는 총회 및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장 이사회

제13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이사회와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람

제15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 의결은 출석한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산 이외의 사무 처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 (정기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18조 (이사회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지 기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 소집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본 정관 제12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전항에 대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4장 자산과 회계

제20조 (자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자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의 2종으로 나눈다. 기본 재산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연도말 보고 목록)과 같다. 기본 재산 이외의 자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자산의 관리)

1. 기본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기본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서울시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 (경비의 유지 방법)

본 법인의 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기타 수입으로 이에 충당한다.

제23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본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산 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서 상환되는 차입금은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사무국

제26조 (설치)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7조 (직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8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9조 (직무)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해산)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서울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 (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 등의 보고)

익년도 사업 계획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33조 (개정 및 시행)

1. (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 규정 및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2. (정관 효력)

본 정관은 등기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임원 명단 및 임기는 생략)

1966년 9월 제51회 총회 제정
1980년 9월 제65회 총회 개정
1994년 9월 제79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유지관리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정관에 의하여 유지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회)

본 세칙에서 교회라 함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산하 각 노회와 각 지 교회 또는 교회에 소속된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교회 재산)

본 세칙에서 교회 재산이라 함은 교회당 및 그 부지 또는 교회가 소유하는 대지, 전, 답, 임야 등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 (관리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산하 각 노회 재산 관리자는 아래와 같다.

1. 총회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본 법인이 지정한다.
2. 각 노회가 사용하는 재산은 노회가 지정하여 본 법인의 인준을 받은 자.
3. 각 교회가 사용하는 재산은 해 당회가 지정하여 본 법인의 인준을 받은 자.
4. 기타 교회 소속 단체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단체가 지정하여 본 법인의 인준을 받은 자.

제5조 (등록)

본 총회 내 교회 재산은 본 법인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제6조 (절차)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그 소유 재산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등록 신청서(총회 양식) 1부

2. 당회 회의록과 공동의회 회의록
3. 재산의 등기부 등본(토지 및 건물)

제7조 (수속비용)

전조의 등록 비용은 해당 교회가 부담한다.

제8조 (기본재산 처리)

1. 본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은 총회 및 총회 산하 각 교회가 본 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총회 재산 : 총회의 보유재산
 - 2) 등록 재산 : 교회 등의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한 재산
2. 총회 재산의 처분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찬성과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등록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이 있을 때 본 법인은 처분 타당성을 살펴 재석 이사 3분의 2 찬성과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총회 재산을 임대할 때에는 임대 계약서를 첨부하여 총회 또는 실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처분 신청)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재산 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서(그 사유를 명기할 것)
2. 교회의 당회회의록
3. 교회의 공동의회 회의록
4. 노회동의서
5. 처분 계획서
6. 재산 감정서(매도, 증여, 교환)

제10조 (기채승인 신청)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본 법인에 등록된 총회 기본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서(사유를 명시)
2. 교회의 당회, 공동의회 회의록

3. 재산의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4. 금융기관의 확인서
5. 대출금 사용계획 및 상환계획서
6. 노화동의서

제11조 (보고)

각 교회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증감 이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본 법인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임원 선정)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 추천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1. 총회 공천 이사 11인 단, 유지재단에 재산이 등록된 자여야 한다.
2. 이사회가 추천한 2인
3. 총회 총무 1인
4. 국제협력선교동역자 이사 1인

제13조 (사무국)

사무국은 총회 본부 내에 둔다.

제14조 (직원)

1. 사무국에는 업무에 따라 사무국장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3. 부장과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서면 결의)

이사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과반수 이사가 정식 회의에 화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비용부담)

본 유지재단이나 당시 그 직위에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업무관련 각 소송의 비용을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7조 (개정)

이 운영세칙은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70년 9월 제55회 총회 제정
1980년 9월 제65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장학기금 관리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지도자 양성과 신학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장학 기금을 보존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 관리)

장학 기금은 총회 유지재단이사회가 관리한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

다음 장학금을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한 적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교역자 자녀 장학금(밀알장학금)
2. 한신대학생 장학금
3. 지도자 교육 장학금
4. 해외 유학 장학금
5. 동문 장학금

제4조 (자격)

1. 교역자 자녀 장학금(밀알장학금)

교역자 자녀 가운데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교역자라 함은 은퇴한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한신대학생 장학금

한신대학 재학생으로서 자격을 구비한 자는 한신대학생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격에 관한 규정은 한신대학이 작성하되 총회의 인준을 요한다.

3. 지도자 교육 장학금

교육자나 일반 교인으로서 교회 선교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해외유학 장학금

해외유학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학 후 귀국하여 교회의 생활과 선교를 위해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외유학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청원자는 해당 기관 혹은 관계자의 승인을 받은 학업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다.

5. 동문 장학금

한신대학교 이외 타 대학 신학과 재학생으로서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장학 금액)

장학 금액은 총회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선발 절차)

1. 교역자 자녀 장학금(밀알장학금)

교역자 자녀 장학금(밀알장학금)은 유재단이사회가 관리하며 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절차의 규정은 내규로 정하여 지급하되 매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한신대학생 장학금

한신대학교 교수회는 신학생 장학금을 받을 적격 후보자를 선발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

3. 지도자 교육 장학금

지도자 교육 장학금 청원서 접수와 선발 결정은 본 이사회가 직접 관리한다.

4. 해외 유학 장학금

해외 유학 장학생의 선발 의뢰가 있을 때 본 이사회는 청원서를 접수하고 적격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제공하는 관계 교회나 단체에 추천한다.

5. 동문 장학금

신학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으로서 동문 및 해당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심사 후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조 (기타)

1. 해외 유학 장학금 외의 각종 장학금의 액수와 인원수는 총회가 정한다.
2.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3. 총회본부는 총회에 매년 장학 상황 보고서를 제출한다.
4. 이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준한다.
5. 본 세칙의 개정은 총회 규칙 개정에 따른다.

제8조 (개정)

이 관리세칙은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관리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63년 제48회 총회 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선교기금 관리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본 교단의 선교정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업 자금의 조달 관리 및 기타 지원 방법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방법)

선교기금의 사용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본 기금 이익금의 일부를 총회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본 기금의 일부를 총회 선교사업을 위해 대여 사용케 할 수 있다. 단, 기금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활용 내용에 의한다.
3. 본 기금의 이익금 및 기금의 일부 대여 사용은 선교위원회 제청으로 실행위원회 결의에 의해 사용토록 한다.

제3조 (관리)

선교기금의 관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선교기금은 특별 회계로 하며 총회 유지재단이사회가 관리한다.
2. 기금 적립 방법은 총회 유지재단이사회가 정한다.
3. 유가증권 표기 명익는 총회 유지재단이사회의 이사장과 총회 총무로 한다.
4. 기금 상황을 연 1차 총회에 보고한다.

제4조 (대여금)

대여금 총액의 한도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제5조 (대여기간)

기금의 대여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금의 상환 의무를 이행 완료 시에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대여금 한도)

대여 한도액은 1 교회당 일금 3,000만 원으로 한다.

제7조 (대여의 취소)

1. 대여이율은 부과하지 않는다.
2. 대여의 취소

대출 결정을 한 후 서류 구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교회가 대출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그 대출을 취소한다.

제8조 (담보)

담보물의 제공은 부동산(교회당 또는 단체 명의의 재산 제외)의 근저당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해 노회 결의에 의해 노회장 명의의 지급 보증서로서 같음할 수 있다.

제9조 (대여교회 선정)

1. 총회본부는 총회 회보에 신청교회를 공고하고, 선교기금을 필요로 하는 교회는 노회를 경유하여 총회본부에 서류를 제출한다.
2. 접수된 서류는 총회 선교위원회가 심의, 선정하여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 (대여 대상 선정기준)

1. 노회 추천이 있어야 한다.
2. 취약 노회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3. 본 교단 교회가 없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4. 개척교회나 교역자생활비보조 수혜교회의 교회당 건축부지 및 신축 자금에 대해 대여 대상을 선정한다.

제11조 (위약)

대여를 받은 교회가 상환 기일에 원금을 상환치 않을 시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위약금을 납부하되 원금의 10%를 내야 한다.
2. 상환기일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상환치 않는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교회들은 선교기금 대여 선정교회에서 제외한다.
3. 상환기일을 3년 이상 경과할 시는 그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서 채무를 총회 상회비에 포함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정)

이 관리세칙은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관리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70년 9월 제55회 총회 제정
1973년 9월 제58회 총회 개정
1977년 9월 제62회 총회 개정
1981년 9월 제66회 총회 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통합 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교육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위원회라 한다.

제2조 (임무)

본 위원회는 총회의 교육정책 수립과 총회 교육국의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1. 총회 교육국과 교육위원회의 협의회를 실시한다.
2. 교회학교교사전국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규정에 따라 15인으로 조직한다.

1. 28개 노회를 아래와 같이 나누고, 순차적으로 2개 조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1) 서울북, 서울동, 강원, 대전광역시, 전북, 군산, 경남
 - 2) 서울, 서울남, 경기중부, 충남, 전북동, 전남, 대구
 - 3) 경기남, 인천, 충북, 목포, 광주남, 경북, 제주
 - 4) 경기, 경기북, 대전, 익산, 전남서, 광주, 부산
2. 각 노회별 1인과 여성위원 1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임기)

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첫 공천에서 년조를 나누어 공천한다. 임기는 총회 후 첫 정기회부터 기산한다.

제5조 (임원)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의 임원을 정기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소위)

본 위원회는 연구 및 업무의 효율과 편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목회자 계속교육 운영위원회)

목회자 계속교육 운영을 위하여

1. 교육기관 전문인 5인
(총회 총무, 총회 교육국 2인, 한신대 신학대학원장, 목회와신학연구소장)
2. 상임위원회 위원 5인
(교육위원회 3인, 양성평등위원회 1인, 영성수련원운영위원회 1인)
3. 현장 목회자 추천 5인(여성 2인 이상) 총 15인으로 구성된 계속교육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장 회 의

제8조 (회의)

본 위원회는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은 소집 7일 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결의)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개정 절차

제10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목회신학대학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대학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목회신학대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교단의 선교와 교역자수급 정책에 의거하여 목회자 양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교육목표)

목회자 양성 교육의 목표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목회환경의 변화와 선교의 다양화에 따른 목회자 양성
2. 복음전도자로서 영성 계발과 목회 능력의 전문화
3. 지역의 특성화와 전국 교회의 목회자 수급난 해소

제4조 (설치학교)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목회신학대학을 설치 운영한다.

1.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목회신학대학

제5조 (설치장소)

제4조의 설치학교를 총회 본부 및 교육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결의하여 지정한 곳에 둔다.

제6조 (운영)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목회신학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여 운영한다.

제7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규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8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위원회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및 감사

제9조 (재정)

대학(이하 “학교”라 한다)의 자산은 총회 지원금, 등록금, 수익사업, 후원금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재산의 관리)

재산의 관리는 위원회가 의결하여 처리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회계의 구분 및 집행)

회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일반회계 - 교육사업
2. 수익사업회계 - 수익사업

제12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예산·결산서의 제출)

위원회는 총회에 예산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감사)

총회는 학교 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는 총회 감사로 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항과 2항의 감사 결과, 문제점이 있을 때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3장 해 산

제16조 (해산)

학교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

학교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로 총회 본부에 귀속된다.

제4장 교직원

제18조 (학교의 장)

학교의 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9조 (교직원)

위원회는 교직원의 구성과 임면 등에 대해서 따로 법령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0조 (개정)

이 정관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승인을 받아 학칙 및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선교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선교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교단의 선교정책을 세우고 변천하는 상황에서 선교 과제를 협의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으로 효과적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데 있다.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에 의하여 15인을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1. 총회 안전심의부 선교부 부장
2. 신학자 1인
3. 목회자 3인(여성목회자 1인 이상 포함)
4. 도시빈민 목회자 1인
5. 농어촌 목회자 1인
6. 특수선교 목회자 1인
7. 여신도회 대표 2인
8. 남신도회 대표 2인
9. 부흥선교단 대표 1인
10.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후원협력교회협의회 대표 1인
11. 이주민선교운동본부 대표 1인

제4조 (회의)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조로 한다.

제6조 (임원)

본 위원회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1인, 서기 1인
2.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7조 (소위원회)

본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이 아닌 전문인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1987년 신앙선언, 교회선교, 사회선교, 교회교육정책”과 “교단 장기발전계획 지침서” 중의 교회 선교정책 설정 및 방향을 제시한다.
2. 오늘의 선교적 상황에 따른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3. 위원회 산하에 ‘총회 부흥선교단’을 두어 교회 개척 및 부흥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4. 위원회 산하에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후원협력교회협의회’를 두어 사업을 시행한다.
5. 위원회 산하에 ‘목회지원 소위원회’를 두어 교회개척을 위한 목회자 교육 훈련사업,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자립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6. 위원회 산하에 이주민선교운동본부를 두어 사업을 시행한다.
7. 총회 위임 사업과 기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한다.

제9조 (이주민선교운동본부)

1. 본 위원회는 부여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주민선교운동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운동본부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하여 운영하며 그 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2년 9월 제77회 총회 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이주민선교운동본부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주민선교운동본부(약칭 '기장이주민운동본부')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안에 두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곳에 둔다.

제3조 (목적)

가장 이주민선교운동본부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한국교회 목회현장의 변화 속에서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환대와 선교적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이주민과 그 가족 관련 정책 및 기타 연구·출판사업
2. 이주민 교회(기관)개척과 선교 사업
3. 이주민과 그 가족 관련 지원 사업
4. 이주민과 그 가족 관련 국내외교류 및 국제연대 사업
5. 이주민과 그 가족 관련 교육, 문화, 홍보 사업
6. 이주민선교를 위한 재정모금 사업
7. 이주민사역 전문사역자 양성 및 파송 지원 사업
8. 각 노회 이주민선교 관련부서 설치 및 지원 사업
9.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이나 교회 및 기관(단체)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며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조직 및 회의

제7조 (조직)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임원회, 사무국, 각 노회 이주민선교 관련부서를 상설하고, 특별위원회와 정책실, 전문위원(관련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자),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본 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할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조직은 총회 선교위원회에서 한다. 단 교단 총무 및 선교위원회 위원장과 각 노회 이주민선교 관련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운영위원회는 총 수 10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임원회의 요구로 열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 사업 계획 수립
 - 2) 결산 및 감사 보고
 - 3) 집행위원회 구성 및 임원회 선임
 - 4)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5) 특별위원회와 정책실의 구성

- 6) 회원의 허입과 징계 및 복권
- 7) 고문, 전문위원 및 지도위원 추대
- 8) 감사 선임
- 9) 각 노회 이주민선교 관련부서 설치 및 지원
- 10) 기타 주요 업무

제9조 (임원회)

임원회는 본 회의 사업과 활동을 관장하는 기구이며 임원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회계, 서기, 사무국장, 대외협력국장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공동대표는 7인으로 하고 총회 총무와 총회 선교위원회 위원장과 기장이주민선교 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공동대표가 되고, 4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여성 1인을 포함한다.
2. 집행위원장, 회계, 서기, 사무국장, 대외협력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본부의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과 전문직능을 고려하여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1.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
 - 2) 활동내용 평가와 신규 사업 제안
 - 3) 회원 확대를 위한 활동

제11조 (사무국)

사무국은 공동대표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사무국은 기장 총회 사무실 안에 두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곳에 둔다.

1. 사무국장은 기장이주민선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사무국장은 제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실무 간사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내규를 둘 수 있다. 단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하고, 본 회의 재정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재 정

제1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14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 수익금 및 총회 예산지원금, 기타 국내외 후원금으로 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및 준용(시행)

제15조 (개정)

본 회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총회 선교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총회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 규칙과 관례에 따른다.

국제협력선교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국제협력선교위원회라 한다.

제2조

본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교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제협력선교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국제협력교회와 선교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국제 에큐메니컬 선교 활동과 2, 3세계 선교협력을 위한 연대와 지원과 공동 증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문적인 인력 양성과 훈련을 통하여 국제협력선교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본 위원회는 17인(여성 위원 1인, 각 신도회 1인 포함)으로 조직하고 그 중 위원회 추천 전문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

노회가 파송한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총회 공천위원회 공천 확인 후 시작한다.
(임기 시작일 : 3월 정기노회는 4월에 임기 시작, 4월 정기노회는 5월에 임기 시작)

제5조

본 위원회는 정책 입안을 위한 전문위원과 재정 확보를 위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6조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1인

제7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임원 선임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사업 및 실행위원

제9조

1. 사업 : 본 위원회는 에큐메니컬 운동과 국제문제에 대한 책임적 참여를 위하여 활동하고, 국제협력 교단과의 에큐메니컬 협력사업, 노회간 교류의 확대와 국제협력선교 확대 및 국제협력선교 지원 프로젝트, 해외 한인 목회를 위한 협력과 지원, 선교동역자 파송에 따른 관리와 지원, 교육 및 훈련 업무, 장학프로그램, 국제협력 교단이 파송한 협동선교동역자들에 대한 관리 등 국제협력선교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위원회 업무와 사업의 전문화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실행위원을 두어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훈련센터

제10조

본 위원회는 부여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 선교 훈련프로그램,

외국어 훈련 프로그램을 주관, 운영하며 정책 수립과 정보수집, 국제 관계 및 국제 협력선교 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훈련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외협력선교동역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선교 권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11조

본 위원회의 재정은 총회의 일반 예산과 국제협력선교를 위한 특별 현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7장 개정 절차

제12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2년 9월 제76회 총회 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교회와사회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고 구속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 교회의 당면한 사회문제인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부문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해하는 제 원인을 찾아 성서적인 사이에서 바르게 선언하며 책임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천위원회 추천 9인(여성 1인 이상)
2. 위원회 추천 2인(전문인)
3. 기관 추천 4인 : 여신도회 2인, 남신도회 1인, 청년회 1인

제4조 (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단, 조직 당초의 임기에 한하여 반수는 2년, 반수는 4년으로 한다.

제3장 임원 및 임무

제5조 (임원)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1인

제6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 선정)

임원은 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로 선정한다.

제8조 (임원 임무)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3. 서기는 본 위원회 회의록과 기타 서류를 관리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 (회의)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단,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한다.

제5장 사업과 선언

제10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제2조에 의해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제반 사회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제11조 (사회선교사 임명·파송)

본 위원회는 효율적·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선교사를 임명·파송한다.

제12조 (대 사회적 선언)

본 위원회의 대 사회 선언은 기초적이고 장기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실행위원회를 거쳐 선포한다. 단, 시급한 시사성을 띠는 것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위원장 책임하에 발표하고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장 재 정

제13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 위원회의 예산과 유지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7장 개정 절차

제14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70년 9월 제56회 총회 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개정
1992년 9월 제77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2024년 2월 제108회 총회 실행위원회 개정

사회선교사운영위원회 시행세칙

제1장 사회선교사운영위원회

제1조 (목적)

사회선교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교단의 사회선교 정책을 따라 하나님의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JPIC)'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감당할 사회선교사를 발굴,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계획·집행한다.

1. 사회선교사의 선발과 파송
2. 사회선교사 관련 제반 교육·평가 프로그램 수립 및 집행
3. 사회선교사 지원을 위한 모금 및 기타 사업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서기)과 위원회 파송 위원 3인(전문인 1인 포함)
2. 총회 평화통일위원회 임원 2인(위원장, 서기)과 위원회 파송 위원 3인(전문인 1인 포함)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본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이며, 임기는 1년이고 정기회의에 선임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정기회)

본 위원회 정기회는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와 총회 평화·통일위원회의 정기회 후 개최한다.

제2장 사회선교사

제7조 (사회선교사)

1. 사회선교사는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교단의 파송을 받는다.
2. 사회선교사는 총회 및 노회에서 파송할 수 있다.
3. 사회선교사는 총회가 파송한 특수선교 기관 교역경력으로 인정한다.
4. 사회선교의 특수성을 따라 평신도 사회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제8조 (자격)

1. 목사, 준목, 전도사로서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신도의 경우,
 - 1) 무흠 입교인으로 3년을 경과한 자로서, 전문 분야의 경력이 있고, 당회장과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 2)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3. 노회의 추천을 받은 사회선교사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사회선교사가 될 수 있다.

제9조 (임기)

임기는 1년이며 위원회의 결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임무)

사회선교사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총회의 선교신학에 입각하여 대사회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한다.
2. 총회 사회선교의 주제를 교회와 노회 실정에 맞게 공론화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3. 교단의 공교회적 신앙고백과 대외적 에큐메니컬 선교정신 아래, 지교회 간, 교회와 기관 간, 교회와 사회단체 간의 연합사업을 도모하며, 다양한 선교사역을 수행한다.

제11조 (임무 부여)

사회선교사의 임무와 선교사역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의무)

사회선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평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3장 선발과 파송

제13조 (재정지원)

1. 운영위원회는 사회선교사에게 년 일정액을 활동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사회선교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총회 차원에서 모금을 할 수 있다.
3. 노회는 노회 파송 사회선교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선발과 파송)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와 평화·통일위원회 또는 노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발 파송한다.

제15조 (절차)

1. 지원자 서류 제출
 - 1) 지원서
 - 2) 당회장 추천서
 - 3) 노회장 또는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추천서
 - 4) 이력서
 - 5) 심리검사 결과서

2.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또는 평화-통일위원회 심의결과 및 추천결의 회의록(정기 회, 임시회)
3. 추천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본 위원회의 심사 후 선발한다.

제4장 교육 및 평가

제16조 (교육)

선발된 사회선교사는 본 위원회의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사회선교사는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집중교육 : 연 1회 집중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3. 주요내용 : 성서연구, 사회정세연구, 영성, 직무교육 등

제17조 (평가)

사회선교사는 분기 및 종합 활동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평가하여 계속 파송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 (회계연도 및 감사)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총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19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모금과 사업 수익금 및 총회 지원금,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제6장 개정 절차

제20조 (개정)

이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법규를 준용한다.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평화·통일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며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 공천 9인(여성 1인 이상)
2. 위원회 추천 2인
3. 기관 추천 4인 : 평화공동체운동본부 1인, 여신도회 1인, 남신도회 1인, 청년회 1인

제4조 (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3년조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5조 (임원)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서기 1인

제6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 선정)

임원은 정기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한다.

제4장 회 집

제8조 (화집)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한다.

제5장 사 업

제9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제2조에 의해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의 성취를 선교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를 위한 연구와 협의, 정책과 방향을 설정한다.

제10조 (사업실행)

본 위원회의 사업은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시행한다.

제11조 (화해와 평화의 집 운영)

본 위원회는 화해와 평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화해와 평화의 집을 운영한다.

제12조 (사회선교사 추천)

본 위원회는 효율적,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선교사를 추천한다.

제6장 재 정

제13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총회의 예산과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7장 개정 절차

제14조 (개정 절차)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를 준용한다.

1984년 9월 제69회 총회 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개정

2003년 9월 제88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2025년 5월 제109회 총회 실행위원회 개정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약칭 ‘기장평화운동본부’)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6·15 공동선언으로 새로워진 남북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며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
2. 북녘 동포 지원 사업
3.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지원 사업
4.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교류 사업
5. 한민족 평화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6.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이나 교회(단체)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며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조직 및 회의

제7조 (조직)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임원회, 사무국을 상설하고 특별위원회와 정책실,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본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할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조직은 총회 평화통일위원회에서 한다. 단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운영위원은 총 100명 내외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임원회의 요구로 열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 활동 계획
 -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집행위원회 구성 및 임원회 선임
 - 4) 특별위원회와 정책실의 구성
 - 5) 회원의 가입과 탈퇴
 - 6) 고문 및 지도위원 추대
 - 7) 감사 선임
 - 8) 기타 주요 업무

제9조 (임원회)

임원회는 본 회의 사업과 활동을 관장하는 기구이며 임원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회계, 서기, 사무국장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공동대표는 5인으로 하고 총회 총무와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공동대표가 되고, 3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여성 1인을 포함한다.
2. 집행위원장, 회계, 서기 및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본부의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과 전문직능을 고려하여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1.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
 - 2) 활동내용 평가와 신규 사업 제안.
 - 3) 회원 확대를 위한 활동.

제11조 (사무국)

사무국은 공동대표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사무국은 가장 총회 사무실 안에 둔다.

1. 사무국장은 제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실무 간사를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내규를 둘 수 있다. 단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재정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재 정

제1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 수익금 및 총회 지원금, 후원금으로 한다.

제5장 개정 절차

제15조 (개정)

이 시행세칙은 평화통일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법규를 준용한다.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제97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기후정의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기후정의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응해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신앙적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한다.

제2장 조직과 사업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 공천 9인(여성 1인 이상)
2. 위원회 추천 2인(신학자, 전문가)
3. 기관 추천 4인 : 여신도회 1인, 남신도회 1인, 청년회 1인,
생태공동체운동본부 1인

제4조 (임기)

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 (임원)

1. 본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사업)

1. 기후위기 대응과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창조신앙, 생태신학을 전파한다.

2. 기후위기 대응과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실천을 독려하고 생태선교를 수행한다.
3. 생태선교를 위한 목회자료, 예배자료,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생태감수성을 고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 (회의)

본 위원회는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은 소집 7일 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결의)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제9조

본 위원회는 부여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태공동체운동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운동본부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하여 운영하며 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개정 절차

제11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2월 제108회 총회 실행위원회 제정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약칭 '기장생태운동본부')라 한다.

제2조 (소재)

본부의 사무실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기장생태운동본부는 지구촌의 생태계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의 선교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교회와 지역사회의 환경의식을 일깨우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창조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 훈련사업
2. 환경주일(6월 첫째 주일) 예배와 설교자료 발간 사업
3. 교회(지교회, 사찰회, 노회)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선교활동을 계발하고 지원하는 사업
4. 한반도와 지구의 환경위기에 대처하는 사업
5. 본회의 목적에 따른 국내외 연대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회원은 본부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교회와 지역사회, 선교단체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본부가 주최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하고 본부가 제공하는 제반 정보와 자료를 받아 볼 권리를 갖는다.
2. 의무 : 본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7조 (회원의 날)

전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간 생태운동 활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활동을 위한 토론과 제안, 친교를 다지는 축제의 자리를 개최한다.

제3장 조직 및 회의

제8조 (조직)

본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국, 감사를 두고 특별위원회와 정책실,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본부의 최고의결기구로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상임대표 : 총회 기후정의위원장, 여성 1인, 전문인 1인, 목회자 1인 등 4인으로 구성한다.
2. 공동대표 : 지역과 전문 직능을 고려하여 30인 이하의 공동대표를 둔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책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 사업 계획 수립
 - 2) 결산 및 감사 보고
 - 3) 집행위원회 구성과 사무국장 선임

- 4) 특별위원회와 정책실의 구성
- 5) 회원의 가입과 징계 및 복권
- 6) 고문 및 지도위원 추대
- 7) 감사 선임
- 8) 기타 주요 업무
- 9)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관해 집행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진행한다.

제10조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본부의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과 전문직능을 고려하여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1.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 공동집행위원장 약간 명 선출.
 - 2)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
 - 3) 활동내용 평가와 신규 사업 제안.
 - 4) 회원 확대를 위한 활동.

제11조 (사무국)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가장 총회본부 안에 둔다.

1. 사무국장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되며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제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실무 간사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내규를 둘 수 있다. 단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2인으로 본회의 사업과 재정업무를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지역조직)

본부의 회원들이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지역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4조 (회계연도)

본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15조 (재정)

본부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 수익금 및 총회 지원금,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제5장 개정 절차

제16조 (개정)

이 시행세칙은 기후정의위원회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법규와 통상관례를 준용한다.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4년 2월 제108회 총회 실행위원회 개정

양성평등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창조하신 뜻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동역자 정신으로 교회와 가정, 사회 속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조직과 사업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 공천 10인(남성 5인, 여성 5인)
2. 위원회 추천 2인
3. 기관 추천 3인 : 여신도회 1인, 남신도회 1인, 청년회 1인

제4조 (임기)

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첫 공천에서 연조를 나누어 공천한다. 임기는 총회 후 첫 정기회부터 기산한다.

제5조 (임원)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의 임원을 정기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사업)

본 위원회는 양성 평등적 구조를 위한 연구와 지도력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 (회의)

본 위원회는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은 소집 7일 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결의)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개정 절차

제9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 선교사업의 일환인 총회연금사업을 관장하고 총회에서 위임하는 기독교 선교 및 사회봉사사업을 수행하며 총회 소속 교역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총회 연금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3조 (소재지)

1.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가입범위)

1. 총회에 소속한 지 교회와 선교기관 또는 연합기관에 근무하는 교역자
2. 국외에 파송되어 선교와 봉사의 직무에 유급으로 근무하는 교역자
3. 총회 처무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직원

제5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금 및 기금 관리 운용 사업
2. 기독교 선교 및 사회봉사사업
3. 후생 복지사업
4. 기타 전 각호에 수반되는 부대사업

제2장 임 원

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여성 1인 이상 포함)
2. 감사 2인

제7조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첫 임원의 반수는 임기의 반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를 거쳐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기 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총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는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에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호에 규정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결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전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이 경우 임시진행은 이사 중 최고 연장자로 한다.
4.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3조 (상임이사의 선임과 직무)

1. 총회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서 상임이사를 겸임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업무를 관장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치 않을 때에는 총회와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그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 의견진술하는 일

제3장 이사회

제15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4)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5) 재산 취득, 처분 및 보유 관리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7)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 8)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 9)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6조 (이사회 개최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회 의결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재산 처분을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7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8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2월과 10월에 소집한다.
3.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가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 소집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본 정관 제14조 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전항의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회의록)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
2. 장소
3. 참석위원 명단
4. 결의사항

제21조 (서면결의)

이사장이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 의결 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재적 이사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2조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재산은 이 법인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

제23조 (재산관리)

1. 기본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금기금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내에 기금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24조 (운영비)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 비용은 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연도 세계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26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예산 편성)

이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9조 (회계 처리 방법)

이 법인의 회계 처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 회계 처리 원칙과 총회 재정 회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재무제표 작성)

이사장은 6월 말과 12월 말 현재로 다음의 서류와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잉여금 처분 계산서 (결손금 처리 계산서)
4. 동 부속 명세서

제5장 해 산

제31조 (해산)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결된 후 총회 산하의 법인이나 재단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출하되 총회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33조 (사무국 설치)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직원 약간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4.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사무국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6. 직원의 정년과 보수 등 인사관리는 총회 사무처 처무 규정에 준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 (사업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 결산서는 주

무 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공고)

이 법인의 공고 사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회보에 공고한다.

제36조 (개정)

이 정관은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의결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이하 법인) 정관에 의하여 연금 기금의 관리 운용과 정년, 병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교역(실무)을 은퇴하는 가입자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연금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입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선정)

임원의 선정은 다음에 의한다.

1. 노회를 감안하여 추천하는 이사 10인
2. 연금 운용 또는 유사 직무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자 4인
3. 총회 총무 1인
4.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5. 임원은 가입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호 및 4호의 임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6. 임원은 총회 공찬에 의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단, 노회별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장 자격 취득과 상실

제3조 (가입대상)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소속한 지 교회 또는 관계 기관이나 국외에 파송되어 선교와 봉사의 직무에 유급으로 실무하는 교역자와, 총회 처무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직원으로 한다.

제4조 (가입자격과 취득시기)

1. 총회 산하 지교회 또는 기관에서 시무하는 교역자는 의무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 등록하여야 한다.
 - 1) 연금 가입 신청서
 - 2) 추천서 (노회장 또는 기관장 발행)
 - 3) 등록카드
 - 4) 주민등록등본
2. 연금 가입자격은 연금가입일 현재 민법상 만 55세 이하인 자로서 소속 노회장(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재단이 인정하는 날에 자격이 부여된다.
3. 가입이 허락되어 자격이 부여된 자에게는 연금 가입 증서를 교부한다.
4. 연금가입자의 자격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의무와 자격 제한)

1. 총회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 기관의 목사(부목사, 준목, 전도사 포함), 장로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단, 연금가입 자격이 상실된 자는 예외로 한다).
 - 1) 총회의 모든 위원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 2) 노회의 모든 피선거권(총회 총대 포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신고)

가입자가 시무처 이동이나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가입자와 관계기관이 지체 없이 법인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에 가입 자격을 상실한다.

1. 가입자가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금을 납부치 않을 때에는 연금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2. 타 교단으로 이전하거나 직장을 이전했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해 노회나 총회에서 징계로 인하여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국적을 상실한 때, 단 해외협력선교동역자 중 총회가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5.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환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금액은 제33조 환불금 지불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8조 (자격의 중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등의 신청에 따라 그 자격이 중단된다.

1. 불구, 폐질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2. 사무처 이동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간접 손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9조 (자격의 회복)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중단되었던 자가 자격회복 허가와 납입금을 납부하기 시작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3장 기여금 및 부담금

제10조 (기여금)

기여금이라 함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여 금액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준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한다.

제11조 (부담금)

부담금이라함은 가입자가 속한 교회 또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부담금액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준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한다.

제12조 (납입금)

1. 재단은 이 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교회 및 소속 기관으로부터 납입금을 받는다.
2. 납입금은 제11조의 기여금과 제12조의 부담금으로 하며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매월 납입해야 한다.

제13조 (납입금 할인)

연간 납입금을 매년 1월 중에 전액을 선납할 경우 연간 납입할 금액의 100분의 1.5

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제14조 (납입금 연체료 부과)

1. 가입자는 제11조 기여금과 제12조 부담금의 당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2. 단 국외에 파송된 가입자(해외협력선교동역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의 납입금은 당 해연도분에 한하여 당해연도 말일까지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연체이자율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율로 한다.

제15조 (기준 봉급액 책정 및 단계승급)

1. 기준 봉급액의 증감 기준은 이사회가 매년 물가 변동율을 감안하여 책정하며 전년도 통계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2. 주 계약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1단계는 기준 봉급액의 50%로 산정한 금액이다.
 - 2) 2단계는 기본단계로, 기준 봉급액의 100%로 산정한 금액이다.
3. 1단계인 주 계약 가입자의 경우 재직기간 중 2단계로 변경할 수 있다.
4. 1단계 가입자가 2단계로의 단계 변경을 원할 경우 단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하여 2단계로 변경한다.

제16조 (납입기간의 제한)

1. 가입자의 납입 기간이 35년이 된 때에는 이후의 납입금을 제한한다.
2. 1항에 의한 납입금 제한기간에 대하여는 연금지급 계산에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4장 재직기간

제17조 (재직기간)

재직기간은 본 연금 제도에 가입한 날이 속한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달이 속하는 달까지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을 말하며, 미납기간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액에서 공제한다.

제18조 (사무 교회 이동 등)

사무 교회 (또는 기관)의 이동 또는 휴직, 기타의 사정으로 연금 기여금 및 부담금이 미납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미불입된 월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 혹은 분납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불입하여야 할 기여금과 부담금의 액수의 기준은 미불입된 해당연도의 불입액에다 연체 이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미불입 개월 수에 해당되는 기여금과 부담금의 합계 금액과 소정의 연체금을 퇴직 시에 일괄 계산하여 연금 혹은 일시금에서 공제한다.

제19조 (휴직기간)

병으로 일시 휴직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의해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을 떠나 있을 경우, 또는 무급 휴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 동안 기여금 및 부담금의 불입이 면제되며 재직 기간에도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20조 (소급 불입)

다음의 경우는 소급 불입하여 재직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1. 가입 후 세칙 제8조 (자격의 중단) 및 제9조 (자격의 회복)의 규정에 따라 불입이 중단되어 20년에 미달하는 사람은 그 중단기간에 한하여
2. 1994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 중 은퇴 시까지 불입해도 20년이 부족한 자, 1994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중 은퇴 시까지 불입해도 15년이 부족한 자에게는 그 부족한 기간에 한하여 소급할 수 있으며 목사 안수일까지 소급할 수 있다.
3. 불입금의 산정은 소급불입 대상기간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불입원금에 연체 이율을 가산한 원리금 합계액으로 한다.

제5장 급 여

제21조 (급여의 종류)

이 세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

재직기간 20년 이상 된 가입자가 65세 이상으로 은퇴한 때에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 단 1994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중 15년 이상 납입하고 65세 이상 은퇴한 자에게는 20년이 미납되어도 연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2. 퇴직 일시금

1항에 해당되는 가입자가 일시불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

3. 퇴직공제 일시금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자가 초과된 연수에 대한 금액을 일시불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

4. 퇴직환급금

재직기간이 5년 미만으로 퇴직하는 가입자에게 재직 연수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

5. 퇴직환급 일시금

재직 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퇴직하는 가입자에게 재직 연수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

6. 장애연금

가입자가 연금 가입 후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시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때 지급

7. 유족연금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

8. 사망 일시금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일시불로 지급

9. 유족 위로금

가입 후 의무를 이행하는 중이거나 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였을 때에 유족에게 지급

10. 연금수급 개시 연령별 연금 연차 적용

만 70세 이전의 은퇴자에게 연금수급 개시 연령별 연차적용표(제35조)에 근거하여 연금을 지급

11. 연금장기수급자 연차 적용

최초 연금지급 후 일정 시기 이상의 연금수급자에게 장기수급자 연차비용표(제 36조)에 근거하여 연금을 지급

제22조 (급여의 신청)

퇴직급여 청구 시 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사회로 신청해야 한다.

- 1) 급여(연금) 지급 신청서
- 2) 퇴직증명서(노회장 또는 기관장 발행)
- 3)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발행)
- 4) 노회 회의록 사본
- 5) 통장 사본
- 6) 연금 수급자는 매년 1월 말까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발행)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금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3조 (장애연금, 장애연금일시금 신청서류)

장애급여 청구시 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 1) 급여(연금) 지급신청서
- 2) 장애 퇴직증명서(노회장 또는 기관장 발행)
- 3) 장애진단서(장애등급 기입)
- 4) 소속 노회장의 의견서, 단 본인이 파장애인일 경우 동일 노회 소속의 부노회장(목사, 장로)의 의견서

제24조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위로금 신청서류)

유족급여 청구 시 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 1) 급여(연금) 지급 신청서
- 2) 사망진단서 (병원 발행)
- 3) 혼인관계증명서(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5조 (급여의 결정)

1. 이사회는 급여(연금)지급 신청서의 접수사항을 확인 후 지급을 결정한다.
2.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정당 수급권자에게 급여(연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26조 (기본 급여액)

기본 급여액이란 가입자가 20년 불입 후 지급받는 급여액을 말한다.

제27조 (급여액의 산정)

1. 급여액의 산출은 당해연도의 기준 봉급액을 산정 기초로 한다.
2. 모든 급여의 지급 또는 납입금의 계산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급여의 지급)

1. 급여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 까지 지급한다.
2. 1항의 지급하여야 할 사유는 소속 교회의 은퇴 후 급여 중단과 노회의 은퇴 결의를 말한다.
3. 지급되는 월 급여는 그달 1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이 될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4. 1항의 연금지급 대상자 중 노회 은퇴 결의가 있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연금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 연금수급 개시 연령별 연차적용에 따라 적용된다.

제6장 각 급여지급 사유 및 지급기준

제29조 (퇴직 환급금)

1. 연금가입 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시 지급한다.
2. 지급액은 기 납입한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 (퇴직환급 일시금)

1. 연금가입 후 납입금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 후 퇴직 시 지급한다.
2. 지급계산은 기 납입한 기여금 및 부담금 합계액과 이사회에서 정한 이자액을 합

산하여 지급한다.

3. 연체이자 납입분에 대하여는 환급하지 않는다.

제31조 (퇴직 일시금)

1. 정년으로 퇴직하는 분이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2. 지급계산은 기 납입한 기여금 및 부담금 합계액과 이사회에서 정한 이자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32조 (사망 일시금)

1. 연금가입 후 10년 미만 사망 시에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2. 지급계산은 기 납입한 기여금 및 부담금 합계액과 이사회에서 정한 이자율로 한다.

제33조 (환불)

가입자가 연금 가입 후 의무를 이행하던 중 제8조 자격상실과 제43조 중도해약에 의한 가입탈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환불금을 지급한다.

1.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 개인기여금만 지급
2. 가입기간이 3년 이상 7년 미만일 경우 : 납입금액의 50%
3. 가입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 납입금액의 80%
4.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 납입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5. 제43조 4항 5호 중도해약의 경우 납입금액의 100%를 은퇴시 지급한다.
6. 제7조 2항 타 교단으로의 이전과, 3항 노회나 총회에서 면직 처분받을 경우는 개인기여금 원금만 지급한다.

제34조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지불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가 연금가입 후 20년 이상 재직하고 65세 이상으로 퇴직할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퇴직연금을 지불한다. 퇴직연금의 산정은 재직기간의 매 1년에 대하여 기준봉급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다음의 경우는 퇴직 연금 일시금을 지급한다.
 - 1) 연금 가입 후 20년 이상 재직하고 55세 미만으로 퇴직할 경우
 - 2)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원하는 경우

- 3) 퇴직 연금 일시금의 계산은 제31조의 퇴직일시금 지불 원칙에 준용한다.
3. 연금 가입 후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기준 봉급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불한다.
 - 1) 연금 가입 후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직 공제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퇴직 공제 일시금의 계산은 일시금 지불 원칙에 준한다.
4. 1994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중 퇴직 시까지 연금을 납입하여도 20년을 납부할 수 없는 가입자에게는 다음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자격
1994년 1월 1일 이후 연금에 가입하고 15년 이상 연금을 납입한 교역자
 - 2) 재직기간의 산정기준
가입자가 연금 가입 후 15년 이상 재직하고 65세 이상으로 퇴직할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퇴직 연금을 지불한다.
 - 3) 지급금액의 산정기준
퇴직연금의 산정은 재직기간의 매 1년에 대하여 기준 봉급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5조 (연금수급 개시 연령별 연금 연차적용)

1. 연금지급은 은퇴 연령별로 다음과 같이 연차적용하여 승급 없이 고정 지급한다.
2. 연금수급 개시 연령별 연차적용표(3%씩 감액)

퇴직연령	퇴직연금 연차적용비율
65세	퇴직연금액의 85%
66세	퇴직연금액의 88%
67세	퇴직연금액의 91%
68세	퇴직연금액의 94%
69세	퇴직연금액의 97%
70세	퇴직연금액의 100%

제36조 (연금 장기수급자 연차적용)

1. 연금 장기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을 연차적용하여 지급한다. 연차적용은 최초 연금지급일로 부터 11년차 부터 15년까지 수령금액의 10% 감액하고 16년

차 부터 5% 추가 감액하여 사망시까지 지급한다.

2. 연금 장기수급자 연차 적용표

퇴직연령	퇴직후 10년까지	퇴직후 15년까지	퇴직후 16년이상
65세	퇴직연금액의 85%	퇴직연금액의 75%	퇴직연금액의 70%
66세	퇴직연금액의 88%	퇴직연금액의 78%	퇴직연금액의 73%
67세	퇴직연금액의 91%	퇴직연금액의 81%	퇴직연금액의 76%
68세	퇴직연금액의 94%	퇴직연금액의 84%	퇴직연금액의 79%
69세	퇴직연금액의 97%	퇴직연금액의 87%	퇴직연금액의 82%
70세	퇴직연금액의 100%	퇴직연금액의 90%	퇴직연금액의 85%

제37조 (급여의 제한)

1. 연금수급자가 은퇴 후 다시 유급교역자로 봉직할 경우에는 연금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된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은퇴 후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그 기간은 총회가 정한 만 70세 정년까지로 한다.
2. 연금수급권자가 소속한 노회와 총회에서 치리회의 최종결정으로 제명(면직)이 확정된 자는 연금지급을 중지하며, 환불 처리한다.
3. 총회 소속에서 이탈한 자는 환불 처리한다.
4. 환불금 지급계산은 연금으로 납부한 총 납부액과 연금 급여로 지급한 총 지급액을 상계하여 잔액이 있을 경우 그 잔액에 이사회서 정한 이율을 합산하여 환불 처리한다.

제38조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지불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중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시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2. 장애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제23조에 의거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장애등급 기준
 - 1) 장애등급 기준은 부칙 제44조의 장애등급표에 의한다.
 - 2) 1)항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 3) 기타 이사회에서 1)항과 2)항에 근거하여 장애를 인정한 경우
4. 장애연금의 계산

- 1) 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연금과 동일한 금액
- 2) 10년 이상 재직자는 기준봉급액의 100분의 3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 3) 10년 미만 재직자는 제30조에 준용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39조 (유족연금)

1. 퇴직연금 수익자가 사망 후 정당 유족 생존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 정당 유족 지급순서
 - 1) 사망자의 배우자 (단, 지급 시점 재혼의 경우 제외)
 - 2) 사망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지급 시점 출생 및 입양한 자녀 제외)
 - 3) 사망자의 만 60세 이상의 부모
3. 지급기준은 지급사유 발생 시 정당 유족 생존 시 매월 퇴직연금의 50%를 지급한다.
4. 연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납입하고 사망할 경우에는 유가족 의사결정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기준은 제34조 퇴직연금 지급 기준에 준용하여 지급하며, 일시금으로 받기 원할 때에는 제32조 사망일시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5. 부부가 모두 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액에 배우자 수령연금의 25%를 추가로 지급한다.

제40조 (유족위로금)

1. 다음의 경우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
 - 2) 연금수익자가 사망하였을 때.
 - 3) 유족위로금 지급 계산은 기본급여액의 1개월분으로 한다. 단 유족연금 수익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41조 (미지급 또는 과지급 급여의 처리)

1.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 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명의로 그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

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환수 또는 정산한다.

제42조 (중도해약)

재직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약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청구서류
 - 1) 연금 환불 청구서
 - 2) 중도해약 사유서
 - 3) 노회장(또는 기관장) 확인서
2. 중도해약 환불금 규정은 제34조 환불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3. 중도해약 환불금 지급은 이사회의 심의 승인 후 지급해야 한다.
4. 중도해약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전도사준목목사직을 사임하였을 때
 - 2) 해외로 이주하였을 때
 - 3) 타 교단으로 이관하였을 때
 - 4) 총회 처무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직원이 사직하였을 때
 - 5) 1~4항 외 중도해약신청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은퇴시 지급한다.

제43조 (대출)

연금가입자가 교역(실무)에 시무하고 있는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청구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1. 대여할 수 있는 자금
 - 1) 자녀의 장학금
 - 2) 신병 치료를 위한 비용
 - 3) 기타 가정 형편상 소요되는 비용
2. 대여기간 : 1년~3년
3. 대여금액 : 연금으로 납입한 금액의 40% 한도 내
4. 대여이율 : 당시 은행 대출 금리를 감안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이율
5. 이자 계산방법

- 1) 이자는 대출원금에 연리, 일수를 곱한 후 이를 평년, 윤년에도 불구하고 365를 나누어 산출한다.
- 2) 이자 계산단위는 10원 단위로 하고 산출된 이자금액의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6. 상환방법

매 1년 마다 이자 불입, 만기 도달 시 원리금 전액 상환(희망에 따라 분할 상환도 가함)

7. 연체이자

- 1) 대출금의 약정 기일 또는 이자납입기일에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자 납입기일의 다음 달부터 입금 당일까지 연체이자 4%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 2) 대출기간 만기 후 1년 이상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납입금을 대출금의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때 상계할 납입금은 최종 납입한 연금 납입금부터 처리하며 상계된 금액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3) 2)항에 근거 상계처리하여도 납입금보다 채권액이 많을 경우 본인에게 통보 후 이사회 결의로 결손처리 할 수 있다.

8. 기간연장

연체 없이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에게는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기간연장 시에는 대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별지 서식으로 한다.

9. 제출 서류

- 1) 대여 신청서
- 2) 인감 증명서
- 3) 보증서(교회 재정부장, 기관 경리 책임자, 부담금까지 대출 시 첨부)
- 4) 확인서(노회장, 기관장, 부담금까지 대출 시 첨부)

제7장 장애연금 등급기준 및 특약가입 약관

제44조 (장애등급표)

1. 1급

-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된 자
-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게 장애를 입은 자
-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게 장애를 입은 자
- 4) 두 팔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자
- 5) 두 다리 발목 관절 이상을 잃은 자
- 6) 위의 1내지 5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항상 개호를 하여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7)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항상 개호 또는 감시를 해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8)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체의 기능 또는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항상 감시 또는 개호하여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2급

-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로 감퇴된 자
- 2)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감퇴된 자
- 3) 씹기 또는 언어의 기능을 잃은 자
- 4) 척추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를 입은 자
- 5) 한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자
- 6) 한 다리의 발목 관절 이상을 잃은 자
-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게 장애를 입은 자
- 8)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게 장애를 입은 자
-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잃었거나 전혀 쓸 수 없게 장애를 입은 자
- 10) 양쪽의 리스후랑관절 이상을 잃은 자
- 11) 위의 1 내지 10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시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12) 정신에 시무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13)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신체의 기능 또는 정신신경계통에 시무의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3. 3급

-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접하여 큰 소리로 말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3) 씹기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입은 자
- 4) 척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입은 자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게 된 자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게 된 자
- 7) 한 손의 엄지와 시지를 잃은 자이거나 엄지와 시지를 합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자
- 8) 한 손의 엄지와 시지를 합하여 네 손가락 이상을 쓸 수 없는 자
- 9) 한발의 리수후랑관절 이상을 잃은 자
- 10) 양쪽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는 자
- 11) 위의 1에서 10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12) 정신 또는 신경 계통이 시무에 있어서 심한 장애를 받든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13)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며 신체의 기능과 정신 신경계통이 시무에 있어서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5조 (특약가입)

연금가입자의 퇴직 후 연금수급액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추가납입계약 제도(이하 '특약'이라 함)를 신설하고 다음의 약관에 의하여 특약의 가입을 권장한다.

〈특별연금 추가납입 약관〉

1. 특약의 가입 및 절차와 계약의 소멸

- 1) 특약은 총회 연금가입자(이하 ‘주 계약’)에 한하여 정상적으로 연금을 납입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특약연금은 주계약을 가입하지 않고는 불입할 수 없다.
- 2) 특약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약정서에 서명하면 연금재단이사회가 심사하고 승인하는 절차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다.
- 3) 주 계약 연금의 중도해약이나 퇴직, 사망 등의 지급 규정에 의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특약 조건도 함께 소멸된다.

2. 특약의 계약기간 및 기간연장

- 1) 특약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 2) 2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가입자의 원에 의하여 매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3. 기준 봉급액 산정, 계약 및 납입액

- 1) 기준 봉급액은 운영세칙 제15조(기준 봉급액)에 의하며, 특약의 계약은 반드시 주 계약 가입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주 계약의 기준 봉급액에 의한 동일한 요율로 산정한다.
- 2) 특약의 납입액은 다음과 같다.
 - (1) 3단계는, 주 계약자가 기본단계(주 계약 2단계)의 50%를 추가 납입하는 조건으로 2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매 2년마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4단계는, 주 계약자가 기본단계(주 계약 2단계)의 100%를 추가 납입하는 조건으로 2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매 2년 마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분	단계	불입금액
특약	3(0.5)	기준봉급액 기준의 당해연도 불입금의 50% 추가 납입
	4(1.0)	기준봉급액 기준의 당해연도 불입금의 100% 추가 납입

- 3) 특약조건의 부담금은 가입자와 소속 교회(기관)의 형편에 의한다.

4. 특약에 의한 납입금 환불

- 1)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중단되며, 납입금을 환불한다.
 - (1) 운영세칙 제7조(자격의상실)에 의거 자격이 상실된 자
 - (2) 특약 납입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
 - (3) 주 계약을 중도 해약한 자
 - (4) 주 계약 규정(세칙 제30조, 31조, 32조, 33조, 34조, 35조, 36조, 39조)에 의거 퇴직연금,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환급일시금을 수급하였거나 치리에 의해 제명(면직)되어 환불 처리된 자
- 2) 특약이 해약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 (1) 청구서류 : 특약환불신청서
 - (2) 환불액 : 납입금액의 90%
 - (3) 위약금 : 납입금액의 10%

5. 특약연금 청구 및 구비서류

운영세칙 제34조(퇴직연금)에 의거 퇴직연금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특약연금도 함께 신청되는 것으로 같음되며, 구비서류는 운영세칙 제22조(급여의 신청)에 의한다.

6. 특약연금 산정 및 지급

- 1) 특약연금의 산정은 운영세칙 제34조(퇴직연금) 제1항에 의거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의 기준 봉급액으로 산정한다.
- 2) 특약연금은 납입기간 1년당 3%를 지급한다
- 3) 특약연금은 퇴직연금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7. 특약분의 일시금 지급, 재가입의 제한

- 1) 퇴직자가 특약분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세칙 제31조(퇴직일시금) 규정에 의한다.
- 2) 퇴직자가 20년 재직 후 연금수령을 퇴직일시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특약연금도 당연히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3) 특약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4항 제2호의 기준에 의거 환불하며, 특약계약의 해지 후 재가입은 해약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8장 개정 절차

제46조 (개정)

이 운영세칙은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연금 관계 서류는 소정 양식과 같다.

1977년 9월 제62회 총회 제정
1982년 9월 제67회 총회 개정
1984년 9월 제69회 총회 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재단 설립 및 정관 제정
1991년 9월 제76회 총회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3년 9월 제88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제97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제109회 총회 개정

신도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신도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신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남신도회, 여신도회,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함께 연대하여 공동선교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그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아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 공천 6인(목사 3인)
2. 총회 신도부장
3. 각 신도회 대표 2인

제4조 (임기)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위원은 3년조로 하고 당연직은 1년으로 한다.

제5조 (임원)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 1인, 서기 1인

제6조 (회집)

본 위원회는 총회 후 첫 번째 회를 정기회로 모이고 위원장이 필요를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조 (임무)

1. 각 신도회 정책 개발
2. 각 신도회 협의회 개최

제8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3년 9월 제78회 총회 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재정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재정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총회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기획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룩하는 데 있다.

제3조 (위원)

본 위원회 위원은 15인으로 하되, 총회 공천 12인(여성 1인 이상), 총회 회계, 부회계, 재정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조로 한다.

제4조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둔다.

제5조 (회집)

본 위원회는 총회 후 첫 번째 회의를 정기회로 모이고 위원장이 필요할 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로 소집한다.

제6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2. 예비비의 사용과 항목 조정 및 변경을 심의하여 결의한다.
3. 총회의 전반적인 재정 정책을 수립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4. 총회 직원의 보수와 관련된 총회 임금세칙(내규)을 개정, 관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결의)

본 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3년 9월 제78회 총회 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활보장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교역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목회 사명에 충실하도록 돕는다.
2. 교역자의 도시 밀집화 경향을 막고 농어촌 취약 지구에까지 고루 교역자를 수급하도록 돕는다.
3. 산업 선교 및 특수선교 분야를 개발 또는 지원하는 일을 돕는다.
4. 지역 간의 격차, 교회 간의 격차를 가급적 좁혀 균형 있는 교회 발전과 교역자 간의 유대를 도와 성숙한 선교 공동체를 이룬다.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여성 위원 1인과 각 노회 대표 1인으로 조직하되 노회 생활보장제위원으로 구성하며, 노회로부터 문서접수 후 위원 자격을 갖는다.

제4조 (임원)

본 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1인

제5조 (임무)

본 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생활보장제 운영을 위한 재원 또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생활비 보조 조정 및 지급 대상자 심사 결정

제6조 (회의)

1. 본 위원회는 3월과 10월에 정기회로 모인다.

2.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본 위원회의 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며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재원형성)

본 교단 총회 생활보장제 부담금 재원은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

1. 본 교단 총회 모든 지 교회는 해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 준목, 부목사, 전도사의 십일조의 50%를 의무적으로 총회에 납부한다.
2. 총회 산하기관은 해 기관에 시무하는 목사, 준목, 전도사의 봉급 실수령액의 5%를 의무적으로 총회에 납부한다.
3. 타 기관에서 시무하는 본 교단 목사, 준목, 전도사는 사례비의 5%를 본인이 의무적으로 총회에 납부한다.
4. 특수선교 분야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및 사회선교사는 사례비(활동비)의 5%를 본인이 의무적으로 총회에 납부한다.

제8조 (지급 방안)

1. 본 위원회는 매년 파악한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재원 형성에 따른 생활비 보조 및 시행세칙을 결정한 후 노회에 통보한다.
2. 노회 위원회에서는 생활비 보조 대상자를 심사한 후 심사 확인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상 교회 생활비 차액표를 작성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이때 노회 위원회는 심사 및 추천을 위하여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는 노회 위원회의 보고와 청원에 기초하여 심사한 후 대상자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매월 중순에 지급한다.
4. 단독 목회하는 목사, 준목, 전도사의 이동 시에는 노회의 교역자 변경 보고에 따라 동일 교회 후임 교역자에게 지급한다.
5. 지급기간은 당해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6. 총회 생활보장제 부담금 의무이행자가 무임이 되었을 경우, 이를 노회가 총회에 무임을 보고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6개월) 동안 최저 생활보장제 혜택을 줄 수 있다.

제9조 (심사기준)

생활 보장제의 재원은 지교회 혹은 기관의 목사, 준목, 전도사들의 생보 부담금에 의존한 것으로 제한된 재원이므로 지급 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둔다.

1. 생활비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회(단독 목회하는 목사, 준목, 전도사)는 생활비 보조의 70%(배분비는 본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당해 교회(또는 기관)가 부담할 수 있는 교회(또는 기관)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본 위원회가 심사하여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 1) 농어촌 취약 지구 미자립교회에서 단독 목회하는 목사, 준목, 전도사
 - 2) 개척 교회에서 단독 목회하는 목사, 준목, 전도사
 - 3) 특수 선교 분야에서 시무하는 목사, 준목, 전도사 및 사회선교사
2. 본 교단 총회 산하 모든 지 교회는 소정의 교역자 생활비 실태보고서 및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예산서를 매년 1월 말까지 노회 생활보장제위원회(이하 노회 위원장)에 정확하게 보고한다.
3. 노회 위원회는 노회 산하 모든 지 교회 교역자 생활비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2월 중순까지 본 위원회에 보낸다.

제10조 (생활보장제 지급자 관리)

생활보장제 지급 대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보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교회나 교역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생활비 보조액을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에 반환한다.

제11조 (재정)

1. 생활보장제도의 재정은 생활보장제 부담금과 기타 현금으로 충당한다.
2. 본 위원회의 사업비는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생활보장제 부담금은 원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제정은 제12조를 준용한다.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은급위원회 규정과 생활보장제운영위원회의 규정을 통합 개정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과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 정관으로 분리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2003년 9월 제88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무임교역자 생활보장제 지급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제89회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교역자가 시무하는 교회나 기관을 사임하고 무임이 되었을 때, 총회 생활보장제한금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본 지원금의 관리는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가 관리한다.

제3조 (지급조건)

1.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교역자가 교회를 사임하고 무임으로 있을 때.
2. 기관목사로 시무하는 교역자가 기관을 사임하고 무임으로 있을 때.

제4조 (지급방법)

1. 제3조에 의해 무임이 된 교역자가 총회에서 시행하는 생활보장제한금을 3년 이상 의무적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2.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에서 심사규정에 의하여 심사하여 생활보장제 지급원칙에 의해 지급한다.
3. 무임교역자로 생활보장제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임 후 1년 안에 수급신청을 해야 한다.

제5조 (기간)

무임이 된 교역자는 제6조에 의해 지급하되, 무임기간 동안 다른 기관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교역자에 한해서 6개월까지 지급한다. 단, 무임교역자 생보 지급 후 12개월 안에 2번 이상 무임이 된 교역자의 경우에는 무임교역자 생보 지급을 총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6조 (지급운영)

1. 무임교역자 생활보장제 지급은 매월 집계하여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무임교역자 생활보장제 지급 대상자는 노회 생활보장제위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노회 생활보장제위원장은 이를 매월 집계하여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에 추천하며,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에서는 제4조(지급방법)에 의해 지급한다.
3. 무임교역자 확인은 노회 생활보장제위원장이 노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매월 집계표에 첨부하여 보고한다.

제7조 (개정)

이 시행세칙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년 6월 제89회 총회 실행위원회 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총회장, 부총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총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 총회의 능률적인 회무 진행을 도우려는 데 있다.

제3조 (조직)

본 위원회의 위원은 11인(여성 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직전 총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공천위원회에서 해당 총회 목사 회원 5인, 장로 회원 5인을 공천한다.

제4조 (위원 공천)

본 위원회 위원은 타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본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으로 한다.

제6조 (임기)

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2분의 1씩을 교체한다.

제7조 (공지)

본 위원회는 선거에 임하여 총회의 경과사항을 보고하며, 투표 전에 투개표 요령과 방법을 총회원에게 알린다.

제8조 (재량)

본 위원회는 제반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원회는 선거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1991년 9월 제76회 총회 개정
1993년 9월 제78회 총회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의 목적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에서 선거 운영과 관리를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다.

제2조 (조직)

임원은 첫 번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제3조 (회의)

첫 번 회의 소집은 첫 기명자가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시 소집하며 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위원은 타 위원에게 위원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4조 (후보자 등록)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총무 후보자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총무 후보자는 노회의 추천을 받아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등록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으로 추가등록자를 결정하고, 추가등록자도 없을 경우에는 총회규칙 제3장 8조 2항을 준용한다.
2. 부총회장 후보자는 총회 내의 이사 및 위원직을 사임하고, 총회총무 후보자 중 총회내의 임명직에 있는 자는 모든 공직을 사임하고 등록한다.
3.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총무 후보자는 선거 공영 업무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등록금과 운영경비를 납부해야 하며, 그 액수는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
4. 임기 중 정년에 해당될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5조 (후보자 등록공고)

위원장은 등록된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총무 후보자의 성명, 연령, 소속 노회, 직분, 경력과 총회 규칙에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총회 회보와 선거 홍보물 및 총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 (후보자 정책토론회)

1.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총무 후보의 정책토론회를 권역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2. 시기, 횟수,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한다.

제7조 (후보자 소개)

후보자 소개는 소속 노회 총대 중 1인이 하며 그 시간은 3분으로 한다. 소개 순서는 기호 추첨하여 정한다.

제8조 (후보자 소견발표)

각 후보자는 3분 이내의 소견 발표를 한다.

제9조 (투표방법)

총회 선거는 전자투표와 용지투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1.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본 시행세칙 제10조, 제11조를 준용한다.
2. 용지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본 시행세칙 제12조-19조를 준용한다.

제10조 (표결방법)

1. 표결은 다른 방법에 의한 표결을 의결하지 않는 한 전자투표 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한다.
2. 투표 진행 과정에서 기기의 고장,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전체 총대원에 대해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토록 한다.

제11조 (표결 진행 및 처리)

1.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위원장의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위원이 동석하여 시행한다.
2. 투표 시작은 위원장의 투표 선포로 시작된다.
3. 투표종료는 위원장의 선포로 종료되고, 종료 선포까지 마지막 누른 것이 결과로 처리된다.
4. 투표종료 선포까지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출석인원 포함 후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12조 (투표지)

1. 총회장은 백색지, 부총회장 중 목사는 황색지, 장로는 분홍색지, 총무는 청색지로 한다.
2. 전 1항의 투표지 모두를 배부하고 기표하여 투표함에 같이 넣는다.

제13조 (기표소 및 투표함)

기표소는 6개소 이상, 투표함은 3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제14조 (유효 및 무효표 판정)

유효표는 원하는 후보 한 명을 무기명 비밀투표하는 것으로 하고, 무효표는 일반 조례에 준하여 본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 (투·개표위원)

투·개표위원은 각 노회 서기로 하며, 서기가 총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노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개표는 본 위원회가 한다.

제16조 (검표위원)

검표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 5명을 선정하여 검표케 한다.

제17조 (투표함 관리)

투표함 관리는 본 위원회가 한다.

제18조 (당선선언)

개표 결과는 위원장이 확인, 보고한 후 총회장이 선언한다.

제19조 (투표용지 보관)

투표용지는 구별 정리하여 1년간 위원회가 별도 보관한다.

제20조 (재검표)

투·개표 결과, 착오가 지적되어 재검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위원회는 즉시 재검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21조 (후보자 및 유권자 규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본 위원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주의, 경고, 1~3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 (규제조치)

경고 이상의 결정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총회 회보에 공고한다.

제23조 (규제사항)

본 위원회가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선거 공고 전 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향응제공
2.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숙박 및 교통 편의 제공 등
3. 총회, 노회, 기타 단체에 대한 이례적인 기부 행위
4. 본 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공청회(정책토론회) 외의 일체의 집회 방문 및 대리인 참석
5.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제24조 (불법으로 당선된 자에 대한 처리)

규정을 어기고 당선된 자는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 무효 됨을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재판국에 회부한다.

제25조 (신고)

불법행위의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일지라도 근거를 제시하여 신고하면 조사 처리해야 하고, 신고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재량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제26조 (개정)

이 세칙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0년 9월 제85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공천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공천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총회에서 맡겨진 공천 사무만을 전담한다.
2. 총회 폐회 기간 중 생긴 결원은 본 위원회가 보선한다.
3. 총회 폐회 기간 중 생긴 긴급한 인선 공천도 본 위원회가 한다.

제3조 (조직과 임원)

본 위원회는 각 노회가 다년간 총회 총대로 피선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 1인(비 총대도 가함)과 여성 1인을 포함하여 조직한다. 목사, 장로 동수를 원칙으로 한다. 임원은 아래와 같다.

위원장 1인, 서기 1인

제4조 (회의)

1. 본 위원회는 총회 2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정기회로 모이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로 수시 소집한다.
2.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 개회 중에도 그 임무 수행상 회집할 수 있고 위원은 총회 당연직 언권위원 이 된다.

제5조 (공천업무)

1. 공천업무는 지역과 기능을 참작하여 공천 기준을 세우고 공천한다.
2. 공천업무는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회 총대 수를 참작하여 공천한다.
3. 각 상임위원회는 여성 1인 이상 공천한다. 단 노회별 1인 공천하는 위원회는 여성전문위원 1인을 공천위원회가 추가 공천한다.
4. 각 노회에서 파송되는 공천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는 업무만 맡을 수 있으며 기존의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5. 공천된 인선은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총회 폐회 기간 중 공천된 인선은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정기 공천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 안전심의부 부원
 - 2) 총회 사업부서 및 각 위원회 위원과 이사
 - 3)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임시위원
 - 4) 총회가 공천 위임한 기타 위원
7. 공천업무 시행세칙을 별도로 둔다.

제6조 (임기)

1. 공천위원회 임기는 노회에서 선임한 첫 공천위원회 정기회로부터 2년 후 공천위원회 정기회 직전까지로 하되, 매년 2분의 1씩 목사는 장로로, 장로는 목사로 교체한다.
2. 노회 공천위원이 결원되었을 시에는 해 노회가 보선하고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다.

제7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77년 9월 제62회 총회 제정
1984년 9월 제69회 총회 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총회 공천업무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총회 공천위원회 규정에 따른 공천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천업무)

1. 공천업무는 지역과 기능을 참작하여 공천 규정을 살펴 공천한다.
2. 공천업무는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회 총대 수를 참작하여 공천한다.
3. 정기 공천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 안전심의부 부원
 - 2) 총회 사업부서 및 각 위원회 위원과 이사
 - 3)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임시위원
 - 4) 총회가 공천 위임한 기타 위원

제3조 (공천 자격)

1. 총회의 위원 공천 대상은 목사, 장로를 원칙으로 하나, 특수분야에는 목사, 장로가 아니어도 위원이 될 수 있다.
2.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대원이 아니어도 공천될 수 있다. 단, 무임목사는 공천에서 제외된다.

제4조 (공천 기준)

1. 총회 상임위원회 및 대외연합기관 위원 공천은 1회 연임까지 가능하고, 3선일 경우에는 공천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계속 공천할 수 있다.
2. 동일 위원회 내의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위원과 위원회 추천위원의 근속기간은 연임으로 간주한다.
3. 위원회 추천위원 공천은 총회 전에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공천위원회에 공천을 요청한다.
4. 위원회 추천위원은 총회 공천업무 법규에 의거 추천한다.
5. 위원회 추천위원 인원은 2인 이하로 한다.

6. 공천은 대내, 대외 1인 1부서 원칙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위원회는 겸직하여 적임자를 공천할 수 있다.
 - 1) 헌법위원회
 - 2) 재판국
 - 3) 선거관리위원회
 -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7. 한신학원 이사회의 이사 공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신학원 이사 공천은 후보자의 이력서를 받고 공천한다.
 - 2) 한신학원 이사는 이사회 추천이사, 개방형 추천이사를 포함하여 1노회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공천 배제사항)

1. 일방적 수혜자와 규정에 있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위원회 및 이사회 공천을 배제한다.
2. 생활보장제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교역자와 교회(장로)는 공천에서 배제한다. 단 교역자가 결석인 교회의 장로는 생활보장제 의무금을 내지 않아도 공천될 수 있다.

제6조 (공천 결원보선사항)

1. 대내외 위원 및 이사가 사임하거나 정년이 되었을 경우 사임 처리하고 보선은 전 임자의 잔여 임기를 명시하여 후임자를 공천한다.
2. 총회 상임위원회 위원 중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위원을 변경할 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사임서를 받아야 하며 해 노회의 공천위원의 권한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잔여 임기 동안 공천될 경우 초선에 해당되며 재공천될 경우 연임에 해당된다.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천될 수 없으며, 공천되었다 하더라도 공천위원회가 사임처리 할 수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은 공천과정 또는 공천 후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형을 선고받은 자
6. 형법에 의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 (준용)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결의 및 공천위원회 결의로 정한 공천기준에 따른다.

제9조 (개정)

이 세칙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총회 역사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역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 교회 및 총회와 관련된 역사유적, 유물, 인물, 문화유산을 지정, 관리, 보존하고 총회 역사자료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위원회)

본 위원회는 4년조 12인(여성 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10인은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고 2인은 위원회 추천으로 한다. 단 위원회 추천위원 2인은 역사 전문인으로 한다.

제4조 (분과위원)

본 위원회는 역사 유적, 유물, 인물, 문화유산의 종별에 따라 이를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그 분야에 따라 분과위원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가 선정한다.

1. 유적유물 분과위원 : 유형·무형의 유적, 유물에 대해 심의한다.
2. 인물선정 분과위원 : 한국 교회의 신앙 전승과 총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심의한다.
3. 문화유산 분과위원 : 기타 문화유산에 대해 심의한다.

제5조 (총회 역사자료관 운영)

본 위원회 총회 역사자료관을 총회총무 책임 하에 운영하며 운영세칙을 별도로 둔다.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

1.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서기 1인
2.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 후 첫 회의를 정기회로 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4장 회 의

제7조 (회의)

1. 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분과위원 : 필요에 따라 분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심의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장 재 정

제8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총회의 일반 예산과 기부금 및 현금으로 한다.

제6장 개정 절차

제9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법규 및 통상 관례를 준용한다.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총회 역사유적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 교회 및 총회와 관련된 역사유적, 유물, 인물 등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역사유적 지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적·유물·인물·문화유산에 대한 정의)

1. 유적

- 1)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신앙상, 역사상 가치가 큰 장소 및 건축물
- 2) 산, 들, 도시, 농촌, 섬, 동굴 등 역사적 신앙운동이 발생한 장소, 사람들이 거주한 장소로서 기념물 제단 등 신앙 유물이 있는 곳
- 3)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 신앙인물이 득도한 곳 또는 신앙 수련장소
- 4) 고분(무덤) 등 향토유적
- 5) 지명(고 지명과 현대 지명)
- 6) 종교의식이 거행된 의미있는 곳

2. 유물

신앙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 사료적 가치가 큰 물질적 자료

- 1) 비문, 제단, 금석문
- 2) 유물(신앙인의 필적), 사경, 고필, 주련
- 3) 판본류, 활자본류, 한글서적, 한문서적 등 종교, 신앙 관련 기록, 저술, 고문 및 전적
- 4) 제기, 향로, 성찬기, 조각품, 그릇, 제사예배 도구, 법복, 성의, 고퇴
- 5) 인물, 가족, 정당, 조합, 기관(교단 관련), 학교, 단체에 관련된 유형적 자료
- 6) 교단, 노회, 개 교회 관련 서류, 세례인 명부, 공동의회록, 노회록, 총회록 등 원자료

3. 인물 및 단체

- 1) 한국 교회에 공헌한 역사적 인물
- 2) 교단을 창립하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자
- 3) 역사적 인물과 현존 인물로 구분한다.
- 4) 인물과 인물, 인물과 단체, 인물과 시대적 배경으로 구분 기념한다.
- 5) 역사적 인물평가의 기준으로는 종교적, 신앙적 인물로서 다음 사항에 관련된 자
 - (1)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자
 - (2) 항일 독립 운동가(민족해방)
 - (3) 통일 운동가(민족통일)
 - (4) 사회봉사 운동가(사회봉사)
 - (5) 민주화 운동가(자유인권수호)
 - (6) 국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공직자)
 - (7) 민족을 위기에서 극복한 자(군인)
 - (8) 국민적 자각 계몽에 힘쓴 자(민중계몽)
 - (9) 사회경제에 큰 발전을 끼친 자(기업인)
 - (10) 시민운동으로 사회민중을 대표한 자(시민운동)
 - (11) 문화, 예술 발전에 공헌한 자(예술가)
 - (12) 지역사회 권익수호에 공헌한 자(향토 운동가)
 - (13) 교회설립에 큰 공로자
 - (14) 전도활동 및 세계선교에 기여한 자
 - (15) 교회, 민족, 지역 발전에 헌신한 자
- 6) 인물 규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영역별 인물 선정 기준
 - ① 종교활동(신앙)
 - ② 정치, 사회, 문화, 의료, 교육활동, 향토발전
 - ③ 교단과 관계 깊은 외국인(국제협력선교동역자)
 - (2) 시대적 상징적 인물
 - ① 그 시대의 특징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
 - ②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 ③ 한 시대의 전환점에서 그 시대의 변천 발전에 이바지한 자
 - ④ 한 지역 선교와 교회발전에 이바지한 자

- ⑤ 그 시대의 사건에 주역으로 활동한 자
- ⑥ 인류, 민족, 사회, 지역의 평화와 행복에 이바지한 자
- ⑦ 외국인으로 가장 교단에 헌신한 자와 단체

제2장 지정 역사 유적·유물·인물·문화유산

제1절 지정 및 고시

제3조 (한국 교회 및 총회 유적·유물·인물의 지정)

1. 총회는 총회 역사위원회가 심의 지정한 한국 교회 역사 유적·유물·인물·문화유산을 국가 지정 문화유산, 도 지정 문화유산,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추천하며, 이것을 또한 총회 역사 유적·유물·인물·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문화유산 지정 신청은 각 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심의하고 그 문화유산의 가치에 따라 국가, 시, 도에 추천하며, 총회에서 인정하는 역사 유적·유물·인물·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총회 역사 유적·유물·인물·문화유산의 지정)

총회는 총회 역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노회에서 추천된 유형 문화유산, 무형 문화유산, 사적지 및 기념물, 신앙생활 자료 등 중요한 것들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각 노회의 지정)

노회는 총회 역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각 교회에서 추천된 문화유산을 총회에 추천하며 노회에서 중요 역사 유적·유물 및 신앙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각 교회의 지정)

교회는 총회 역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각 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 역사 유적·유물 및 신앙자료 등을 총회와 노회에 추천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7조 (유적 및 유물의 지정)

총회는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문화유산을 총회의 유적 및 유물로 지정하고 그 지정 문화유산을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총회는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을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총회 회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해당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서 등의 교부 및 지정의 효력 발생시기)

1. 지정서 등의 교부

총회는 국가도시 지정 문화유산, 총화노화교회의 문화유산을 지정 결정한 후에는 그 당해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2. 지정의 효력 발생시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회보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1. 총회는 지정 문화유산이 지정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총회 역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문화유산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 보유자로서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면 총회 역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유적유물의 등급과 구분)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 문화유산에 대하여는 국가의 문화재법 또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을 부치거나 구분할 수 있다.

제12조 (가 지정)

문화유산으로서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총회 역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총회가 노회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중요 문화유산으로 가 지정할 수 있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13조 (관리방법의 지시)

총회는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총회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당해 문화유산을 성실하게 관리 보호해야 한다.

제15조 (관리)

1.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가 지방 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을 지정하여 당해 문화유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총회, 노회, 교회에 의한 관리

총회는 국가, 도, 시, 총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또는 가지정된 문화유산에 대하여 화재 또는 훼손 멸실 등의 예방 기타 그 보존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 총회, 노회, 교회 등에 의뢰하여 그 안정 보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수리

지정 문화유산의 수리는 그 관리단체가 하여야 한다.

4. 기록 작성

지정 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을 작성 보존토록 한다.

제16조 (허가사항)

1.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는 총회의 승인 없이 반출, 모사 또는 모조할 수 없다.
2. 지정 무형 문화유산을 녹음, 촬영하거나 악보, 대본을 제작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정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17조 (반출 등의 금지)

문화유산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해외 전시, 교류를 목적으로 할 때는 총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18조 (허가취소)

총회는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위반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관리 등의 위탁 또는 기술지도)

1.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또는 수리를 총회, 노회 또는 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총회는 관리 또는 수리를 위탁받았을 때에 문화유산의 관리 또는 수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하여 총회장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행정명령)

총회는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상황이 그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

2. 관리자의 선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를 해임케 하거나 변경케 하는 명령

제21조 (양도제한)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그 지정 문화유산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국가, 사회단체에 우선적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제22조 (신고사항)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다음 여러 사항의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총회의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총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
2.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을 때
3. 지정 문화유산의 소재지, 지명, 지번 등의 변경이 있었을 때
4. 보관 장소가 변경하였을 때
5. 멸실, 도난, 훼손되었을 때
6. 반출 하거나 반입하였을 때
7. 촬영, 모사, 모조하거나 녹음 제작을 완료하였을 때
8. 현상 변경 조치를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9. 매도하고자 할 때
10. 보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23조 (보조금)

지정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비를 국고 또는 도비, 시비, 총회에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며, 공사의 경우에는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제24조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5조 (손실보상)

국가관리, 총회관리로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국가 또는 총회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제26조 (경비부담)

국가, 총회, 지방 공공단체는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구역 내에 있는 지정 문화유산에 대하여 그 관리 보호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상의 규정은 가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공 개

제28조 (공개)

총회 역사유적유물인물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부동산에 속하는 유적유물 지정 문화유산의 공개)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총회의 명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산에 속하는 유적유물 지정 문화유산의 공개)

지정 문화유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공개하여야 한다. 전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주최 기관은 노회, 총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총회노회교회 중요 유적유물의 공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여 신앙교육과 선교사업의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공개비용)

지정 문화유산의 출품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 또는 총회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 (급여금 및 보상금)

지정 문화유산을 출품하였을 때에는 총회는 그들에게 급여금을 지급하며, 멸실 파손 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지정 문화유산의 출품과 공개는 반드시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관람료의 징수)

1.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단체는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관람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총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절 조 사

제35조 (보고장수)

총회는 지정 문화유산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로부터 지정 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환경 보존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 (직권에 의한 조사)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원으로 하여금 지정 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환경 보존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바 먼저 관리단체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제37조(조사요청)

지정 문화유산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의 경우는 기관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조사원의 신분)

조사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준용)

가지정 문화유산의 경우도 조사의 경우는 이에 준용한다.

제3장 개정 절차

제40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총회 역사자료관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운영세칙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역사자료관(이하 “역사자료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역사자료관은 총회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활용한다.

1. 총회 모든 기록물, 교단 대외해의 관계 기록물, 총회 산하기관 중요 기록물, 노회 중요 기록물 및 발간된 교회사 등을 수집 보존하며 정보를 제공한다.
2. 총회가 소장한 기록물을 홍보 전시한다.
3. 총회가 지정한 유적교회, 유물, 인물, 문화유산 등의 자료를 관리 보존한다.
4. 주제별로 역사 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학술행사 등을 통해 교단역사 정립을 위해 노력한다.
5. 산하기관 및 노회, 교회의 역사편찬을 지원한다.

제3조 (기록물에 관한 직무)

역사자료관은 총회의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회 내 모든 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을 수집 및 이관받아 보존관리한다.
2. 기록물의 보존관리 방안을 연구개발한다.
3. 소장 기록물의 열람 편의 제공 및 전시 활동을 한다.
4. 총회본부 및 산하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 교육한다.
5. 기타 총회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 (조직)

1. 역사자료관은 관장 1인, 실장 1인, 실무자 1인 이상을 두되 관장은 총회총무가 당연직으로, 실장은 선교사업국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2. 역사자료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회본부 소속으로 전문 인력과 기타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 (역사자료관 기록관리 소위원회)

총회 역사자료관 기록관리 소위원회(이하 “기록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본부 및 산하기관의 기록물을 수집, 관리하고 총회 역사위원회에 보고한다.

1. 기록관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회총무(관장)로 하며 위원은 총회본부 국부장과 산하기관장으로 한다.
2. 총회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기록관리 소위원회는 기록물의 수집, 보존, 공개, 교육, 이관,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운 영

제6조 (역사자료관 수집 및 협조)

1. 역사자료관장은 각 행정부서의 기록물 중 영구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수집 또는 열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총회 내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은 해당 기관에서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역사자료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각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이 총회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역사자료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 기록물 중 단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역사자료관에서 지속적으로 수집 활동을 전개하여 기증받거나 구입할 수 있다.

제7조 (정리 및 보존)

역사자료관장은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수집된 역사기록물의 정리 및 보존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이를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

제8조 (이용 및 열람)

1. 역사자료관의 개폐 시간은 총회본부 처무 규정에 따른다.
2. 역사자료관의 기록물 열람은 비공개 대상 기록물을 제외하고, 역사자료관장의 허락을 받아 교단 신도 및 일반인 등이 열람할 수 있다. 단,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람 신청을 해야 한다.
3. 역사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은 관외 대출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필요 시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관내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4. 기록물 보존서고는 폐가식으로 운영하며,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5. 역사자료관은 전산으로 소장목록을 작성, 비치하는 등 이용자에게 열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 및 행사)

역사자료관은 필요시 소장기록물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기획개최할 수 있고, 관련 행사 등을 주관할 수 있다.

제4장 개정 절차**제10조 (개정)**

이 운영세칙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노회록검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노회록검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위원회는 총회 산하 전 노회의 노회록 검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이 위원회의 위원은 여성 1인 이상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되,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제4조 (임기)

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조로 한다.

제5조 (임원)

이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으로 한다.

제6조 (임무)

이 위원회는 총회 산하 모든 노회의 노회록을 검사 원칙에 따라 매년 6월에 검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경과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한 여부
2. 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처리한 여부(서식, 절차 등)
3. 사실을 지혜롭고 공정하며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제7조 (회의)

이 위원회는 총회 후 첫 번째 회의를 정기회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노회록검사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노회록검사위원회 규정 안에서 노회록 검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노회록 작성)

1. 노회 회기 표기와 구분은 아래와 같다.
 - 1) 정기노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〇〇〇 노회 제〇〇회 정기노회 회의록
 - 2) 임시노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〇〇〇 노회 제〇〇회 〇〇차 임시노회 회의록
 - 3) 노회 회기는 개회하여 폐회 시까지로 한다.
 - 4) 긴급노회는 임시노회에 해당한다.
2. 회원명부는 정회원부터 기록하고, 회원명단에 소속교회, 주소를 기재한다.
3. 모든 이름 앞 또는 뒤에 직분을 넣어 기록한다.
4. 모든 명칭은 헌법과 교회 행정서식에 준한다.
5. 교회 용어는 총회 권장용어[제94회 총회 회의록(2009년) 169쪽~172쪽]를 사용한다.
6. 성경구절을 기록할 경우 성경은 약어를 표기하지 말고 전체 명칭을 기록한다.
7. 외국어 표기는 한국 명칭을 쓰고 괄호 안에 외국어 명칭을 기록한다. 단, 한국어로 표기할 수 없는 명칭은 외국어로 쓸 수 있다.
8. 총회 수의 안건은 반드시 투표해야 하고, 제목과 내용, 표결사항(찬성, 반대, 무효)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수의 안건의 분량이 많을 경우 첨부할 수 있다.
9. 현의안건 기록은 보고 내용(제안설명)을 이어서 기록한다.
10. 현의와 청원 건을 기록할 때에는 정치서식에 준하여 제출자 명의로 기록한다.
11. 결의사항은 법적으로 하자 없이 결의한 여부를 확인한다.
12. 회의 결의나 보고내용을 별첨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별첨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별첨자료를 반드시 첨부한다.
13.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적색 중선을 긋고 날인하며, 몇 자 정정했음을 기록한다.

14. 타 노회에서의 이명은 ‘○○노회장 ○○○목사가 ○○○목사를 본 노회로 이명 청원의 건’이라 기록한다.
15. 담임(전도)목사 청빙은 청빙서 서식에 따라 ‘○○노회 목사 ○○○씨’로 기록한다.
16. 전도목사 계속 시무 관련 절차와 회의록은 『헌법』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2.와 「정치리치총람집」2.목사 1)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 (3)전도목사 [5]에 따라 ‘전도목사 계속 시무 보고’가 아니라 ‘전도목사 계속 시무 청원’이므로 대리당회장이 청원하여 처리하고 기록한다.
17. 부목사 계속시무보고의 건은 처음 청빙 때는 허락이고, 1년 후 계속 시무는 ‘반다’로 기록한다.
(『헌법』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4.부목사)
18. 폐회 시 ‘~의 기도로’라고 표기하지 않고, ‘~의 기도 후’로 기록한다.
19. 모든 회의 끝에는 ○년, ○월, ○일, ○시간을 기록하고, 회장과 서기가 반드시 서명 날인한다.
20. 서명 날인은 반드시 폐회예배 후에 한다.

제3조 (노회록 검사)

1. 노회 서기는 노회록 검사를 위해 가편집본(스프링제본) 1권을 제출한다.
2. 1차 노회록 검사는 반드시 노회 서기가 직접 참여하여 받는다.
3. 1차 노회록 검사를 받고 수정 보완사항을 수정한 노회는 전자문서형식(PDF)으로 노회록을 제출하고, 해당 검사위원이 2차 노회록 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 (노회록 제작)

1. 노회록에 쪽 수를 기록하되, 양면 인쇄할 경우 오른쪽을 홀수 쪽으로 한다.
2. 노회록 크기는 A4로 통일한다.(권장사항)
3. 노회록이 단행본(회기별로 나뉜 책)일 경우에는 일시 장소를 겉표지에 기입하고, 합본(여러 회기를 한권으로 묶은 책)일 경우에는 각 회기마다 표지(색으로 구분)를 붙여서 일시와 장소를 기입한다.(권장사항)
4. 회의록과 보고서가 분리되어 기록되었을 경우에는 별첨을 표시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권장사항)
5. 노회록은 영구보관용이므로 최종 완결된 노회록은 하드커버로 제작하여 2권을 제출한다.

6. 제출한 하드커버 제작본은 위원회가 검사필하여 1부는 총회 역사자료관 보관용으로 보관하고, 1부는 노회보관용으로 노회에 송부한다.

제5조 (개정)

이 시행세칙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관할하에서 한국 기독교 교역자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국가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3.〉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신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한신대학교
2. 영생고등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에 둔다.

〈개정 2013. 5. 20.〉

제5조 (정관의 변경)

- ①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0. 15., 2013. 5. 20.〉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0.〉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8. 1. 11.>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및 수익 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2022. 5. 26.>
-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로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개정 2022. 5. 26.>

제10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예산 결산의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4조 (임원의 자격과 종류 및 구성)

이 법인에서 임원의 자격과 정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8. 1. 11.〉

- ① 임원의 자격은 본 교단의 목사와 장로로 하되 이사회 추천이사 중 재정기여 이사는 세례교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공인회계사인 감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 10. 15., 2011. 10. 24., 2014. 7. 3., 2022. 5. 26.〉

- ②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7인 [이사회 추천이사 2인(재정기여 이사 1인, 여성이사 1인), 이사장 포함]

〈개정 2017. 8. 23., 2017. 10. 23., 2019. 3. 14., 2019. 10. 28., 2019. 11. 14., 2020. 3. 26., 2020. 6. 29., 2022. 12. 5., 2024. 4. 26., 2024. 12. 19., 2025. 2. 27.〉

2) 감사 2인

③ 이사의 구성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 8. 23., 2017. 10. 23.〉

제15조 (개방이사와 감사의 자격 및 선임)

① 개방이사는 본 교단의 목사와 장로로 한다. 〈개정 2008. 10. 15.〉

② 삭제 〈2008. 1. 11.〉

③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나 개방감사의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1.〉

④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 2배수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8. 1. 11.〉

⑤ 이사회는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소요정수를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개정 2008. 1. 11., 2016. 3. 4., 2016. 8. 5. 2022. 5. 26.〉

⑥ 삭제 〈2008. 1. 11.〉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신설 2020. 11. 30.〉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장이었던 사람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단,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에서 선임한 뒤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개정 2016. 3. 4., 2016. 8. 5., 2021. 8. 26., 2022. 5. 26.〉
- ②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는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총회가 추천한 임원이 이사로 재임 중 추천근거지 노회로부터 타 노회로 이명 전출 시에는 전 노회 소속교회 사무를 사임한 날로부터 본 이사회 임원직도 자동 사임한 것으로 한다.
- ⑥ 삭제 〈2008. 1. 11.〉
- ⑦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임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제18조 (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로 하며,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에 준용한다. 〈개정 2008. 1. 11.〉
-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⑦ 1. 〈개정 2022. 5. 26.〉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② 1. <개정 2022. 5. 26.>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② 1. <개정 2022. 5. 26.>

제19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개정 2025. 2. 27.>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의 임기가 이사 임기를 도과할 시 이
사장의 잔여 임기만큼 이사 임기를 연장한다. <개정 2024. 4. 26., 2025. 2. 27.>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④ 이사장의 선임은 인사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2. 5. 26.>

제20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
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총괄한다.

제21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개정 2022. 5. 26.>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
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 (임원의 겸직 금지)

-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4조 (이사회 의 구성 및 기능)

-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3. 29.>
 1.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와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이사장 1인, 서기 1인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이사회 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 및 이사회가 구성하는 모든 위원회는 이사 및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 및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7. 3., 개정 2022. 5. 26., 2024.12.19.〉

제26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의견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7조 (이사회 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이사회 소집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2.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2. 5. 26.〉

제29조 (이사회 회의록 공개)

-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30.>
-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11.>

제4장 수익사업

제30조 (수익사업의 종류)

1. 부동산 임대업
2. 조림사업
3. 부대사업
4. 교육사업 <개정 2021. 3. 29.>

제31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신영림을 경영한다.
<개정 2021. 3. 29., 2024.12.19.>

제32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0조의 수익사업체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20., 2021. 3. 29.>

1. 한신영림 : • 경남 거제시 아주동
 - 경남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제33조 (관리인)

- ① 제30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3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15.>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경우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동의를 받아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8. 10. 15.>

제36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경우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15.>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용

제37조 (기본 자격과 임용)

-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한다. 다만, 기독교

교 정신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4. 26.>

- ②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③ 총장의 자격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목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1. 3. 29., 2022. 5. 26., 2024. 4. 26.>
- ④ 한신대학교 총장과 영생고등학교 교장의 선임은 인사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개정 2021. 3. 29., 2022. 5. 26.>
- ⑤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⑥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뒤 이사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와 대학의 장의 제청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0., 2015. 8. 6.>

1. 근무기간

-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나. 부교수 : 6년 이내의 기간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다. 조교수 : 4년 이내의 기간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정관 제47조로 정하는 보수

3. 근무조건 : 교수 시간 및 소속학과(학부)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수업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⑦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14. 7. 3.>
- ⑧ 고등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임용한 뒤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2. 5. 26.>
- ⑨ 제2항과 제6항 및 제8항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경우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⑩ 신학대학원장의 자격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목사로서, 교육경험이 있는 자

라야 한다. <개정 2008. 10. 15.>

- ⑪ 신학대학원장은 신학대학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8. 10. 15., 2022. 5. 26., 2024. 4. 26., 2024. 12. 19.>

- ⑫ 신학대학원장의 임기는 4년 단임제로 하고, 정년은 교원 정년까지로 한다.

<개정 2008. 10. 15., 2024. 4. 26., 2024. 12. 19.>

- ⑬ 이사회에서 선임된 신학대학원장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 10. 15.>

- ⑭ 본교의 교원으로서, 총장에 취임하는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즉시 취임 전 소속학과와 교원으로 복귀한다. <개정 2008. 10. 15.>

- ⑮ 본교의 교원으로서 교장에 취임한 자가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고등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 교사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 ⑯ 위 15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원로교사로 우대한다. <신설 2024. 12. 19.>

제38조 (정년)

- ① 교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총장 외의 대학 교원 65세
2. 고등학교 교원 62세

- ② 교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38조의2 (교원정원관리) <삭제 2018. 12. 14.>

제39조 (기간제교원)

-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40조 (명예퇴직 및 수당)

- ① 고등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수당지급신청기간, 수당지급방법, 수당지급일, 수당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규정을 준용한다.
- ③ 대학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1조 (강사, 겸임, 초빙 교원)

- ① 대학교육기관은 필요에 따라 제37조 제6항의 교원 이외의 강사, 겸임, 초빙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5., 2015. 8. 6., 2019. 6. 28., 2024. 4. 26.〉
- ② 강사, 겸임, 초빙교원 등의 자격과 임용, 정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0. 15., 2015. 8. 6., 2019. 6. 28., 2024. 4. 26.〉

제2관 신분보장

제42조 (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6.〉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 10. 24.〉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전신,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개정 2011. 10. 24.〉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개정 2022. 5. 26.>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개정 2007. 1. 11., 2013. 5. 20.>
-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22. 5. 26.>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개정 2008. 10. 15., 2022. 5. 26.>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신설 2018. 2. 13., 2018. 5. 14.>

제43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8. 6.>
2. 제4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5. 제4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8. 6.>
6. 제42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으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5., 2015. 8. 6., 2019. 6. 28.>

7. 제4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8. 6.>
8. 제4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30.>
9. 제4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8. 6.>
10. 제4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11. 제4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8. 2. 13.>

제44조 (휴직교원의 신분)

- ① 휴직중인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2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④ 제42조 제7호 및 제7호의2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2. 5. 26.>

제45조 (휴직교원의 처우)

- ① 제4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 1년 이하인 경우는 봉급의 70퍼센트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 11., 2022. 5. 26.>
- ② 제4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이 출산을 사유로 휴직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90일에 대하여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 5. 26.>
- ③ 제4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의 급여지급 여부는 단협에 따른다. <신설 2022. 5. 26., 개정 2022. 12. 5.>

제46조 (직위의 해제)

-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20. 6. 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고 제1항 2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자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20. 6. 29., 2022. 5. 26.>
-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20. 6. 29.>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제46조의2 (면직의 사유)

-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20. 6. 29.>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경우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경우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7. 삭제 <2025. 2. 27.>
-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신설 2020. 6. 29.; 개정 2024. 12. 19., 2025. 2. 27.>

제47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와 폐쇄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 ④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12. 19.>

제49조 (후임자의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0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1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5. 20., 2014. 11. 21.>
 2.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등을 보직제청하고자 할 경우에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7. 3.>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고등학교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6. 고등학교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② 인사위원회가 제3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 외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건학이념의 준수와 근무태도 <신설 2022. 5. 26.>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위원들 중 호선한다. <개정 2022. 3. 31., 2022. 5. 26.>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 (인사위원회의 회집소집 등)

-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 (회의록 작성)

-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6조 (인사위원회 간사 등)

-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7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8조 (교원징계위원회 조직)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4. 7. 3., 2022. 5. 26.>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 이사 4인, 해당 학교 교원 3인, 외부위원 2인(단,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1인 포함)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5. 26.>
- ③ 해당 학교의 장이 징계를 제청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위원 3인의 명단도 같이 보내야 한다. <신설 2020. 9. 24., 개정 2022. 5. 26.>
- ④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26.>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성화릉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6.〉

제61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2조 (위원의 기피 등)

-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또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

제63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징계의결)

-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주문과 사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6.〉
-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5. 26.〉
- ④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26.〉
- ⑥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7조 (징계사유의 시효)

- ①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교원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4. 7. 3., 2015. 10. 12., 2015. 11. 24.〉
- ② 감사원의 조사 또는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해당 기관의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1. 24.〉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24.〉

제68조 (징계의 유형과 양정기준)

징계의 유형과 양정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4. 7. 3., 2015. 10. 12.〉

제6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법인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제70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 (자격)

-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직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③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④ 재직중에 일반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2조 (임용)

-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속승진은 고등학교에 한하며, 근속승진제운영, 대우선발 및 수당지급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3. 5. 20., 2022. 5. 2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3조 (명예퇴직 및 수당)

- ① 법인 및 대학의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수당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과 총장이 별도로 정하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 시행지침에 따른다. <신설 2009. 10. 9., 2019. 6. 28.>
- ② 근속기간은 제72조 1항에 따른 전보발령의 법인 및 각급 학교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신설 2019. 6. 28.>
- ③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신청절차, 신청서류, 신청시기, 수당지급액 등 기타 필요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 시행지침에 따른다. <신설 2009. 10. 9.>

제73조2 (공로연수)

- ① 고등학교 사무직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합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정년퇴직 6개월 전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8.>
- ② 공로연수에 필요한 재원 및 제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준용한다. <신설 2019. 6. 28.>

제74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직원보수 규정으로 정한다.

제76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2 (준용사항)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고등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3. 5. 20., 2019. 6. 28.>

제77조 (징계 및 재심청구)

-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지만 다음 각 호는 달리한다. <개정 2024. 12. 19.>
 1. 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은 학교법인 이사 3인, 교원 1인, 직원 3인, 외부위원 2인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 대학교의 장은 징계를 제청할 경우 해당 학교의 교원 1인과 직원 3인의 명단도 같이 보내야 한다.
 3. 고등학교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은 학교법인 이사 3인, 교원 2인, 직원 2인, 외부위원 2인(학부모위원 1인 포함)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고등학교의 장은 징계를 제청할 경우 해당 학교의 교원 2인과 직원 2인, 학부모위원 1인의 명단도 같이 보내야 한다.
 5. 특정 성(性)의 비율은 준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19.>
-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78조 (법인 사무조직)

-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5. 26.>
- ② 법인사무국에 사무과와 관리과를 둘 수 있으며, 국장과 사무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5. 26.>

- ③ 이 법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부를 둔다.
- ④ 사업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무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5. 26.>
- ⑤ 사업부에는 관리과를 두며 과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5. 26.>
-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의2 (한국학연구원) 삭제 <2024. 12. 19.>

제2절 대학교

제79조 (총장 등)

-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 대학교에 복수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 ④ 총장이 궐위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직무 대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긴급한 경우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혁신처장, 사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5. 19., 2020. 11. 30.>

제80조 (학장, 대학원장)

-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1조 (하부조직)

- ① 대학교에 교목실, 총장실(비서팀, 대외협력센터), 감사실, 인권센터, 미래혁신전략위원회, 미래혁신본부, 기획처, 사무처, 교무혁신처, 학생지원처, 입학·홍보본부, 서울캠퍼스행정처를 둔다.
<개정 2011. 10. 24., 2014. 7. 3., 2014. 10. 30., 2015. 3. 12., 2017. 6. 9., 2018. 1. 4., 2018. 5. 14., 2019. 3. 26., 2019. 3. 26., 2020. 11. 30., 2021. 3. 29., 2022.

3. 31., 2022. 12. 5., 2024. 4. 4., 2024. 12. 19.)
- ② 각 처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1급(30호봉) 이상 직원으로 보하고, 사무부서에는 실장, 부처장,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4. 16., 2015. 3. 12., 2016. 3. 31., 2019. 10. 28., 2020. 11. 30., 2021. 3. 29., 2022. 5. 26., 2022. 12. 5., 2023. 1.16., 2024. 4. 4.〉
- ③ 기획처에는 기획예산팀, 혁신성과평가팀, 정보시스템팀, AI빅데이터센터, IR센터, 디지털새싹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1. 10. 24., 2013. 5. 20., 2015. 3. 12., 2018. 12. 14., 2019. 3. 26., 2020. 11. 30., 2022. 3. 31., 2023. 1. 16., 2024. 4. 4., 2024. 4. 26., 2024. 12. 19.〉
- ④ 사무처에는 총무팀, 재무팀, 시설자산팀, 그린캠퍼스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1. 10. 24., 2018. 12. 14., 2020. 11. 30., 2022. 3. 31., 2022. 12. 5., 2023. 1. 16., 2024. 4. 4.〉
- ⑤ 교무혁신처에는 교무팀, 대학행정팀, 교수연구팀, 교육혁신원을 둔다.
〈개정 2010. 4. 16., 2011. 10. 24., 2015. 3. 12., 2017. 2. 6., 2020. 11. 30., 2022. 3. 31., 2023. 1.16., 2024. 4. 4.〉
- ⑥ 학생지원처에는 학생복지팀, 생활관[경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진로 취업지원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IPP형일학습병행사업단, RnD산업인턴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0. 4. 16., 2011. 10. 24., 2015. 3. 12., 2017. 2. 6., 2017. 6. 9., 2018. 1. 4., 2020. 11. 30., 2021. 3. 29., 2022. 3. 31., 2023. 1.16., 2024. 4. 4., 2024. 12. 19.〉
- ⑦ 입학·홍보본부에는 입학인재발굴팀, 브랜드홍보팀을 둔다.
〈개정 2010. 4. 16., 2015. 3. 12., 2019. 3. 26., 2020. 11. 30., 2022. 3. 31., 2023. 1.16., 2024. 4. 4.〉
- ⑧ 삭제 〈2015. 3. 12.〉
- ⑨ 제1항의 부서에는 팀장의 보직을 둔다. 〈개정 2020. 11. 30., 2022. 3. 31.〉
- ⑩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9., 2022. 12. 5.〉
- ⑪ 삭제 〈202. 4. 4.〉
- ⑫ 삭제 〈202. 4. 4.〉
- ⑬ 서울캠퍼스 행정처에는 사무행정팀, 교역지도실, 국제교류협력실, 생활관[서원을 둔

다. <신설 2022. 12. 5., 개정 2023. 1. 16., 2024. 4. 4.>

- ⑭ 미래혁신본부에는 대학혁신추진단, RISE사업단, SW중심대학사업단을 둔다.

<신설 2024. 12. 19.>

제82조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 ② 산학협력단 단장에는 교수 또는 1급(30호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 5. 26., 2022. 12. 5.>
- ③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 ④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 (대학원의 하부조직)

- ① 대학원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교의 직제규정으로 정하며 팀장의 보직을 둔다. <개정 2020. 11. 30., 2022. 3. 31.>
- ② 교학부장을 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부서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11. 30.>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 (부속시설)

-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 (종합학술정보원) <삭제 2022. 12. 5.>

제86조 (교장 등)

-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7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교육행정 5급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26.>

제4절 정 원

제88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2, 3과 같다.

제8장 대학평의위원회

제89조 (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5. 26.>

제90조 (평의위원회의 구성)

-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3인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 11., 2015. 3. 12., 2018. 2. 13., 2020. 11. 30., 2022. 5. 26.>

1. 교원 3인
2. 직원 2인
3. 조교 1인 <신설 2020. 11. 30.>

4. 학생 2인 <개정 2018. 2. 13.>
5. 동문 1인 <신설 2022. 5. 26.>
6. 총장이 추천하는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4인
<개정 2015. 3. 12., 2018. 2. 13., 2022. 5. 26.>
7. 삭제 <2015. 3. 12.>
-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1. 30.>

제91조 (교내 평의원회의 위촉)

- ①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협의체에서 2배수를 추천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3. 12., 2022. 5. 26.>
- ② 제90조 제1항의 협의체의 구성단위와 자격, 추천 인원의 수와 추천 절차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 3. 12.>

제92조 (평의원회 조직)

- ① 평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로 한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93조 (평의원회의 임기)

-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조교 및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5. 26., 2024. 4. 26.>
- ② 보궐에 의하여 취임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5. 3. 12., 2022. 5. 26.>

제94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8. 1. 11.>

1. 대학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11.>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11.>
4.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11.>
5.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 1. 11.>

제95조

삭제 <2008. 1. 11.>

제96조 (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2.>

제9장 영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제97조 (목적)

제9장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생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등)

-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5.>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훈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6. 기타 학교운영 등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11.>
-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제안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③ 교원 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99조 (위원의 선출 등)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개정 2022. 3. 31., 2022. 5. 26.>
-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5. 26.>
- ③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기타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0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2. 3. 31.>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개정 2022. 3. 31., 2022. 5. 26.>

제101조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02조 (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22. 3. 31.>
3. 위원이 제101조 2항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2. 5. 26.>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신설 2022. 3. 31.>
7. 영 제5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신설 2022. 3. 31.>

제10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6.>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2. 5. 26.>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3. 31.>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위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5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6조 (회의 및 회의 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신설 2022. 3. 31.>
-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7조 (소위원회의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8조 (안건의 발의 및 처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22. 5. 26., 2022. 12. 5.>

제109조 (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0조 (회의 공개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1조 (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회의록은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1.>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한 예산·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 (의견수렴 등) <신설 2022. 3. 31.>

-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자,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시행령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학생대표는 시행령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
 2.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교복 및 체육복
 4. 방과후 및 방학중 교육수련활동
 5. 학교급식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경우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2조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13조 (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출납 방법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출납 방법 등은 감독청의 예산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제114조 (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개정 2008. 1. 11.〉

제115조 (추천위원회 구성)

-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신설 2008. 1. 11.〉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 11., 2014. 10. 30.〉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신설 2014. 10. 30.〉
 2.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개정 2008. 1. 11., 2014. 10. 30.〉
 3.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개정 2008. 1. 11., 2014. 10. 30.〉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08. 1. 11.〉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1.〉

제11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1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영생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17조 (기능 등)

-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정 제6조 제1항에 의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분쟁 사안을 심의, 조정, 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영생고등학교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 예우 및 교권 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분쟁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 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및 고문 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8조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19조 (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0조 (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1조 (분쟁 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2조 (회의 개최 등)

- ① 회의는 분쟁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 ② 분쟁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 회의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3조 (위원의 제적)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 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24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 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 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분쟁 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 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분쟁 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 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 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5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26조 (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정관 중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 (운영 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보 칙

제128조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26.>

제129조 (청렴의무) <신설 2022. 5. 26., 개정 2022. 12. 5.>

- ①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이사장, 임원 및 소속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임원 및 교직원”이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별도로 정한다.
- ③ 제2항의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가.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나. 이사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원 및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임원 및 교직원이 제2항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0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개정 2022. 5. 26., 2022. 12. 5.>

제131조 (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26., 2022. 12. 5.>

제132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26., 2022. 12. 5.>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이사장	진 정 울	1890. 1. 23	경남 장승포읍 아주리 592
이 사	송 창 근	1898. 10. 5	서울 중구 도동1가 132-10
"	함 태 영	1873. 10. 22	서울 중구 도동1가 139-29
"	김 영 철	1898. 10. 27	서울 종로구 혜화동 53
"	진 명 식	1896. 3. 10	경남 장승포읍 옥포리 583
"	김 영 주	1884. 9. 8	서울 종로구 서대문로1가 43
"	김 종 대	1908. 12. 1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5
"	이 자 익	1879. 7. 25	전북 금산군 금산읍 위안리 44
"	김 춘 배	1900. 1. 7	서울 동대문구 돈암동 153-70
"	김 승 아	1896. 8. 18	경북 금천군 김천읍 황금동 81
"	신 애 균	1900. 10. 10	서울 성동구 신당동 333-54
"	이 창 규	1886. 1. 17	전북 군산군 구암동 328

부 칙

① (처음시행일)

이 정관은 196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제9장 영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임기)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의 회의소집)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4조 (시행규정)

본 학교운영위원회 내부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6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7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감사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2항의 현직 감사 임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수 승진 경과조치) 제37조 제6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정관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정관은 200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육아휴직, 42조 7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정관은 200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정관은 201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결의)
- ⑧ 이 정관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⑨ 이 정관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결의)
- ⑩ 이 정관은 201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결의)
- ⑪ 이 정관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결의)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개방이사추천위원구성경과조치) 제115조 제2항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개정된 정관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014. 11. 21.)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7조 제6항의 개정 조항은 2015년 8월 6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경과조치) 제15조 제5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 조항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7년 10월 31일까지 이 정관의 개정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관 개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1조 1항 및 2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 2항은 교육부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5일 의결 즉시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월 16일 의결 즉시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4월 4일 의결 즉시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4월 26일 의결 즉시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2월 19일 의결 즉시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2월 27일 의결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8명
1급	2명
2급	2명
3급	2명
4급	1명
5급	1명

〈개정 2022. 5. 26.〉

[별표 2] 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20명
일반직 계	63명
1급	5명
2급	16명
3급	20명
4급	11명
5급	11명
별정직 계	2명
3, 4급(관장, 사감)	2명
기능직 계	25명
2등급	5명
3등급	5명
4등급	5명
5등급	6명
6등급	4명
경노무 고용원 계	9명
조리원	2명
청소원	7명

[별표 3] 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8명
행정직 계	5명
교육행정 5급	1명
교육행정 6급	명
교육행정 7급	1명
교육행정 8급	1명
교육행정 9급	1명
관리운영직 계	1명
사무운영 9급	1명
기술직 계	2명
시설관리 9급	2명

〈개정 2014. 7. 3., 2021. 8. 26.〉

[별표 4-1]

〈삭제〉

[별표 4-2]

〈삭제〉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제129조에 의하여 능률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하며 한국가독교 장로회의 직영 학원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31.>

제1조의2 (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관 제24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4. 5. 1.>

- ① 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
- ②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학생정원의 증감, 학과·대학·대학원의 신설과 폐지 등)
- ③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인사, 복무, 직제, 급여 등) 단, 정부출연사업 수주로 직제신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 직제를 신설하고 추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5.>
- ④ 기타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조의3 (설치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5. 26.>

- ① 정관 제24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란 신규채용, 승진, 강임(降任),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②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4호의 “임용” 중 전보(轉補), 겸임, 파견, 휴직, 복직, 의원면직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고등학교는 이사회에서 임용한다. <개정 2024. 12. 19.>

제2장 임원의 선임

제2조 (전무이사의 선임)

이 법인은 법인 및 수익사업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전무이사 1인을 이사회선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단,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 (명예이사의 선임)

- ① 학교 발전에 공헌한 자 및 공헌할 자로 명예이사를 약간 명 둘 수 있다. 단, 이 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명예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결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③ 명예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제3장 서기 선임 및 역할

제4조 (서기의 선임과 역할)

- ① 서기는 인사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로써 선임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서기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진행의 절차를 준비한다.
- ③ 이사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고한다.

제4장 분과위원회

제5조 (분과위원회)

- ①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인사교육위원회, 재정관리위원회, 건설위원회를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5. 26.>
- ②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5. 26.>

-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상의해 임명한 뒤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2. 5. 26.>

제6조 (분과위원회의 종류)

① 인사교육위원회

1. 삭제 <2020. 9. 24.>
2. 본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학교의 조직, 기구개편, 정원조정, 학과의 신설과 폐지, 학칙개정 등과 총장의 교직원 인사에 관하여 사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2. 5. 26.>
3. 본 위원회는 신학교육에 관한 사항을 연구 조사하여 이사회에 제의한다.
4. 삭제 <2022. 5. 26.>

② 재정관리위원회

1. 삭제 <2020. 9. 24.>
2. 본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법인 및 학교의 재정에 관한 사항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법인 및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사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2. 5. 26.>
3. 삭제 <2022. 5. 26.>
4. 본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수익재산의 운영권리와 보수, 임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 처리한다.

③ 건설위원회

1. 삭제 <2020. 9. 24.>
2. 본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하거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법인과 학교의 건축 등 자산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2. 5. 26.>

제7조

이사장과 총장은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장 각 분과위원회 회의 및 결의안 처리

제8조

각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5. 26.>

제9조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처에 비치한다.

제10조

이사장은 이사회 또는 각 위원회의 결의된 사항을 관계부서를 통하여 지체없이 시행케 하여야 한다.

제6장 교직원 임용

제11조

- ① 이 법인 및 산하 각급 학교의 교직원 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정관 및 시행세칙에 준해야 한다.
- ② 삭제 <2022. 5. 26.>
- ③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대학 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 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7. 31., 2015. 8. 6.>

제7장 수익사업

제12조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은 정관 제30조 내지 제33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 7. 31.〉

제8장 총회의 인준

제13조 (총장의 인준)

이사회에서 선임된 총장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14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나 총회 실행위원회, 그리고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총장선출에 관한 정관개정과 정관 제32조의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인준 후에 시행하고, 이외의 정관개정은 총회나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 7. 31., 2013. 5. 20., 2014. 7. 18., 2021. 3. 29., 2022. 5. 26., 2024. 4. 26.〉

제15조 (재산의 관리)

정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허가를 득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단, 정관 제32조에 명시된 수익용 기본재산에 한해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 관할청에 허가를 받는다. 〈개정 2020. 6. 29.〉

제1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7. 31.〉

제9장 재심위원회

제17조 (목적)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6., 2024. 12. 19.>

제18조 (재심위원회의 구성)

- ① 재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변호사 및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 5년 이상 근속한 교원 2인
 2. 법인이사 3인(단, 법인이사는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직원대표 2인

제19조 (재심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 선출)

-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칭함)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서기를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재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또는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재심위원회의 심사)

-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시 사실에 대한 조사,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심문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④ 재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된 사실 이외의 일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22조 (재심 청구인의 진술권)

-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시 그 사실을 명기하고 재심의 결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위배되는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23조 (재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24조 (재심위원의 제척)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위원이 될 수 없다.

1. 본 사건 또는 재심청구인과 관계가 있는 자
2. 청구인과 친족 관계가 있는 자

제25조 (재심위원회의 결정)

-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취소 또는 변경을 처분권자에게 요구한다.

제26조 (재심 심사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 사건 당사자의 표기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와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27조 (재심 심사결정서의 송부)

- ① 재심 심사결정서는 그 정보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 심사결정서를 재심청구인에게 송부함에 있어 배달증명의 우편방법을 이용한다.

제28조 (재심 결정의 효력)

제28조의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귀속한다.

제29조 (재심위원 수당 등)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재심위원회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19.>

제10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산설 2015. 3. 12.〉

제31조 (목적)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정관시행세칙은 정관 제15조 및 제115조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 (기능)

추천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방이사와 추천감사(이하 “개방임원”이라 한다) 선임 대상자를 선임한다.

제33조 (구성 및 절차)

-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위원회에 두며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되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학교운영위원회서 추천하는 자 1인
- ②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은 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 전에 추천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제1항의 해당 기관에 새로운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을 재추천한다.

제34조 (임기)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개방임원 선임이 확정되는 날로 종료한다.

제35조 (위원장 등)

-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추천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제36조 (회의)

- ① 법인 또는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추천위원회는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37조 (개방임원 추천)

- ① 법인의 이사장은 개방 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에게 개방 임원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 이사의 경우 대상 인원의 2배수, 추천 감사의 경우 단수로 선정하여 법인에 추천한다.

-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개방입원 후보자를 별표 1의 양식에 맞추어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며 2명 이상의 개방이사가 결원시에는 구분하여 추천한다.

제38조 (비밀유지)

추천위원회 위원 및 서기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 (준용)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및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11장 각 학교장 선임 절차

〈산설 2022. 5. 26.〉

제40조 (소관위원회)

- ① 정관 제3조의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선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인사교육위원회에서 정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② 한신대학교는 총장직 인수에 필요한 총장인수위원회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12장 정관 시행세칙 개정

〈산설 2015. 3. 12.〉

제41조

본 세칙은 이사정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196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199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199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199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200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200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200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200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로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로 2007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로 200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로 200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로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로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로 201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기존위원회 규정 등의 폐지) 이 시행세칙에 저촉되는 기존의 개방이사추천 위원회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방이사(감사) 후보자추천서

한신학원 개방임원 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출석교회	(노회) (교회)
추천사유	○○○ 이사 후임(○○. ○○. ○○ 임기만료)

상기인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시행세칙 제41조에 의한 개방임원(이사, 감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첨부자료 :
 - 이력서 1부(사진 부착)
 - 개방임원 후보자 추천 승낙서 1부(별첨양식)
 - 추천하는 위원의 각서 1부(별첨양식)
 - 교육경력증명서(교육경험이사의 경우)

년 월 일

개방이사추천위원 _____ (서명/날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귀중

(별첨 양식)

개방임원 후보자 추천 승낙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학교법인 한신학원 개방임원(이사, 감사)후보자로 추천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_____ (서명/날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귀중

(별첨 양식)

각 서

다음 사람이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개방임원(이사, 감사) 후보로 추천됨에 있어 사립학교
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개방(이사,감사)			
개방(이사,감사)			
개방(이사,감사)			
개방(이사,감사)			

년 월 일

개방이사추천위원 _____ (서명/날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귀중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지도하며 후원한다.

제3조 (임무)

1. 신학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후원한다.
2.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제37조 11, 12, 13항에 따른다.

제2장 조 직

제4조 (조직)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공천 10인(여성 1인 이상),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 파송 2인, 당연직 3인(이사장, 총장, 신대원장) 등 15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임기)

본 위원 중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위원의 임기는 4년, 이사회 파송 위원 임기는 이 사 재임기간, 신학대학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임원)

1.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3.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 (회의)

1. 정기회는 년 1회(총회 후 30일 이내) 소집한다.
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안건은 소집 7일 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결의)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신학대학원장을 선임할 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9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년 9월 제97회 총회 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기독교농촌개발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기독교농촌개발원운영위원회(이하 '개발원')라 한다.

제2조 (위치)

본 개발원의 사무처는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139-1번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개발원은 기독교 봉사정신으로 미래의 농업과 마을 개발을 담당할 농촌 청년을 교육하고 훈련하며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생활 향상을 도모하여 농촌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개발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영위한다.

1. 농촌 개발 및 농민의 의식화 교육을 위한 사업
2. 농촌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3. 자립 농장을 경영하는 사업
4. 기타 농촌 개발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조직)

본 위원회는 위원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제6조 (위원의 선임)

본 위원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임으로 사려되는 인사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에서 선임한다.

1.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위원

총회 공천위원회가 신학자 2인과 선교동역자 2인, 농촌선교전문가 6인, 운영위원 2인(여성 1인 이상)을 추천한다.

2. 위원회 추천위원

개발원운영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3. 당연직 위원

개발원 원장을 직책상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최초의 위원 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 (임원)

본 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아래 임원을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운영위원장 1인, 서기 1인

제9조 (운영위원회 기능)

본 운영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 개발원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 임원 선임 및 보선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위원회 소집)

본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장 직무 대행위원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향과 같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소집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 (서면 결의)

본 운영위원회는 부의 사항의 내용에 따라 서면 결의로써 운영위원회 결의를 대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정식 회의를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정기 운영위원회)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정족수)

본 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연구분과, 교육지도분과, 기타 필요한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개발원의 기구 및 직원

제15조 (개발원 기구)

본 개발원의 사업부서는 아래와 같다.

1. 농촌지도부

농촌 개발과 농민의 교육 지도 사업을 주관하되 국내의 기독교 농촌사업 단체와 정부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농촌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2. 마을 개발 지원부

선정된 마을의 개발 운동을 육성하고 사업을 담당한다.

3. 농장 경영부

본 개발원 직영 농장을 경영하는 일을 연구 실천한다.

제16조 (개발원 직원)

본 개발원의 직원은 아래와 같다.

1. 원장 1인
2. 부장 약간인
3. 기타 직원 약간인

제17조 (직원의 임무)

본 개발원의 직원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를 실행하며 개발원 사업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장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 부서에 책임 종사한다.
3. 기타 직원은 원장이 지시하는 사무에 종사한다.

제18조 (직원의 임명)

본 개발원의 직원 임명은 아래와 같다.

1. 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선임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2. 부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준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3. 기타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자문위원회

제19조

원장의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자산과 회계

제20조 (자산의 구분)

본 개발원 자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재산의 관리)

1. 기본 재산 중 부동산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한다.
2. 기본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농사의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기 임대 등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하며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3. 기본 재산은 매년 그 목록을 작성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 (재산 및 처리)

본 개발원을 해산하고자 하면 위원회 정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경비 및 유지방법)

본 개발원 운영 경비 및 사업비는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2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감사)

본 개발원은 연 2차 총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7장 개정 절차

제26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세칙과 원칙을 만들어 이를 시행한다.

1977년 9월 제62회 총회 제정
1984년 9월 제69회 총회 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2003년 9월 제88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영성수련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영성수련원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 (위치)

본 위원회는 총회 내에 둔다. (단, 사정에 따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위원회는 영성수련원으로 하여금 기독교의 신앙에 따라 영성수련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새로운 영성수련의 방법들을 연구하고 개발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영성수련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영위한다.

1. 개혁교회 신학과 전통을 기반으로 기독교 영성을 확립한다.
2. 영성수련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 정리, 보관한다.
3. 목회현장에 다양한 영성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4. 영성수련에 대한 연구 자료집 등을 출판 보급한다.
5. 목회자, 목사후보생, 신도, 청소년 등의 지속적인 영성수련을 실시한다.
6. 그밖에 본 운영위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 (조직)

본 위원회는 위원 9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선임)

본 위원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임으로 사려되는 인사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선임한다.

1.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위원

총회 공천 목회자 4인, 남·여신도회 각 1인(각 신도회 추천), 전문인 1인을 추천하여 총회가 선임한다.

2. 당연직 위원

수련원 원장을 직책상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최초의 위원 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 (임원)

본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에서 아래 임원을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운영위원장 1인, 서기 1인

제9조 (운영위원회 기능)

본 운영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 수련원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재산의 임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 임원 선임 및 보선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문위원과 후원위원을 둘 수 있다.
5. 기타 본회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위원회 소집)

본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항과 같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소집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 (서면 결의)

본 운영위원회는 부의 사항의 내용에 따라 서면 결의로써 운영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정식 회의를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정기위원회)

정기회는 매년 총회 직후에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시는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정족수)

본 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수련원의 기구 및 직원

제15조 (수련원 직원)

본 영성수련원의 직원은 아래와 같다.

1. 원장 1인
2. 직원 약간인

제16조 (직원의 임무)

본 영성수련원의 직원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실행하며 수련원 사업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직원은 원장의 지시하는 사무에 종사한다.

제17조 (직원의 임명)

본 영성수련원의 직원 임명은 아래와 같다.

1. 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선임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직원은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 (직원의 임기)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장 자산과 회계

제19조 (자산의 구분)

본 영성수련원 자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0조 (재산의 관리)

1. 기본 재산 중 부동산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한다.
2. 기본 재산은 매년 그 목록을 작성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21조 (경비 및 유지방법)

본 영성수련원 운영 경비 및 사업비는 총회 지원과 국내외 교회의 지원금과 찬조금, 영성수련 참가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 수련원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감사)

본 수련원은 연 2차 총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6장 해산 및 합병

제24조 (해산 및 합병)

본 수련원을 해산 혹은 합병하고자 하면 위원회 정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잔여재산 귀속)

본 수련원이 해산하는 때는 정산 후 잔여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귀속한다.

제7장 개정 절차

제26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세칙과 원칙을 만들어 이를 시행한다.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목회와신학연구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라 한다(영문표기 The Institute of Theological Stud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이하 '연구소'라 칭함).

제2조 (사무소)

본 연구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연구소의 목적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개혁신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변하는 시대 속에서 신학을 연구하며 한국 교회, 사회, 역사를 변혁시키는 역할을 하게하고 미래의 선교적 지평을 열고 준비하는 데 있다.

제4조 (사업)

본 연구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개혁신학 신학과 전통을 소개하고 연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스위스 개혁신학을 비롯한 타 지역 교회들과 신학 교류와 인사 교류를 갖는다.
2. 개혁신학 신학자료를 조사, 수집, 정리, 보관한다.
3. 장공 신학 사상과 그 이후의 신학을 평가, 정리, 계승하고 발전시켜 복음의 토착화와 민족개혁의 동력이 되게 한다.
4. 에큐메니컬 신학 및 타 종교와의 대화를 가지며 개혁신학 신학의 맥락에서 민중 신학을 정리하고 발전시킨다.
5. 신학과 목회현장을 접목하기 위해 목회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6. 한국기독교장로회 연혁정책선언서(4대 문서)와 1987년 신앙선언, 교회선교사회 선교교회교육정책(제5문서) 및 각종 선교문서를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서 분석, 평가하고 2000년대 선교방향을 모색한다.
7. 연구 활동, 연구 발표회, 연구 세미나, 공개 강연회,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8. 연구 성과물 및 연구 자료집 등을 총회 출판사를 통해 출판 보급한다.
9. 장학회를 설치하여 새 역사를 담당할 개혁신학 후진을 양성한다.
10. 그밖에 연구소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 (이사회)

본 연구소는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본 교단 인사 중에서 선임하되 총회 공천 29인(노회별 1인, 여성 1인 추가), 이사회 추천 이사 2인, 당연직 이사 2인(한신대 총장, 소장)을 포함하여 33인으로 한다. 그 임기는 4년이다.
2. 이사회는 추대로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명예이사는 이사회 연권을 가지며 연구소 운영과 연구 활동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 (임원 및 선임)

본 연구소 이사회의 임원 및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 장 : 본회 이사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부이사장 : 본회 이사의 과반수 참석과 다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3. 서 기 : 부이사장과 같다.

제7조 (감사)

본회 감사는 총회 감사가 한다.

제8조 (소장 선출)

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재직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임기는 4년이다.

제9조 (기획위원)

기획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0인 내외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임 무

제10조 (이사회회의 임무)

본 연구소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2. 소장 선출
3. 기획위원 선출
4.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안 심의
5. 장학생 선발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장 :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재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부이사장 : 이사장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서 기 :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2조 (소장의 임무)

소장은 본 연구소를 관장하고 기획위원회를 주재하며 연구소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 (기획위원회의 임무)

동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연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업계획
2. 연구소의 연간 활동 계획의 심의 및 평가
3.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연구소

제14조 (직원)

본 연구소 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본 연구소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연구소를 총괄한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상임연구원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연구원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3. 사무원

연구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약간의 사무원을 둔다. 소장이 임명하고 소장이 맡긴 업무를 담당한다.

4. 각종 부서를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5장 회 원

제15조 (가입)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교회(단체)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 (구분)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연구회원은 연구소의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으로 한다.
2. 후원회원은 연구소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한다.

제17조 (후원회)

연구소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후원회원으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 (권리)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소에서 관장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19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총회 지원과 국내외 교회의 지원금과 찬조금, 출판 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7장 개정 절차

제20조 (개정)

이 정관은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법규를 준용한다.

1991년 제76회 총회 실행위원회 제정
1992년 9월 제77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목회학박사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학박사원(이하 '박사원')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박사원은 목회자의 목회 지도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장소)

본 박사원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 내에 설치한다.

제4조 (운영)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본 박사원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위임하여 운영하게 한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위원회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및 감사

제6조 (재정)

박사원의 재정은 위원회 지원금, 등록금,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 (재정)

재산의 관리는 위원회가 의결하여 처리하고 법규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계의 구분 및 집행)

회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회계는 박사원장이 집행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일반회계 : 교육사업
2. 특별회계 : 특별 기획사업

제9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위원회는 총회에 예산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감사)

박사원 운영의 감사는 위원회 감사와 총회 감사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총회장, 부총회장(목사), 박사원 동문대표 2인, 목회와신학연구소 이사 2인, 박사원장, 박사원 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임기)

파송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

운영위원회 임원은 위원장과 서기로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에 보고한다.

1. 박사원의 예산과 결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4. 박사원 관련 제반 규칙에 관한 사항

제16조 (위원회 감사)

위원회는 총회 감사 1개월 전에 자체적으로 박사원의 운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는 위원 2인으로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며,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과 교직원

제19조 (조직)

박사원은 원장과 차장으로 조직하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처를 둘 수 있다.

제20조 (박사원의 장)

박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한국기독교총로회에 속한 목사
2. Ph.D., Th.D.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academic degree)를 소지한 자
3. 박사원 교수 경력을 소지한 자

제21조 (부처 조직과 장)

1. 교무처 : 학사와 교무 업무를 관장한다.
2. 총무처 : 일반 행정과 재정 업무를 관장한다.
3. 차장은 박사원 교수로 하여금 겸임하게 한다.
4. 차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 (교직원)

교직원의 구성과 임면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23조 (해산)

박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잔여재산의 귀속)

박사원을 해산하였을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로 총회에 귀속된다.

제25조 (개정)

이 정관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3. 이 정관과 학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통상규칙을 준용하여 결의하며, 교과과정을 기본으로 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법 규정에 의한 제반의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복지증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1.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를 둔다.
 - (1) 경상북도 분사무소 : 경상북도(구미시 원평1동 1071-1)에 둔다.
 - (2) 인 천 분사무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동 940-8)에 둔다.
 - (3) 전라남도 분사무소 : 전라남도(완도군 완도읍 중앙리 782-98)에 둔다.
 - (4) 전라북도 분사무소 :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89-2)에 둔다.
 - (5) 경 기 도 분사무소 : 경기도(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96-2)에 둔다.
 - (6) 제 주 도 분사무소 : 제주도(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218-1)에 둔다.
 - (7) 충청남도 분사무소 : 충청남도(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150-3)에 둔다.
 - (8) 충청북도 분사무소 :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 탑동 270-1)에 둔다.
 - (9) 대 전 분사무소 : 대전광역시(동구 용운동 408-2)에 둔다.
 - (10) 무 안 분사무소 : 무안군(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6-2)에 둔다.
 - (11) 포 향 분사무소 : 포항시(포항시 북구 장성동 1368-2)에 둔다.
 - (12) 강 진 분사무소 : 강진군(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35)에 둔다.
 - (13) 광 주 분사무소 : 광주광역시(북구 청풍동 842-4)에 둔다.
 - (14) 영 암 분사무소 : 영암군(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78-1)에 둔다.
 - (15) 김 포 분사무소 : 김포시(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75-9)에 둔다.

- (16) 해 남 분사무소 : 해남군(해남군 마산면 용전리 388-13)에 둔다.
- (17) 속 초 분사무소 : 속초시(속초시 조양동 1435-4)에 둔다.
- (18) 신 안 분사무소 : 신안군(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392-1)에 둔다.
- (19) 성 남 분사무소 : 성남시(성남시 중원구 중동 269)에 둔다.
- (20) 강 원 분사무소 : 원주시(원주시 행구동 1610-1)에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종합 사회 복지관 지원 사업 및 시설위탁 운영
2.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아동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사업 및 시설 위탁 운영
3.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설치·운영·지원사업 및 시설위탁운영
4.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사업 및 시설위탁 운영
5. 아동 복지시설 지원사업 및 시설위탁 운영
6. 보육 시설 지원사업 및 시설위탁 운영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및 시설위탁운영
8. 자활지원 사업, 무료 직업소개 사업, 노숙인 복지 시설 설치·운영 지원사업 및 시설 위탁운영
9. 기부식품 제공사업(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 지원 및 시설 설치 운영
10. 그 밖의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5조 (자산 구분)

1.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 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자산은 보통 자산으로 한다.
 - 1) 별표 제1의 기본 자산목록에 기재된 자산
 - 2) 부동산
 - 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 자산에 편입된 자산

제6조 (자산의 관리)

1. 기본 자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2/3의 찬성 결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1.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시설의 장이 각각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 5일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 사 11인
(여성 1인 이상)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이사회 추천이사 2인, 외부 추천이사 3인 포함)
4. 감사 2인(외부 추천 감사 1인 포함)

제16조 (이사의 선임)

1. 이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11인 및 감사 2인을 둔다.
2.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 중 50%는 사회복지사로 하되, 사회복지교수도 포함한다.
4.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이 법인은 임원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임원 임기 등)

1.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1.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1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겸직금지)

1.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2.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또는 시설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3조 (임원의 해임)

1.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한다.
2.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위반한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 3) 기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 구성)

1.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6조 (이사회회의 소집 등)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1월중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현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를 대표이사에게 포괄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의결제척사유)

-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1조 (사무국)

1.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직원)

1. 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3조 (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후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7장 공고 방법

제36조 (공고의 방법)

1.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법인의 게시판이나 일간신문에 싣는다.
2.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 (준용규칙)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2조 (운영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의 사용할 인장은 별표Ⅰ, 별지Ⅱ, 별지Ⅲ과 같다.

제5조 (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 규정)

2008년도 신규 임명되는 이사 중 3분의 1은 그 임기를 1년, 3분의 1은 그 임기를 2년, 3분의 1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한다.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정관에 의하여 제반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 세칙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선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복지증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하 '법인')은 산하기관 및 시설과 법인사무국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이사회)

1.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11인, 감사 2인을 둔다.
2. 이사의 구성은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이사 6인, 이사회 추천이사 2인, 외부 추천이사 3인으로 한다. 단, 총회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 총회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3. 총회 결의에 따르지 않는 이사에 대하여 징계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 (산하기관)

1. 법인의 산하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된 위탁기관 및 시설을 포함하여 법인이 설치 운영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의 선교정신에 따라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3. 산하기관의 장에 대한 임면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급(국장, 부장, 실장)에 해당하는 자의 임면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산하기관은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승인 및 추인을 받아야 한다.
 - 1) 각 시설의 지침에 따른 사항
(예산서, 결산서, 운영규정, 재산목록 등 이사회에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2) 각 시설의 인사변동사항 보고
 - 3)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 회의 보고
 - 4) 각 자치단체의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의 보고
 - 5)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5. 산하기관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산하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매년 12월까지 새해년도 사업과 예산에 대한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익년 3월까지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자료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단, 어린이집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다).
7. 산하기관은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사업과 재정에 대한 법인의 지도점검과 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할 의무를 가지며, 법인의 발전에 협력 도모하여야 한다.
8. 산하기관은 인사, 사업 및 재산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산하기관은 자체 운영규정 및 보수규정을 두며, 기관장(시설장)의 책임하에 직원을 채용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복지전문위원회)

1. 법인은 교단의 사회복지선교의 정책 실천방향과 사회적인 과제에 대한 대응 및 산하기관, 분사무소의 제반사항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사회복지전문위원회는 이사회에 요청에 의하여 주어진 과업을 연구·분석·자문 등을 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한다.
3. 사회복지전문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2인과 노회의 사회복지선교 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의 대표 및 법인 산하기관 직능별 협의회의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약간의 외부 사회복지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위원회)

1. 법인은 사회복지선교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집·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법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산하기관과 법인분사무소, 법인사무국 등에서 필요 인력을 조직하여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법인은 자원봉사위원회의 조직과 세부적인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인 세부분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후원회)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회복지선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국 재정 확보와 후원모금사업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의 조직과 사업은 별도의 법인 세부분영세칙에 따른다.

제8조 (부설기관)

정관 제1장 총칙 제4조에 명시된 사업을 위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설기관 설립 등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법인 세부분영세칙에 따른다.

제3장 재산관리 및 처분

제9조 (재산관리 및 처리)

본 법인의 산하기관은 본 법인의 재산에 대한 성실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본 법인 명의로 재산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처분신청)

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는 재산 반환 및 처분을 원칙적으로는 요청할 수 없고, 이전이나 기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한하여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서(그 사유를 명기할 것)

2. 소속기관의 회의록과 직속상부기관의 동의서
3. 처분계획서
4. 재산 감정 평가서(매도, 증여, 교환)

제4장 사무국

제11조 (법인사무국)

1.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업무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업무처리와 통상적인 행정사무를 책임진다.
4. 사무국장은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5.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은 할 수 있으나 연임은 3회까지만 한다.
6.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면은 대표이사가 한다.
7. 사무국장은 공개채용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8. 직원의 정년과 보수 등 처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5장 법인과 분사무소

제12조 (법인분사무소)

1. 법인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단위의 분사무소를 두되,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단, 시군구의 단위의 분사무소는 등기의 근거로만 삼는다).
2. 분사무소의 충족 조건은 아래와 같다.
 - 1) 분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분사무소는 본 법인 관할 하에 두고 법인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3) 분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법인의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
 - 4) 법인은 분사무소가 법인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분사무소의 운영을 정지 또는 해산할 수 있다.

- 5) 분사무소는 사무국을 두어 법인의 산하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인의 제반 업무를 협력한다.
 - 6) 분사무소 사업이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평가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 7) 분사무소에 필요한 재정은 관련 노회의 지원과 후원사업 등을 통하여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 8) 분사무소는 사업의 운영주체가 될 수 없고, 관할 지역의 법인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이 없다.
3. 법인분사무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 1)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발전과 사회복지선교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며 분사무소 관할지역에서 법인 산하기관을 지원한다.
 - 2) 운영위원회는 분사무소의 사업과 재정 등 운영 전반을 심의평가조정한다.
 - 3) 운영위원회는 법인 산하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하며 협력한다.
 - 4) 운영위원회의 조직 등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의 법인 세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3조 (법인 분립)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법인을 분립할 수 있다.

제6장 인사에 관한 규정

제1절 채 용

제14조 (채용방법)

1. 법인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개채용에 응모하여야 한다.
2. 법인은 응모자 중 소정의 선발시험 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제15조 (채용기준)

1. 법인은 직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
2. 법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한 자, 경력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3. 법인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임용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직원 채용 결격 대상자
2. 미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상당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

제17조 (채용신체검사)

법인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8조 (제출서류)

1.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 1) 근로계약서 (법인양식)

- 2) 서약서 (법인양식)
 - 3) 주민등록등본
 - 4) 가족관계증명서
 -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6) 법인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행의 채용 신체검사서
 - 7) 경력직 사원의 경우 경력증명서
 - 8) 자격증,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9)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 10) 급여이체 통장용 계좌사본
 - 11) 기타 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2. 법인은 직원 채용 시 위 서류 중 일부에 대해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근로계약)

1. 법인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직원에게 근로 계약서 1부를 교부한다.
2. 법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3. 법인은 전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4. 법인은 신규 직원 채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의무보험을 가입하여 직원의 복리증진을 꾀한다.

제20조 (사용 및 수습기간)

1. 법인은 정규 직원 채용 전에 사용근무를 위해 타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사용근무자에 대해 법인이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일체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사용근무자가 법인의 정규 직원이 되려면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정규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5. 사용기간과 수습기간은 근속 년수에 포함한다.

제21조 (채용취소)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운영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3. 제14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4. 채용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기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절 인 사

제22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법인은 직원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며, 당연직 인사위원 장인 대표이사 1인, 당연직 위원으로 상임이사 1인, 이사회추천이사 3인 등 5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인사관리의 기본방침과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산하기관 시설장 및 법인 사무국장 재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외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24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위원회는 전 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 위원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특정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절 휴직과 복직

제25조 (휴직)

1.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법인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
2.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인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 (휴직기간)

1. 직원이 휴직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 조 1호 : 3월 이내. 단 법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2) 전 조 2호 : 관련법령에 따른 소집기간
 - 3) 전 조 3호 : 연수기간 및 직무상 필요한 기간
 - 4) 전 조 4호 : 구속기간
2. 법인은 전 조의 기간 내에 직원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 처리할 수 있다.
3. 법인은 직원의 휴직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고, 대체인력이 없는 경우 필요한 인력을 보충한다.
4.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 및 각종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명확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법인이 급여나 치료비 등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당해 근로자의 제보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대체청구 한다. 이 경우 당해 근로자는 법인의 대체청구에 필요한 자료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복직)

1.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의 허락을 얻어 복직할 수 있다.
3. 직원은 휴직 중이라도 법인의 규정을 준수하며 법인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기관에 종사하거나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4. 법인은 휴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한다.
5. 상병으로 휴직한 직원이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근무가능 여부에 관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절 산하기관 시설장 및 법인 사무국장의 임기

제29조 (산하기관 시설장 및 법인사무국장의 임기)

법인 산하기관의 관장, 원장, 센터장 등 시설의 장과 법인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기만료 시, 재임용 평가를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재임용의 보고)

법인 산하기관의 시설의 장 및 법인사무국장은 임기 3개월 전 재임용 청원서를 법인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 인사위원회가 서면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판단한다. 단, 재임용의 절차를 받지 아니하는 시설의 장 및 법인사무국장은 그 임기를 해당임용 임기까지만 한다.

제31조 (공개채용)

법인 산하기관의 시설의 장 및 법인사무국장, 그리고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순환 보직 인사발령)

법인이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로 산하기관 시설의 장을 포함한 직원을 순환 보직 인사발령을 낼 수 있다.

제33조 (직원의 정년)

법인은 산하기관 및 법인사무국 종사자의 정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시설장 및 법인사무국장 : 만65세
2. 종사자 : 만60세
3. 제1항, 2항의 규정에 의거 정년퇴직을 하는 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년에 도달하는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일 경우 6월 30일자, 7월에서 12월 사이일 경우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한다.

제34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정년 예외규정)

산하기관 중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시설장을 제외하고 법인의 필요에 의하거나 시설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시설장은 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이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시설장 중 정년이 경과된 자는 해당임기까지로 한정한다.
2.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법인 인사위원회의 허락을 득하여 1년 단위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정년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정년은 최장 만7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제1절 근로 의무

제35조 (복무상 의무 등)

1. 모든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표의 달성에 적극 노력한다.
 - 2) 법인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지시)에 따라야 한다.
 - 3) 직원은 담당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4) 법인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직원은 항상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고객 기타 제3자로부터 금품 기타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6) 직원은 신상의 이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직원은 재직 중 법인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겸직하거나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에 미리 신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8) 직원은 법인의 허락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업무 중 도박, 음주,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 직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화재 및 도난을 방지하며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12) 직원은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이 전항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 (출근의무 등)

1. 직원은 업무시작 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
3. 전항의 승인을 얻은 결근은 직원의 이의가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직원은 출·퇴근 시에 반드시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고 타인이 대리하여 작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 작성 시 해당자 모두를 징계할 수 있다.

제37조 (지각·조퇴 및 외출)

1.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출장)

1. 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직원이 업무로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급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2. 직원이 출장이 불가하거나, 목적지 변경 등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직원이 출장업무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법인은 여비, 숙박비, 교통비 등 출장업무에 필요한 실비의 지급은 별도의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2절 근로시간

제3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며, 소정근로시간 중 주 5시간은 업무량에 따라 근무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12:00~13:00로 한다.
3. 직원은 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 법인의 업무 특성이나 업무사정, 계절적 요인, 기타 업무 필요에 따라 형편에 따라 통상의 시업 및 종업시각,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1. 법인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법인은 직원과의 합의에 의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 (간주 근로시간제)

1. 직원이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직원이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42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1.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2. 연장근로·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법정 가산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3. 법인은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43조 (휴일의 대체)

법인은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 직원 또는 특정 직원에 대하여 합의하에 휴일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제44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그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제3절 휴일과 휴가

제45조 (유급휴일)

1.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 1) 주휴일(매주 일요일)
 - 2) 신정(1월 1일)
 - 3) 근로자의 날(5월 1일)
 - 4) 설날 및 그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2. 교대제 근무자는 별도로 정한 주휴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다.
3.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연차유급휴가)

1. 1년간 소정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소정 근로일의 8할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47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1.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5일 전에 법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은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직원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법인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4. 법인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법인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경조사 휴가)

1. 직원의 경조사휴가에 대하여는 법인 세부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휴일(또는 비번)은 경조사 휴가 일수에 통산한다.
2. 직원이 화재, 수재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 재난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3일 이내의 재

난복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재난의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 (생리휴가)

법인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50조 (병가)

1. 법인은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필요시 단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2.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절 퇴직·해고 등

제51조 (퇴직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직원은 퇴직한다.

1.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3. 징계처분으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5. 사망하였을 경우
6. 전문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52조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수습 또는 사용기간 중 직원으로서 채용함에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2. 미성년후견, 피한정후견 신고를 받은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극히 부족한 경우
5.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8.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의 효력상실 및 면허 취소 등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9. 기타 위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3조 (해고의 제한)

1.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2. 출산 전후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54조 (해고의 통지)

1. 법인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2.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55조 (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호의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 직원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5.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56조 (대기발령)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 직권면직 또는 징계해고 되는 자로서 해고 예고한 경우
2. 징계 요청중인 자 또는 법률에 의해 기소된 자로서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함이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업무수행 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극히 불량하여 현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취업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
4. 직원이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직개편 또는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6. 기타 총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5절 포상 및 징계

제57조 (포상)

1. 법인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 1) 법인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 2) 직원과의 화합과 직원 단결에 크게 기여한 자
 -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 4) 사회에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로 법인의 명예를 드높인 자
 - 5) 기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포상대상자 및 포상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3. 포상의 방법은 표창장 수여, 포상금 지급, 상품수여나 특별휴가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 (징계)

1.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상당히 태만히 한 자
 - 3) 업무상 비밀 또는 기밀을 누설하여 법인에 피해를 입힌 자
 - 4) 법인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 5)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 6) 법인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7)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개선의 노력이 없는 자
 - 8)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인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 9) 법인의 재산에 대해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
 - 10) 제3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자
 - 11) 법인이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 12)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 13) 무단결근 또는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자
 - 14) 법인의 승인 없이 타 직장에 취업하거나 종사한 자
 - 15)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 16) 타 직원에게 폭력, 협박, 모욕, 상해 등의 행위를 한 자
 - 17) 유언비어를 퍼뜨려 법인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자
 - 18) 직장 내 성희롱 또는 도에 지나치는 외설적인 행위를 한 자
 - 19)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이나 제3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친 자
 - 20)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만·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21)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소속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그의 소속 상사의 관리 감독 책임이 분명할 시 연대하여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다.

제59조 (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징계사유의 경중, 평소의 소행, 사후 개선의 정, 업무실적 및 과거 징계유무 기타 사유 등을 참작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경고 : 경고장을 발부하여 잘못을 시정토록 한다.
2. 견책 :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3. 감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고 :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제60조 (징계심의)

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3일 전까지 다음 각호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사전 통보
 - 2) 징계대상 직원에게 징계심의 일시, 장소 및 징계사유를 명시한 따른 출석통지서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
2.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3.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5.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6.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1조 (징계결과 통보)

1. 징계결과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 이유를 포함한 문서로 통보한다.
2. 문서로 송달 또는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문자,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62조 (징계심의 절차의 예외)

제58조의 징계 중 경고와 견책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심의 없이 대표이사가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제6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63조 (기본원칙)

법인은 여성 직원이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모성을 보호 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한다.

제64조 (임신부의 보호)

1. 법인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다만,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2.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고,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임신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 1) 임신한 직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2) 임신한 직원이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3) 임신한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4. 법인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청구하면 다음 각 호에 예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임신의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법인은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6. 법인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7. 법인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한다.
8.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직원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9. 법인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65조 (배우자 출산휴가)

1. 법인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66조 (육아휴직)

1. 법인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법인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과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법인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은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5.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6. 법인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제67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법인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법인은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근무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로조건, 절차 및 지원 등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제68조 (가족돌봄휴직 등)

1. 법인은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족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법인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신청한 경우
 -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3) 법인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 소개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 2) 연장근로의 제한
 -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 4) 그 밖의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3.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법인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5.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6. 법인은 소속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9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38조 제2항에 따른 휴계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8장 임 금

제70조 (임금 책정의 기본원칙)

법인은 직원의 임금에 관하여는 법인의 경영상태, 직원의 능력과 경력, 직원의 생계보장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임금이 되도록 책정한다.

제71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1.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마감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한다.
2. 결근 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3. 신규채용, 승진, 전보, 휴직 및 복직,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직원의 임금 책정 및 지급방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 (휴업수당)

1. 법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 (대기발령자의 임금)

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경우 출근의무가 없는 대기발령은 무급 또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고, 출근의무가 있는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74조 (병가 또는 휴직자 등의 임금)

1.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휴직으로 하며, 휴직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휴직기간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의 급여는 3개월간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3. 직원이 직무교육 또는 대외 교육 참석 등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만을 지급할 수 있다.
4. 업무상 질병 이외의 휴직자의 임금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 (장제처분 받은 자의 임금)

1.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감봉기간 중의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총액이 임금지급기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
2. 정직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 (퇴직급여)

법인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립하고 퇴직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

제9장 재무회계

제77조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78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79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서 충당한다.

제80조 (회계구분)

1.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3.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한다.
4. 일반회계는 전입금, 사업수입, 후원금 수입, 차입금, 잡수입 등의 경상적 세입과 세출을 관리한다.
5. 특별 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한다.

제81조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2조 (회계관계 직원의 신원보증)

회계관계 직원은 신용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83조 (재무원의 구분)

1. 재무회계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원을 둔다.
2. 재무원은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주관하며,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3. 회계원은 수입원, 지출원으로 구분하며, 간사가 수입원과 지출원을 겸직한다.
4. 재무원과 회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제84조 (회계행위)

1.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며, 관련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어떠한 회계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다.
2. 모든 수입 및 지출결의서는 원인행위 발생 즉시 개별로 작성되어 시행한다.

3. 재무회계직원은 당월에 이루어진 회계행위에 대하여 일계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첨부하여 익월 10일 이전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 (회계장부의 비치)

법인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현금출납부는 1월 1일 전기이월금부터 기장)
2. 총계정원장 및 총계정원장보조부
3. 재산대장(토지, 건물, 유가증권, 무형고정자산, 차량, 부채상황 등)
4. 비품관리대장

제86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법인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기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10장 직무성희롱 예방 등 교육, 안전 및 보건

제87조 (직무교육)

1. 법인은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직무교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 수강 지원금 등 각종 훈련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한다.
3. 제1항의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88조 (성희롱의 예방)

1. 법인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

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2. 법인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89조 (사외교육)

법인 직원들에게 필요에 따라 사외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0조 (안전교육)

법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작업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91조 (업무환경의 개선)

법인은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무실 등 업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2조 (건강진단)

1. 법인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2.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 수사·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3조 (재해보상)

1.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 보상한다.

제94조 (업무 외 부상 등)

1. 직원이 업무 외 또는 사적 행위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법인은 보상하지 아니 한다.
2. 직원이 업무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인 또는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직원이 책임을 진다. 만일 법인이나 다른 기관이 배상책임을 진 경우 당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장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95조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원은 다른 직원뿐 아니라 거래처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6조 (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법인 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97조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1. 법인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2) 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 3) 직장내 괴롭힘 상담절차
 -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 5)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6)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7) 그밖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3. 법인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98조 (직장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 (개정 및 시행)

1.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정관의 개정은 총회 또는 총회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시행한다.

2.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운영세칙의 개정은 총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자산의 관리)

기본 자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 또는 총회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사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또는 총회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세부운영규정)

1.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정관 및 운영규정에 없는 필요한 적용 규정은 <한국 기독교장로회총회 치무규정 및 취업규칙>을 준용하고, 사회상규를 적용한다.
2. 법인분사무소 운영위원회, 후원회, 자원봉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부설기관, 법인분립 등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은 별도로 둔다.
3. 법인사무국의 직원업무분장과 직원보수, 여비, 근로시간, 경조사휴가, 휴게·휴일, 문서관리, 행정서식 등의 세부운영규정은 별도로 둔다.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제97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총회 감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규칙 제13조 24항의 감사의 기능과 감사 절차를 정함으로써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의 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관계규칙 및 제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감사
3. 총회 결의의 이행 상황과 총회가 별도로 의뢰하는 업무의 감사

제3조 (감사의 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는 연 2회 2월과 7월에 실시한다. 단, 별도 감사가 있는 법인의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 실시한다.
2. 특별감사는 부서장과 회계 담당자의 경질의 경우와 총회의 의뢰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4조 (감사대상)

감사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본부
2. 총회 교육원
3. 기독교농촌개발원
4. 목회와신학연구소
5. 총회유지재단
6. 연금재단

7. 한신학원
8. 총회 산하 연합회(남, 여, 청년회)
9. 총회 산하 각종 기금
10.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11. 기타 총회가 감사하도록 결의한 사업

제5조 (감사의 방법)

감사는 실시 감사에 의하되 전반감사와 부분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전반감사는 업무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회계처리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2. 부분감사는 특별감사의 경우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시함을 말한다.

제2장 감사와 그 보조자

제6조 (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회 산하 모든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한 태도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감사보조자)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본부 직원 1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케 한다.

제8조 (감사보조자의 의무)

감사가 감사에 임하기 전에 각 기관의 제반 감사자료를 준비케 하여 감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하고 늦어도 감사 10일 전에는 감사자료를 감사에게 송부한다. 감사보조자는 각 기관의 감사자료를 보관하고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감사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대상부서의 협조)

감사 대상부서 또는 소속 직원은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 중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서장이나 해당 직원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징구한다.

제3장 감사 계획과 시행

제10조 (감사지침 작성)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총회장과 협의하여 익년도 정기감사지침을 작성하여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감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감사업무의 기본방향
2. 감사의 주안점
3. 감사의 구분과 방법
4.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11조 (감사의 실시)

감사는 감사시행에 앞서 피감사 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지한 후 실시한다. 다만 특별 감사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감사시행에 앞서 사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1. 감사 대상부서
2. 감사범위
3. 감사기준과 감사기관
4. 감사의 성명
5.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 후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하고 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지적을 접수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접수 후 10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감사는 해당 부서장의 이의 신청을 심사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 고

제14조 (감사 보고)

감사는 감사할 때마다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긴급 보고)

감사는 감사 중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내용을 총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사고 보고)

각 부서장은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서면으로 총회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종합 감사보고)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직접 보고하고 보고가 채택됨으로써 감사 지적 내용이 효력을 발생한다.

보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제도 또는 운영상 모순되는 사항의 개선방안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처리의 개선방안
3.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전 3호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면직·감봉·견책·경고 등)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변상의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모든 보고서와 직무에 관한 문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제5장 개정 절차

제18조 (개정)

이 규정은 감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감사직무에 관련되는 규정 예규 및 기타 결의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3. 회계감사의 경우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고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감사증명을 받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총회본부 처무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처무의 대강을 정하여 부과된 임무를 능률적이며 체계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재)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재)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등(이하“총회”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2장 총회 취업세칙

제3조 (취업세칙)

1. 총회 본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로하는 직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별도의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취업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2. 이 세칙은 총회의 운영과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임금, 퇴직, 퇴직급여, 포상 및 징계, 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 및 보건, 재해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3. 이 세칙은 총회 처무규정의 세부 적용을 위한 것이며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세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라 해 기관 직원의 동의 절차와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로 한다.

제4조 (적용범위)

1. 이 세칙은 총회 헌법과 규칙,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된다.

제3장 직원의 채용

제5조 (채용)

총회는 취업세칙 제3조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취업세칙 제2장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6조 (보직)

채용된 직원은 취업세칙 제25조(배치, 전직, 승진) 각 호에 따른다. 단, 총무는 필요에 따라 겸직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해직)

총회 직원은 취업세칙 제7장(퇴직, 해고 등)이 정한 각 호에 따라 퇴직 또는 해고될 수 있다.

제8조 (인사위원회)

총회는 취업세칙 제69조(징계)에 따른다.

제4장 복무와 근로조건

제9조 (복무상 의무)

직원은 취업세칙 제3장(복무)에 따른다.

제10조 (근로조건)

직원은 취업세칙 제5장(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정해 있으며, 휴일과 휴가, 모성보호 및 알가정 양립 지원에 관해서는 취업세칙 제5장(근로조건)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출장 및 여비

제11조 (출장)

총회는 취업세칙 제21조(출장)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인계

제12조 (인계인수)

1. 직원은 퇴직, 휴직, 직책 변경의 명을 받았을 때 그 담당 사무의 서류 및 비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2. 금전 또는 물품의 출납 계산과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의 인계인수는 정리된 장부의 잔고와 재고를 현금 예금 및 실물과 대조하여 명확한 인계를 하여야 한다.
3. 사무인계, 인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단, 회계에 관한 인계인수는 감사가 입회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임 금

제13조 (원칙)

총회는 취업세칙 제6장(임금)에 따라 총회의 경영상태, 직원의 능력과 경력, 직원의 생계보장과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임금이 되도록 책정한다.

제14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

직원의 임금 계산 및 지급 기준은 취업세칙 제55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에 따른다.

제15조 (수당과 기타임금)

1. 휴업수당은 취업세칙 제56조(휴업수당)에 따른다.
2. 대기발령자의 임금은 취업세칙 제57조(대기발령자의 임금)에 따른다.
3. 병가 또는 휴직자 등의 임금은 취업세칙 제58조(병가 또는 휴직자 등의 임금)에 따른다.
4. 징계처분 받은 자의 임금은 취업세칙 제59조(징계처분 받은 자의 임금)에 따른다.

제8장 개정 절차

제16조 (개정)

이 규정은 실행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1년 9월 제66회 총회 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1989년 9월 제74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취업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재)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재)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등(이하“총회”라 한다))에서 근로하는 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총회의 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취업세칙(이하 “세칙”이라함)은 총회에서 근로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2.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그 밖에 별도로 정한 총회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3. 이 세칙은 직원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근로계약서에 정한 사항 외에 복무, 징계 등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세칙의 내용을 적용한다.

제3조 (직원의 정의 및 선임 임기)

1. 총 무 : 총대로 선임되지 아니하였어도 가하며, 총무는 부총회장 선거의 규정
에 준하여 선거하고 총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부총무 : 총무가 제청한 자를 실행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로 인준하여 총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미만으로 한다. 제청권자와 진퇴를 같이한다. 단,
총무 유고시에는 총무의 잔여임기로 한다.
3. 국 장 : 총무 또는 상임이사가 제청한 자를 실행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로 인
준하여 총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미만으로 하고, 제청권자와 진
퇴를 같이한다. 단, 교육국장의 진퇴는 예외로 한다.
4. 부장, 간사 : 총무 또는 상임이사가 제청한 자를 총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미만으로 한다.

5. 사무원 : 총무 또는 상임이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근로계약 시 별도로 정한다.
6. 협동직원 : 총무 또는 상임이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1년 이하로 정한다.
7. 운전기사 : 총무 또는 상임이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미만으로 한다. 제청권자와 진퇴를 같이한다.

제4조 (신의성실의무 등)

총회와 직원은 이 세칙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협력하여 총회의 발전과 직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채 용

제5조 (채용방법)

1. 총회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가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채용시험에 응모하여야 한다.
2. 총회는 응모자 중 정하는 선발시험 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제6조 (채용기준)

1. 총회는 직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
2. 총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한 자,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3. 총회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례받은 기독교인으로서 채용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총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자라도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제7조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교회 헌법 권장에 의해 책별중인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상당히 부적합한 자

제8조 (신체검사)

총회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제출서류)

1.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 1) 근로계약서(총회 양식)
 - 2) 서약서(총회 양식)
 - 3) 주민등록등본
 - 4) 가족관계증명서
 -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6) 총회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행의 채용 신체검사서
 - 7) 경력증명서(경력직에 한함)
 - 8) 자격증,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9)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 10) 통장 사본(급여 이체용)
 - 11) 기타 총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2. 총회는 직원 채용 시 위 서류 중 일부에 대해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근로계약)

1. 총회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직원에게 근로 계약서 1부를 교부한다.
2. 총회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임금, 정한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3. 총회는 전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정한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이 협동직원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4. 총회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세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 및 수습기간)

1. 총회는 직원 채용 전에 사용 근무를 위해 타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사용 근무자에 대해 총회가 본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사용 근무자가 총회의 직원이 되려면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둔다.
5. 사용기간과 수습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12조 (채용취소)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세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3. 제7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4. 채용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기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복 무

제13조 (복무상 의무 등)

1. 모든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1) 총회의 설립 목적과 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한다.
 - 2) 총회의 제 법규를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지시)에 따라야 한다.
 - 3) 직원은 담당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4) 총회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직원은 항상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기타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6) 공과 사를 구분하고 총회의 기물과 물품을 아끼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7) 직원은 신상의 이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8) 직원은 출퇴근 시 지정된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하며, 물품의 부정 반입, 반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일상 휴대품 외에 물품을 사내외에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는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9) 상하 직원 간 또는 동료 간 화합에 힘쓰며 공손한 말씨와 태도로 업무에 임한다.
 - 10)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예절을 갖추어야 하며,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단정한 의상을 착용하여야 한다.
 - 11) 직원은 재직 중 총회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겸직하거나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 겸직 또는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 미리 신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12) 직원은 총회의 허락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된다.
 - 13) 업무 중 도박, 음주,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4)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총회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15) 직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화재 및 도난을 방지하며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 비용절감 및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17) 직원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이 전항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총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입문 정지와 퇴장명령)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문을 불허하며, 입문 후 발견 시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총회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법 전단 살포나 벽보, 집회나 시위를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2. 신분증명서 및 출근표 기타 증명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합리적 검사에 불응할 경우
3. 업무상 불필요한 흥기, 기타 위험물이나 위해 물질을 휴대하였을 경우
4. 음주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할 경우
5. 질병 또는 위생상 유해하거나 재해 예방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타인을 교사 또는 선동하여 사무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 (출근 의무 등)

1. 직원은 업무시작 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
3. 전항의 승인을 얻은 결근은 직원의 이의가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출근 시에는 반드시 출근 체크를 하여야 한다.
5. 타인이 대리하여 출근 체크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리하여 출근 체크하는 경우 해당자 모두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 (지각조퇴 및 외출)

1.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사적 외출)

1. 직원의 근무시간 중 사적인 외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외출할 수 있다.
2. 사적 외출 후 소요시간 외에 귀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면회)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사적 면회는 휴식시간 중에 지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사무처 잔류 금지)

직원은 근무시간 종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처 내에 잔류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공민권 행사)

1. 총무는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2. 총무는 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출장)

1. 총무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직원이 업무로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2. 직원이 출장이 불가하거나, 목적지 변경 등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직원이 출장업무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총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여비, 숙박비, 교통비 등 출장업무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22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1.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총회의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재정위원장을 포함하여 그에 준하는 직급의 직원 중 총회장이 임명하되, 9인 이내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회장 또는 총회장이 위임한 자로 한다.
3. 위원회에는 인사담당자 1인을 실무자로 둔다.

제2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인사관리의 기본방침과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외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승진, 호봉조정)

제24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위원회는 전 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기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 위원에 관련된 경우 해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절 인사발령

제25조 (배치, 전직, 승진)

1. 총회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 또는 담당업무 구역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총회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3. 총회는 승진 등 인사발령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직책의 해임)

총회는 직책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책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자질이 부족하거나 부과된 직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현격한 능력의 저하 등으로 이미 부과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장기 결근으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4. 그 밖에 직원이 현재의 직책을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일 때

제27조 (업무 및 부서의 변경)

1. 총회는 전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를 변경하거나 부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총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택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3. 자택 대기발령을 명받은 자는 자기개발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총회에 매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적을 매달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4. 직원이 전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28조 (신상변동의 신고)

직원은 전거, 개명, 자격취득, 학력 변동 기타 이력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총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손해배상 책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절 휴직과 복직

제30조 (휴직)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경우
 -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총회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
2.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총회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1조 (휴직기간)

1. 직원이 휴직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 조 1호 : 3월 이내. 단 총회의 허락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2) 전 조 2호 : 관련 법령에 따른 소집기간
 - 3) 전 조 3호 : 연수기간 및 직무상 필요한 기간
 - 4) 전 조 4호 : 구속기간
2. 총회는 전 조의 기간 내에 직원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 처리할 수 있다.
3. 총회는 직원의 휴직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고, 대체인력이 없는 경우 필요한 인력을 보충한다.
4.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 및 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해 총회가 급여나 치료비 등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총회는 당해 근로자의 제 보상에 대해 관계기관에 대체청구한다. 이 경우 당해 근로자는 총회의 대체청구에 필요한 자료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 (복직)

1.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총회의 허락을 얻어 복직할 수 있다.
3. 직원은 휴직 중이라도 총회의 법규를 준수하며 총회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기관에 종사하거나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4. 총회는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5. 상병으로 휴직한 직원이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근무가능 여부에 관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 (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34조 (근로시간, 휴게시간)

1.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며, 정한 근로시간 외 주 5시간은 업무량에 따라 연장 근무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12:00~13:00으로 한다.
3. 직원은 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 총회의 업무 특성이나 업무 사정, 계절적 요인, 기타 업무 필요에 따라 형편에 따라 통상의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총회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총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 3개월 단위로 6개월까지(3개월 미만, 3개월 초과~6개월 미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 (간주근로시간제)

1. 직원이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직원이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1.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2. 연장근로·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법정 가산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3. 총회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8조 (휴일의 대체)

총회는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휴일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제39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때에는 그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2.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 1)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를 있는 경우
 -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40조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 제외)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세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1) 감사·단속적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2절 휴일과 휴가

제41조 (유급휴일)

1.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 1) 주휴일(매주 일요일)
- 2)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 3) 근로자의 날(5월 1일)
2. 교대제 근무자는 별도로 정한 주휴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다.
3.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의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연차유급휴가)

1. 1년간 정한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정한 근로일의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43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1.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전에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총회는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총회의 귀책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
4. 총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총회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44조 (경조사 휴가)

1. 직원의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는 별지의 경조사 휴가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휴일(또는 비번)은 경조사 휴가 일수에 통산한다.

2. 직원이 화재, 수재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 재난을 당하였을 경우 3일 이내의 재난복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재난의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 (생리휴가)

총회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46조 (병가)

1. 총회는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47조 (기본원칙)

총회는 여성 직원이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한다.

제48조 (임산부의 보호)

1. 총회는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 대해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준다. 다만,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2.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120일의 보호 휴가를 주고,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임신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 1) 임신한 직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2) 임신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3) 임신한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4. 총회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직원이 청구하면 다음 각 호에 예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칙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임신의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총회는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6. 총회는 직원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7. 총회는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은 종류의 근로로 전환한다.
8. 총회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 직원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9. 총회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49조 (배우자 출산휴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4.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5.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육아휴직)

1. 총회는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총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총회는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5.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6. 총회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제51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총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총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근무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로조건, 절차 및 지원 등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제52조 (가족돌봄휴직 등)

1. 총회는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가족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총회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이 신청한 경우
 -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3) 총회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 소개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때 총회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 2) 연장근로의 제한
 -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 4) 그 밖의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3.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가족돌봄휴직은 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5. 총회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6.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7. 총회는 소속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가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53조 (육아시간)

1.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34조 제2항에 따른 휴계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임 금

제54조 (임금 책정의 기본원칙)

총회는 직원의 임금에 관하여는 총회의 경영상태, 직원의 업무능력과 경력, 직원의 생계보장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임금이 되도록 책정한다.

제55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1.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마감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한다.
2. 결근 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 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3. 신규채용, 승진, 전보, 휴직 및 복직,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직원의 임금 책정 및 지급방식은 별도로 총회 임금시행세칙에 의한다.

제56조 (휴업수당)

1. 총회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 (대기발령자의 임금)

직원이 총회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경우 출근의무가 없는 대기발령은 무급 또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고, 출근의무가 있는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58조 (병가 또는 휴직자 등의 임금)

1.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휴직으로 하며, 휴직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휴직기간 중 급여는 3개월간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3. 직원이 직무교육 또는 대외 교육 참석 등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만을 지급할 수 있다.
4. 연구를 위해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휴직으로 처리하고, 휴직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제59조 (징계처분 받은 자의 임금)

1.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감봉기간 중의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총액이 임금지급기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
2. 정직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퇴직·해고 등

제60조 (퇴직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해 직원은 퇴직한다.

1. 직원 및 협동직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3. 징계처분으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5. 사망하였을 경우

제61조 (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해고할 수 있다.

1. 수습 또는 사용기간 중 직원으로서 채용함에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2.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신고를 받은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극히 부족한 경우
5.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8.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의 효력상실 및 면허 취소 등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9. 기타 위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2조 (해고의 제한)

1.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2. 출산 전후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63조 (해고의 통지)

1. 총회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2. 총회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제64조 (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4조, 고용노동부령 제335호)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5조 (정년)

1. 직원의 정년은 만 65세에 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
2. 정년에 달한 직원에 대해 총회는 업무사정과 당해 직원의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퇴직 후라도 별도의 촉탁계약에 의해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촉탁계약은 총무의 재청으로 1년씩 3번까지 할 수 있다.

제66조 (대기발령)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 직권면직 또는 징계해고되는 자로서 해고예고한 경우
2. 징계요청 중인 자 또는 법률에 의해 기소된 자로서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함이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극히 불량하여 현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취업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

4. 직원이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직개편 또는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6. 기타 총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8장 퇴직급여

제67조 (퇴직급여)

1. 총회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1)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본 호의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은 1회로 한정한다.
 - 3) 직원, 직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세칙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7) 그 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총회는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직원이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한다.
4. 총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68조 (포상)

1. 총회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 1) 총회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 2) 직원과의 화합과 직원 단결에 크게 기여한 자
 -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 4) 사회에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로 총회의 명예를 드높인 자
 - 5) 기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포상 대상자 및 포상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3. 포상의 방법은 표창장 수여, 포상금 지급, 상품 수여나 특별휴가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9조 (징계)

1.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 “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 보되 총회 재판국장 과 감사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상당히 태만히 한 자
 - 3) 업무상 비밀 또는 기밀을 누설하여 총회에 피해를 입힌 자
 - 4) 총회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 5) 총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 6) 총회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7)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개선의 노력이 없는 자
 - 8)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 9) 총회의 재산에 대해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
 - 10) 제3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자
 - 11) 총회가 정한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자
 - 12)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 13) 무단결근 또는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자
 - 14) 총회에서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및 총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포스터, 팸플릿, 붙은문서, 도서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정치, 종교 등의 활동을 하거나 하려고 한 자
 - 15) 총회의 승인 없이 타 직장에 취직하거나 종사한 자
 - 16) 화기 취급을 소홀히 하거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와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
 - 17) 총회 내외를 불문하고 타 직원에게 폭력, 협박, 모욕, 상해 등의 행위를 한 자
 - 18) 유언비어를 퍼뜨려 총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자
 - 19) 적합한 절차 없이 사적인 문서 등에 승인을 요청 또는 강요하거나 그에 응한 자
 - 20) 품행이 불량하여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21) 총회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 상호간에 도박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
 - 22) 사내에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성희롱 또는 도에 지나치는 외설적인 행위를 한 자
 - 23)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회나 제3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친 자
 - 24) 기타 위와 준하는 행위로 총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소속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그를 관리 감독하는 소속 상사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다.

제70조 (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징계 사유의 경중, 평소의 소행, 사후 개전의 정, 업무실적 및 과거 징계 유무 기타 사유 등을 참작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경고 : 경고장을 발부하여 잘못을 시정토록 한다.
2. 견책 :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3. 감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고 :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제71조 (징계심의)

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회의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인사위원회 위원 : 회의 일시, 장소, 의제
 - 2) 징계대상 직원 : 징계심의 일시, 장소 및 징계사유를 명시한 출석통지서 및 소명자료 제출
2.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3.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경우 해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5.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6. 실무자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72조 (징계결과 통보)

1. 징계결과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 이유를 포함한 문서로 통보한다.
2. 문서로 송달 또는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문자,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73조 (징계심의 절차의 예외)

제70조의 징계의 종류 중 경고와 견책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총무 또는 총무가 위임한 상급부서장의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74조 (직무교육)

1. 총회는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직무교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 수강 지원금 등 각종 훈련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한다.
3. 제1항의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75조 (성희롱의 예방)

1. 총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2. 총회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원,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7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총회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7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 총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4. 총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시 게시하거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9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총회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80조 (사건의 접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81조 (사건의 조사)

1. 총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3. 조사가 종료되면 총회장과 총무에게 보고한다.
4.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총회장과 총무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총회는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3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총회 인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4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1. 총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총회는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장 교육, 안전 및 보건

제85조 (직원교육)

1. 총회는 직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자기계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이 경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

제86조 (사외교육)

총회는 직원들에게 필요에 따라 사외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7조 (안전교육)

총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작업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88조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제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89조 (안전보호장구의 착용)

직원은 위험 또는 유해 작업 시 총회에서 지급하는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제90조 (작업환경 측정)

1. 총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2. 제1항의 작업환경 측정 시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킨다.
3. 총회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직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91조 (작업환경의 개선)

총회는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작업장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92조 (건강진단)

1. 총회는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2. 총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수사·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장 재해보상

제93조 (재해보상)

1. 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가 보상한다.

제94조 (업무 외 부상 등)

1. 직원의 업무 외 또는 사적 행위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총회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2. 직원의 업무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총회 또는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직원이 책임을 진다. 만일 총회나 다른 기관이 배상책임을 진 경우 당해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4장 개정절차

제95조 (개정)

이 세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허락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신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제109회 총회 개정

재정회계 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총회 규칙 제10장 규정에 따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재정(예산과 결산 및 감사) 회계 사무에 관하여 처리 절차를 규정하므로 총회 재정의 건전한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세출의 정의와 회계연도)

1.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이다. 단, 사업 추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일반 회계연도의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3조 (회계 구분)

1. 총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일반적 총회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포괄한다.
3. 특별회계는 총회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써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시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 총회 본부를 말한다.
2. 산하 기관 : 총회 산하 기관을 말한다.
3. 총무 : 총회 총무를 말한다.
4. 회계 : 총회 회계를 말한다.
5. 재정위원회 : 총회 재정위원회를 말한다.

제5조 (관리 책임)

본 총회의 징수, 경리, 물품관리, 출납의 책임은 다음에 의한다.

1. 경리 책임 : 총무, 산하기관장
2. 물품 관리책임 : 총무, 산하기관장
3. 출납 책임 : 총무, 산하기관장
4. 재정 지도감독 책임 : 총회 회계

제2장 예 산**제6조 (예산 편성 지침 및 예산안 제출 기한)**

1. 재정위원회는 재정위원회 규정 제6조 3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 지침을 정하고 총회 개회 3개월 전에 각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각 기관장은 전항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서식 제1호)을 작성하여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의 편성)

재정위원회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종합 조정하여 총회 전반적인 예산안(서식 제2호)을 총회에 제출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추가 경정 예산안)

1.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서식 제3호)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한다.
2. 추가 경정 예산안은 회계 세칙 제7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무 또는 기관장은 예비비 지출요구서(서식 제4호)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총무는 분기별, 혹은 월별 예산 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산하 기관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3장 결 산

제11조 (결산서 작성 및 제출)

총무 또는 기관의 장은 세입 세출 결산서(서식 제5, 6호)를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 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작성, 재정위원회를 경유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감사)

총회 감사는 총회 산하 각 기관의 재정 집행 상황을 연 2차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수 입

제13조 (수입의 관리와 절차)

1. 총무 또는 기관의 장은 모든 수입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모든 수입에는 수입 결의서(서식 제7호)를 작성해야 하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회비)

1. 세입의 기간인 상회비의 책정은 총회 규칙 제28조에 의하여 부과한다.
2. 노회는 매년 총회에 납부하는 상회비에 2%를 더하여 목회자 연금을 위해 연금재단 기금으로 적립한다.
3. 총무는 책정된 상회비를 노회에 통지하고 출납원으로 하여금 수입하도록 한다.

제15조 (상회비 미납노회)

상회비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총회 개최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총회 개최까지 미납된 노회에 대하여는 총회 규칙 제2장 제5조 1항에 의해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5장 지 출**제16조 (지출의 관리와 절차)**

1. 총무 또는 기관의 장은 모든 지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단, 각 법인이사장과 상임위원장과의 협의 하에 집행하고 차후 이사회와 위원회에 보고한다.
2. 모든 지출에는 지출결의서(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주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지급 명령)

지급의 명령을 발하려 할 때는 예산의 과목별, 채주 별로 작성하여 기재 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의 각 항의 경우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봉급, 임금 및 수당
2. 의무적인 부담금
3.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등

제18조 (계약 방법과 절차)

1. 공사, 제조, 구입,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은 공고를 하여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총무 또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명 경쟁 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2. 공사, 제조, 구입 등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견적과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적은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 금액의 기준은 총무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현금 보관의 제한)

1.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출납원은 긴급을 요하는 지불 준비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는 총무 또는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출납원과 기장

제20조 (출납원)

1. 출납원은 세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 보관하여야 한다.
2. 출납원은 총무 또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21조 (사무 인계 인수)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1. 인계 전일로써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날인한다.
2. 인계자는 예금 잔액 증명서를 첨부한 인계 인수서를 3통 작성하여 총무 또는 기관의 장 입회하에 수수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본부에 보관한다.

제22조 (장부의 비치와 기장, 보존기한)

1. 총무 또는 기관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 1) 세입 내역부
 - 2) 세출 내역부
 - 3) 현금 출납부
 - 4) 유가증권 수급부
 - 5) 비품대장
 - 6) 출장 명령부
 - 7) 소모품 출납부
 - 8) 기타 필요한 장부

2. 각 장부 및 증빙자료의 보존기한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장부(현금 출납부) : 7년
- 2) 세입, 세출 내역부 : 7년
- 3) 비품대장 : 7년
- 4) 기타 장부 : 5년

제7장 기본 재산 및 물품 관리

제23조 (기본 재산 관리)

기본 재산(부동산)은 총회 유지재단에서 관리하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4조 (관리보고)

관리자는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기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 정도와 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제25조 (비품관리)

관리자는 비품 대장을 비치하고 정확하게 기록 정리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보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비품의 처분)

비품이 노후 혹은 고장(파손)되어 처분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는 목록표를 갖추어 총무 또는 기관장의 결재를 얻어 폐기 또는 전환할 수 있다.

제27조 (물품관리)

관리자는 소모품의 출납 대장을 비치하고 구입과 불출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8장 특별기금 관리

제28조 (기금의 정의)

이 세칙에서 “기금”이라 함은 총회가 행하는 특별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현금을 말한다.

제29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다음에 의하여 관리한다.

1. 기금은 정부가 인가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해당 사업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사업별로 계정을 설정하고 별도 경리하여야 한다.
3. 기금운영에 대한 예산은 해당 사업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개정 절차

제30조 (개정)

이 세칙은 재정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총회 산하 모든 기관의 재정회계에 적용한다.
3. 이 세칙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재정 관리자는 총회에서 조치를 한다.
4.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 회계법에 의한다.

1966년 제51회 총회 제정

2007년 제92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여비 지급 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총회 처무 규정 제4장 제9조에 따라 총회 산하 각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공무로 출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여비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장 구분)

출장은 국내 출장, 해외 출장 및 외근으로 구분한다.

1. 국내 출장은 공무로 1박 이상의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외 출장은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근이란 당일로 귀입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출장을 말한다.

제3조 (종류)

여비는 교통비, 일당으로 구분한다.

1. 교통비는 자동차운임, 선임, 철도임, 항공임을 말한다.
2. 일당은 일비, 숙박비를 말한다.

제4조 (노정 계산)

여비는 순로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단,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제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 (일수의 계산)

출장 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단,

1. 출장 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출장자의 견책 사유로 인하여 출장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연장 기간에 대한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구분 계산)

출장 중에 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여비 지급은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운임)

철도 여행에는 철도임, 수로 여행에는 선임, 항공 여행에는 항공료, 육로 여행에는 거마비를 지급한다. 단, 육로 여행에는 총회 차를 이용할 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출장비)

출장비는 별표1.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육로교통비 - 육로 여행에는 철도임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버스 운임 실비를 지급한다.
2. 철도임 - 철도 여행에는 KTX를 기준, 철도임 실비를 지급한다.

제9조 (해외 출장비)

해외 출장비는 별표 2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공로 여행에는 항공료, 수로 여행에는 선임을 지급한다.

제10조 (외근비)

외근자의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제11조 (여비의 신청)

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장 명령을 받은 후 별표 3.의 양식에 의한 여비의 청구서를 회계에게 제출한다.

제12조 (여비의 지불)

회계는 전조의 여비 청구서에 의거 계산하여 소정의 결재를 득한 후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13조 (출장비 특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세칙에 의지하기 어려운 경우의 출장비는 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제14조 (총회 총대 및 위원회 위원 여비)

- 1. 총회의 총대여비는 각 교회 또는 노회에서 지급한다.
- 2. 총회의 각 위원회 여비산정 기준은 1km당 기준금액(300원)을 정하고, 매년 정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역 간 거리는 각 시청, 군청 기준 최단거리로 계산한다. 단, 수로 이용일 경우 선임을 더한 금액과 제주의 경우 항공요금으로 한다.
- 3.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대면회의(온라인)를 진행할 경우 여비지급은 재정위원회가 정한 서울지역 여비지급 기준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개정)

이 세칙은 재정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출장비 정책표(국내)

교 통 비			일비 (1일당)	숙박비(1박당) (2인 1실 기준)	식비 (1일당)	비고
자동차 운임	철도	항공				
실비	실비	실비	10,000	50,000	20,000	

총회장(葬) 규정

제1조

총회 장(葬)은 증경총회장, 전 총회 총무 등 본 교단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사람이 별세하였을 때, 총회장, 서기, 총무의 결의에 따라 실시하며, 이를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조

총회 장(葬) 거행 시의 주례는 본 교단 총회장이 맡는다.

제3조

총회 장(葬)의 절차위원은 본 교단 총회장, 서기, 총무, 해당 노회장 및 해당 교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4조

장례위원은 증경총회장, 전 총회 총무, 총회 실행위원회 위원과 해당 노회 임원 및 해당 교회 당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장례비용은 해당 교회 혹은 노회가 부담하며 총회는 조의를 표시한다.

제6조 (개정)

이 규정은 총회 또는 실행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출석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회 의전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예의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격식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제2조 (의전 대상)

총회의 의전 대상은 내부인사에 대한 의전 및 외부인사에 대한 의전으로 구분한다.

1. 내부인사에 대한 의전은 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부총회장(장로) 및 총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인사로 한다(단, 총회 산하 기관장은 내빈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외부인사는 총회가 특별히 초청한 협력 교단 총회장 및 대표자, 국제협력 교단 총회장 및 대표자, 총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인사로 한다.

제3조 (세부지침)

1. 총회장에게는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하며 필요한 사무도구(집기 및 전화)를 설치할 수 있고 명패는 [총회장]으로 한다.
 - 1) 총회장의 평시 집무를 위해 전임 사무원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단, 인선은 본부 직원으로 한다.
 - 2) 총회 기간 중 총회 장소에 총회장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총회 회집 시 증경총회장과 증경부총회장의 좌석은 회의장에 별도로 배치하며, 좌석배열을 총회장 재임 순으로 하고, 패찰로 표시한다.
 - 1) 증경총회장과 증경부총회장에게는 패찰을 해 드리고 좌석에 안내원 1인을 배치한다.
3. 외부 초청인사의 좌석은 회의장 좌우 상단으로 하고, 국내 인사와 국제협력선교 관계에 있는 인사로 구분한다. 좌석 배열은 국내 인사일 경우 가나다 순으로, 국제협력선교 관계 인사일 경우 알파벳 순으로 한다.
 - 1) 외부 초청인사에게는 안내원 1인을 배치한다. 단, 외국인인 통역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내빈 소개)

1. 총회장은 정한 시간에 내빈 인사 소개를 하되, 필요할 경우 회의 중간에 회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개할 수 있다.
2. 내빈 인사 소개 시 특별한 경우 총회장은 회원들에게 기립 박수토록 할 수 있다.
3. 내외빈 인사 중 증경총회장, 해 교단 총회장, 총회장에 준하는 공식 초청인사는 총회장이, 그 외의 인사는 총무가 소개한다.
4. 총회장은 필요한 경우 내빈에게 특별 인사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케 해야 한다.

제5조 (내빈 접대)

1. 내빈 접대는 정중하게 하되, 검소하게 해야 한다.
2. 총회가 필요하여 특별히 초청한 인사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여비 및 체재비를 지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회 여비규정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제6조 (개정)

이 규정은 총회 또는 실행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출석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를 준용한다.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

제1장 회 장

제1조 (소집권자)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소집하며 부회장도 유고가 되면 서기가 소집한다.

제2조 (의장과 대리)

의장은 회장이 한다.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하며 부회장도 유고 시에는 참석한 최후 증경회장의 순으로, 증경회장들도 없으면 회에서 선임직자 순위의 사회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사회하게 한다.

제3조 (직무 및 회장의 동의)

회장은 사회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다. 회장이 동의하려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원이 사회하도록 하고 회원석에서 하여야 한다. 그 안건이 결정될 때까지는 사회하지 못한다.

제4조 (회장의 제척)

회장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토의와 표결에 사회하지 못한다.

제5조 (규칙 해석권)

회원 중 회의 규칙에 대하여 질문하면 회장이 먼저 설명하거나 타인으로 설명케 하고 공포하면 그것이 법이 되나 회원 2인 이상이 불복하여 항변하면 회장은 회중에 가부를 물어 결정한다.

제6조 (위원 임명권)

회에서 부회장을 위시한 각 위원을 선거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회장이 임명한다.

제2장 회 의

제7조 (개회)

정한 시간이 되면 회장은 개회 기도회를 인도함으로 개회한다.

제8조 (회원 점명)

서기는 회원을 호명하여 참석 수와 결석 수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개회 성수)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성수는 전 회원의 과반수이며 성원이 되었으면 회장은 개회를 선언한다.

제10조 (유회)

성수가 되지 못하였으면 30분을 더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회장은 회중에 몰어 더 기다리든지 다음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유회한다.

제11조 (결의 성수)

성수가 되어 개회하였을지라도 회의 도중에 성수가 되지 못하면 회의를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잠시 동안은 토의할 수 있고 표결 시에는 반드시 성수가 되어야 하며 정회, 폐회 동의는 예외이다.

제12조 (위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위임하였으면 개회 성수에는 들어가며 표결 시 총 투표수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직책상 당연직으로 회원이 되었을 경우 그 직책에 관계가 있는 자를 대리로 보냈을 경우는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13조 (안건심의)

제안된 안건은 3독회로 심의한다.

1. 제1독회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질문과 대체 토론이 있을 후 제2독회로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를 결정한다.

2. 제2독회

축조 심의한다. 이때에 수정안이 나오면 원조항과 대조하여 심의하고 다수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3. 제3독회

제2독회에서 수정한 것을 가지고 그 제안 전체를 통과시키느냐 않느냐를 결정한다. 제2독회에서는 수정할 수 있어도 제3독회에서는 못하고 다만 잘못된 글자나 서로 모순되고 저촉되는 것을 고칠 수 있다. 제3독회에서 가부 결정은 정한 규정에 의한다. 회칙안이나 예산안 중에도 간단한 것은 독회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 의안처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회록 작성 및 채택)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한다.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자수 또는 출석자 성명(소규모 회의), 회의보고, 결의사항(반대자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동의자, 재청자의 성명과 가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을 적고 회의가 채택한 후 회장과 서기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회록 접수)

회가 개회 또는 속회하면 서기는 전 회의록을 낭독하고 착오가 있으면 정정하여 회는 접수한다.

제16조 (회기 불계속)

회기 불계속의 원칙으로 다음 회기에 계속하자는 결의가 없으면 한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폐기된다.

제3장 동 의

제17조 (발의)

동의를 정회원만이 할 수 있다. 단, 본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18조 (성안)

의견 제시나 토론을 마무리하고 정리된 문장으로 안을 만드는 것을 성안이라 한다.

제19조 (동의 성립)

동의를 재청을 얻어야 의안으로 성립한다.

제20조 (언권)

동의를 한 회원이 토론에 먼저 언권을 갖는다.

제21조 (동의의 종류)

동의에는 원동의, 보조동의, 임시동의, 특수동의, 번안동의가 있다.

제22조 (원동의 성립)

원동이는 의사의 중심이 되는 제안으로써 원동이가 성립되기 전에는 다른 동의를 할 수 없다.

제23조 (일사부재의)

번안하기로 하는 동의가 아니면 같은 회기의 결의에 위배되는 동의는 할 수 없다.

제24조 (보조동의)

보조동이는 원동이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동이의 처리에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써 원동의보다 먼저 표결한다.

1. 수정동의

개 의와 재개의다. 원동이의 골자는 두고 조건을 고치는 것이다. 동의에 반대되는 개 의는 할 수 없으며 재개의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안(代案)이 있다. 원동이의 골자를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2. 위원회 회부동이는 토론 없이, 유기한 연가동이는 토론한 후에 다수결로 결정하며 기한이 되면 다시 상정한다.

3. 보류동이는 유기한 보류동 의와 무기한 보류동 의가 있다. 유기한 보류동 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서기가 회장에게 보고하여 재론하며 무기한 보류동 의는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론한다.

4. 아래의 동의들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1) 토론시간 제한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 2) 토론시간 연장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 3) 토론 종결동의 : 재청 있고 개의와 토론은 없다.
 - 4) 질문시간 제한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 5) 질문시간 연장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 6) 질문 종결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제25조 (동의처리)

임시동의는 부수(附隨) 동의로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원동의에 부수되는 동의거나 호소와 요구 등이 있다. 임시동의는 원동의, 보조동의보다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1. 동의의 철회는 재청이 있기 전에는 동의자의 철회 요구로 철회되지만 재청이 있으면 재청자의 승인을 얻고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개의, 재개의가 있을 때에는 개의나 재개의가 철회되거나 부결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는 다수결로 한다.
2. 규칙 일시정지 동의는 재청이 있어야 하고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재표결의 요구는 표결의 결과 발표가 의심스러울 때 회원이 재표결을 요구하면 재청, 토론, 표결 없이 즉시 회장은 재표결 요청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를 입회시켜 재표결을 지시하여야 한다.
4. 회원들이 광고나 서류공개, 회장의 사회와 결정에 대한 요구와 호소는 재청, 토론, 개의 없이 가부를 물어 다수로 결정한다. 회장에 대한 호소는 회장 자신이 가부를 묻지 못하고 부회장이나 서기가 묻는다.
5. 모든 청원서는 개회 전에 접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회의 진행 중 청원서가 서기에게 접수되면 회장은 회에 물어 접수하든지 반려하든지 하여야 한다. 토론은 있으나 개의는 없고 다수로 결정한다.
6. 심의 분할 동의는 원동의안에 두 사건 이상이 포함되어 있을 때 회원 2인 이상이 요구하면 다수로 결정하여 나누어서 가부를 묻는다.

제26조 (특수동의)

특수동의를 우선(優先)동의라고 하는데 회의 진행이나 회원의 권한에 동의이다. 이 동의는 가장 우선권이 있으므로 다른 회원의 발언 중이거나 다른 동의의 심의 중이라도 낼 수 있으며 토론없이 바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규칙상 질문

회장이나 회원이 회의법을 어길 때 “규칙이요”하여 회의의 진행을 바로 잡는 것이다. “규칙이요”하고 언권을 청하면 회장은 언권을 즉시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규칙에 관한 발언이 아니면 바로 중지시켜야 한다.

2. 긴급동의

회의순서 변경 등 회의 진행에 관련하여 시급히 결의하자고 하는 동의이다. 재청이 있어야 하고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 정회, 폐회동의

재청이 있어야 하나 토론 없이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래의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우선권이 있다.

- 1) 규칙상 질문이 있을 때
- 2) 회원이 발언 중일 때
- 3) 표결, 투표 중일 때
- 4) 속회 직후

제27조 (반안동의)

반안 동의는 가결된 것이나 부결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절대 다수자의 회원이 인정할 때 폐회전까지 재론하자는 동의이다. 재론하고자 하면 결정할 때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하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론할 수 있다.

제28조 (표결순위)

가부를 표결할 때 동의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수동의
2. 임시동의

3. 보조동의

4. 원동의

5. 변안동의

(무기한 연기동의, 보류동의, 유기한 연기동의, 위원회 회부동의, 재개의, 개의, 원동의 순이다).

제4장 발 언

제29조 (언권과 예의)

회원은 회장을 불러서 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하며, 회장에 대해서는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다른 회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제30조 (발언시간 제한)

회원의 발언은 시간을 제한할 수 없으나 회의 진행상 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회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회의가 결의하면 회원의 발언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 (발언순위)

회원 2인 이상이 일시에 기립하여 회장을 부르는 경우 회장석에서 더 먼 자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제32조 (토론순위)

토론의 순위는 제안자, 반대자, 찬성자를 번갈아 발언케 한다.

제33조 (발언회수 제한)

한 제안에 한 회원은 한번 발언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장이 허락하면 두 번까지 할 수 있다.

제34조 (회원의 품위)

회원 중에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회원이나 “규칙이요”하고 발언하고 회장은 규칙을 준수하라고 주의시켜야 한다.

제35조 (비공개 회의)

회에서 되어지는 일이 비회원들에게 알려져서 유익되지 못한 경우에는 토론 없이 다수 결의하여 방청을 불허하고 진행한다.

제5장 표 결

제36조 (표결의 의미)

표결은 회원의 찬성과 반대, 선거에서는 당선과 낙선, 심의에서는 가결과 부결을 결정한다.

제37조 (표결의 방법)

표결은 안건마다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두표결

회장이 가부로 표결할 때는 가하면 “예”하고 부하면 “아니오”를 물어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아니오”가 있으면 거수로 표결해야 한다. 단, 이의가 없을 때는 허락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거수표결

회원들이 앉아서 가와 부 또는 찬성과 반대에 각각 손을 들어 가와 부에 표결한다.

3. 투 표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를 표시한다.

제38조 (표결방법 결정)

표결의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회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회원 중 표결의 방법을 제안하면 회중에 물어 결정한다. 단, 인사 문제는 한 회원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하여야 하며 규칙, 규정의 개정은 회원 10분의 1 이상이 원하면 투표하여야 한다.

제39조 (기권 처리)

1. 일반 안건의 가부에 대한 구두 표결과 거수 표결 시 기권한 자가 있으면 다수에 속한다.
2.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시, 거수표결의 기권은 총표결수에는 계산되나 가부 표결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40조 (투표 불참 및 무효표 처리)

투표 시 참석하였을지라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총투표수에서 제외한다. 무효표는

1. 일반 안건의 결정에는 다수에 속한다.
2.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 시, 무효표는 부표에 속한다.
3. 인준 시에는 총투표수에 계산하며 다수에 속한다.
4. 선임 시는 총투표수에 계산하며 반대에 속한다.

제41조 (표결 시 발언과 이석)

표결 시에는 일체 발언을 중지하며 회원들은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제42조 (표결 시 회장의 권한)

거수 표결 시 회장은 거수하지 않으며 가부가 동수이면 회장이 결정하고 투표 시에는 회장도 투표하며 가부가 동수면 부결로 한다.

제43조 (투표수와 회원수)

투표 전에 회원수를 점검한 후 투표하고 개표위원은 투표용지를 세어서 회원수보다 모자라면 무방하나 많으면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확인하고 무효로 선언한다.

단, 확인된 표수가 결정에 영향이 없으면 다수표에서 제하기만 한다.

제44조 (개표)

개표위원은 한 사람은 부르고, 한 사람은 지켜서 보고, 한 사람은 기록한다. 회원들이 공개하기를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

제45조 (표결 선포)

개표위원은 득표 계산한 것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총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찬성수, 반대수, 무효투표수, 당선, 가결, 부결을 선포한다.

제46조 (단일 후보투표)

후보자가 1인일 시 일차 투표에서 선임되지 못하면 후보를 무효로 하고 본회에서 선임한다.

제47조 (구두 호천)

구두 호천에는 재청이 필요 없고 천거 들어온 순서대로 찬성, 반대를 표결한다. 구두 호천의 마감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48조 (동수 투표의 처리)

선임 시 동수의 표를 얻으면 임직 순위가 빠른 자로 정한다.

제49조 (표결 순위)

원동의, 개의, 재개의를 표결할 때 재개의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묻고 가결되면 개의와 동의를 묻지 않고 가결을 선포한다. 재개의가 부결되면 개의, 원동의의 순으로 가부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편한 안건은 동시에 물어 결정할 수도 있다.

제50조 (법제정의 정족수)

법, 규칙, 규정을 처음 제정할 때는 가부를 다수로 결정한다.

제6장 개정 절차

제51조 (개정)

이 규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에 미비된 것은 각 치리회가 다수로 결의하여 시행한다.

1988년 4월 제72회 총회 제정
1989년 9월 제74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한국기독교장로회

법제업무 규칙

한국기독교장로회 법제업무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법규의 체계를 통일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총회, 노회, 지 교회 및 산하기관의 법규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규

헌법, 규칙, 규정, 시행세칙과 정관 등을 말한다.

2. 법제

법규의 제정, 개정과 폐지를 말한다.

3. 수정

법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제업무 담당 부서가 의결하여 자구를 고치거나, 인용한 법규의 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용어 및 배치)

1. 법규는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며, 기관명과 법규의 명칭은 띄어 쓴다.
2. 장과 부칙은 가운데 배치하고, 조는 왼쪽 첫 자에서, 항은 두 자, 호는 네 자 띄어 시작하고, 문장은 두 자 띄어 작성한다.

제2장 체 제

제5조 (법규의 체제)

1. 법규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장은 법규의 내용을 크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만 두고, 제○장으로 표기한다.
 - 2) 조는 법규의 내용을 구분할 때 두고, 제○조로 표기한다.
 - 3) 항은 조를 세분할 때 두고, 1.2.3. 등으로 표기한다.
 - 4) 호는 항을 세분할 때 두고,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 5) 항이 1개이면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 6) 호를 세분할 때 목을 두고,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 7) 목을 세분할 때 모를 두고, ① ② ③ 등으로 표기한다.
2. 모든 법규에는 부칙을 둔다
 - 1) 부칙에는 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 2) 부칙이 2개 이상이면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 3) (시행일) “이 법규는 의결(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표기한다.
 - 4) (경과조치)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하여 다른 법규에 미치는 사항 등을 명시한다.

제3장 현 의

제6조 (법제안 제출)

1. 총회의 각 부서는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할 수 있다.
2. 노회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현의할 수 있다.

제7조 (법규의 제정안)

1. 법규의 제정 사유, 명칭, 목적, 적용 범위 등과 하위 법규에 위임할 사항을 포함한다.

제8조 (법규의 개정안)

1. 법규의 개정사유, 현행 법규와 개정안을 비교하고, 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제안 설명을 한다.
2. 신설 또는 삭제하려는 조, 항, 호는 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제안 설명을 한다.

제9조 (법규의 폐지안)

법규의 폐지에 따른 조치를 명시하고, 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제안 설명을 한다.

제4장 심 의

제10조 (심의 기준)

법제 현의안은 다음 기준으로 심의한다.

1. 현의안의 필요 여부
2. 법규의 명칭 적정성 여부
3. 법규의 체제, 용어, 부호 등의 적합성 여부
4. 다른 법규에 미칠 영향 유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 (심의 의결)

법제부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1. 체제 등이 이 규칙에 어긋나면 의결하여 수정한다.
2. 현의안을 보완하면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조, 항 또는 호를 삭제, 추가, 기각할 때는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4. 헌법위원회의 연구와 심의가 필요한 현의안은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의 결

제12조 (개정)

1. 총회의 규칙 :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규정과 정관 :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시행세칙 :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허락한다.
4. 법규의 제정 의결은 총회 일반회의규칙 제50조를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13조 (시행세칙)

법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고, 명칭은 위임한 법규의 명칭에 시행세칙이라고 붙여 쓴다.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법제를 준용한다.

제15조 (기록)

1. 신설하는 조는 관련이 많은 조 다음에 제○조의 2로, 항과 호는 끝에 배치하고 번호를 부여한다.
2. 조, 항, 호의 신설, 개정, 삭제, 폐지가 의결되면 ()안에 총회 회기를 기록한다.
* 예 (제100회 신설)

제16조 (공고)

확정된 총회의 법제사항은 총회 회보에 게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기록관리 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보관소 시행세칙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기록관리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의 책임 있는 선교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총회 제 법규에 의한 기구와 산하기관, 노회, 교회가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라 함은 기록물을 생산하는 총회·노회·교회 및 산하기관을 포괄하여 말한다.
2. “기록물”이라 함은 총회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함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총회본부는 총회역사자료관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
5.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한 문서를 말한다.

7. “전자문서보관소”란 총회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보안성 확인을 위한 게시와 문서의 영구적 보관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상의 보관소를 말한다.

제4조 (기록생산의 원칙)

1. 기록물관리기관은 본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2.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이 총회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기록물관리기관은 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하여 등록 보관하며, 관련된 사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보관소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 (기록관리의 원칙)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록관리 및 공개의 의무)

기록물관리기관은 소장기록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대내외에 적극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총회 역사자료관은 총회 산하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표준연구
3.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 승인
4. 기록물의 폐기 허가
5. 기록물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환경구축
6. 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관리대책
7. 그 밖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관리 업무)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 생산한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이관 시행
2. 수집된 기록물의 분류 및 기술
3.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및 비밀기록물 관리
4. 기록물의 보존 및 열람의 용이성을 위한 전자문서로의 변환
5. 기록물 열람 및 보존을 위한 시설 장비 구축
 - 1) 전자문서보관소의 설치 및 운영
6. 기록물 생산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7. 공인전자주소의 수집과 관리

제11조 (비밀 기록물의 관리)

1. 기록물관리기관이 비밀 기록물을 생산할 경우는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2. 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처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 비밀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전자문서의 경우 문서작성 및 보관시 별도의 보관소를 설치하고, 열람의 권한을 한정하여 부여한다.

제12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1. 총회, 노회, 교회 및 산하기관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2.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 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3.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총회역사자료관은 총회 역사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른다.
5. 모든 기록물을 공개할 때에는 해당 사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총회 지정 기록물 관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로부터 한국 교회 및 총회와 관련된 역사유적, 유물, 인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은 상태점검, 유실, 파손, 산화 방지, 사본제작 등 장기보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 (벌칙)

총회, 노회, 교회 및 산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을 징계할 수 있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반출한 자
3.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4.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또는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5. 비공개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15조 (개정)

이 규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보관소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보관소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총회와 노회, 교회가 원활하게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로서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한 문서를 말한다.
3. “전자문서보관소”란 총회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모든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보안성 확인을 위한 게시와 문서의 영구적 보관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상의 보관소로 다음의 역할을 한다.
 - 1)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 2)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4.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6.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2조에 따라 총회에 등록된 전자주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보관소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문서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1. 전자문서는 동일한 형태의 원본 문서가 전자문서보관소에 저장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다.
2.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있어도 효력을 인정한다.

제5조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제6조 (전자문서의 보관)

1.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규칙에서 정하는 문서가 보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2.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규칙에서 정하는 문서가 보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3.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총무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 2) 제2항 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제9조 (수신자가 수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으로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검색 또는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제10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았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 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송신 철회)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명시적으로 수신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1.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자는 총회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2. 총회는 공인전자주소가 형식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광고 송신의 금지)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

제14조 (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한 문서의 효력)

1. 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가 보관된 것으로 본다.
2. 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1.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전자문서보관소가 해당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증명서의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 (전자문서보관소의 준수사항)

1. 전자문서보관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 등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2. 전자문서보관소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다.
3. 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전자문서보관소는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해당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공개 등을 할 수 없다.
5. 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 등을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인적·물적 측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제정

정치 치리 총람집

2025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정치 처리 총람집

목 차

1. 교 회	411
2. 목 사	415
3. 장 로	439
4. 전도사 · 목사후보생 · 목사수련생	445
5. 당회·공동의회	448
6. 노 회	455
7. 총 회	465
8. 헌법 개정	471
9. 공천 관계	472
10. 권 징	479
11. 기 타	504

☞ 본문 중[00-000]는 제00회 총회 회의록 000쪽이라는 표시이며,

* 는 편집자 주입니다.

정치 처리 총람집

1. 교회

1) 지교회의 설립

[1] 신도가 자의로 교회 개척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는지? 적법한 절차는 어떠한 것인지?

- 할 수 없다. 신도의 교회 개척은 노회의 허락 사항이 아니다.

신도가 교회 개척을 하려면 소속 당회의 허락과 지도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단계까지 그 교회가 성장하면 『헌법』 정치 제2장 제11조 3.에 따라 교회 설립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73-145]¹⁾

* 『헌법』 IV.정치 제2장 제11조 지교회

3. 지교회의 설립

- 1) 공동으로 모이는 세례교인(입교인) 10명 이상과 전담 교역자와 예배처가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단, 특수목회를 위한 교회는 예외로 한다.
 - (1) 타 교회에서 전입되는 신도는 이명증서를 제출하게 한다. 신앙을 고백하고 새로 교인 되려는 사람은 정한 절차를 따라 충분히 심사한 후에 입회를 허락한다.
 - (2) 새로 설립되는 교회에 입회한 교인들은 별정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여 노회에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 (3) 말씀과 성례전의 정규적인 집행은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 (4) 각 지교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자체 내의 조직과 제도와 기구, 그리고 운영방식을 가급적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 2) 미조직교회가 당회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헌법 조항에 따라 처리 장로를 선임한 다음 당회를 조직한다. 노회는 신설 조직교회에서 별정의 '지교회 조직 선언서'를 낭독하여 조직 교회가 된 것을 선언한다.

1) ☞ ([73-145])는 제73회 총회 회의록 145쪽의 표시이며 *는 편집자 주입니다)

2) 교회의 직원

[1] 외국인이 본 교회의 목사, 장로의 자격이 있는지?

- 「한국기독교장로회」이므로 한국 국적 이외의 사람이 교인을 대표하고 교인을 치리하는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없다. 단, 본 교단과 선교 협약을 맺고 있는 국제협력교회 파송 목사와 장로는 예외로 한다.

【71-121, 88-166, 95-167】

(* 제87회 총회 노회 수의 결과 헌법을 개정하게 되어 제88회 총회 헌법위원회가 상충되지 않도록 보완 정리함)

[2] 교회의 직원(목사, 장로, 집사, 준목, 전도사, 권사) 또는 신도가 외국으로 이민했거나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졌을 경우 그 자격이 있는지?

- 교역자(목사, 준목, 전도사)와 신도는 영주권이 있더라도 본 교단 교인 자격이 있고, 시민권자는 자격이 없다.

【72-403, 87-297, 95-167, 99-65】

[3] 이중 국적자(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유자 포함)가 한신대학교 교수로 될 수 있는지?

- 한신대학교 직제, 내규에 따르되 보직은 맡을 수 없다. 【59-76】

[4] 정년 규칙에 제한되는 교회의 직원은?

- 각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가 선임하는 교회의 직원(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준목, 전도사)과 기타 모든 위원까지를 포함한다. 【59-76】

[5] 무흠 입교인은 어느 법조문에 해당되는지?

- 무흠 입교인이란 『헌법』 정치 제3장 제14조의 1.의 해당자로서,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제8조 2.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은 자이다. 【75-171】

* 「헌법」 IV. 정치 제3장 제14조 신도의 구분

1. 입교인(세례교인) : 세례교인과 아기세례를 받은 후 입교한 사람. 입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다.

2. **아기세례 교인** : 부모 또는 양육자의 신앙에 따라 아기세례를 받은 사람.
3. **원입교인** :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 『헌법』 V.권징조례 제1장 제8조 권징의 종류**

1. 재판 결과 범죄가 있다고 확인된 때에는 판결로 책벌을 정하며 그 기한은 정하지 않는다.
2. 책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직원에 대하여
 - (1) 직무 정지 (2) 직무 해임 (3) 정직 (4) 면직
 - 2) 신도에 대하여
 - (1) 권계 (2) 견책 (3) 수찬 정지 (4) 출교
3. 직원에게는 신도에 대한 책벌을 단과 또는 병과할 수 있다.

[6] 전도목사의 부인은 교인인가?

- 교인이다. [86-152]

[7] 65세 이전에 자원은퇴할 수 있는가?

-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 2.에 의거하여 65세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원은퇴할 수 없다. [89-155]

*** 『헌법』 IV.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2.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직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

[8] 서리집사 임기의 기준이 매년도 시작을 기준 하는지 임명일부터 만 1년으로 하는지요?

- 『헌법』 정치 제6장 제37조 집사 7항에 의거하여, 집사의 임기는 해 교회의 인사 기준을 기준으로 1년이며, 교회가 회기를 정할 수 있다. [93-183]

*** 『헌법』 IV.정치 제6장 제37조 집사**

7. 서리집사의 선임과 임기

서리집사는 당회 또는 공동의회에서 선임한다. 임기는 1년이다.

[9] 1) : “해외 영주권을 가진 목사가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 취임식 전까지 영주권을 포기한 증명서류를 노회에 제출해야 된다.”(1987년 제72회 총회부터 2015년 제99회 총회까지 발행된 총회 정치처리총람집)는 조항을 위반하고 2004년 6월 담임목사에 취임했다면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 위 목사가 노화의 추천으로 한신학원 및 기타 대외기관 이사로 파송될 수 있는지요?

3) : 위 목사가 한신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는지요?

■ 「정치치리총람집」 1.교회 2)교회의 직원 [2]에 의거하여, 영주권이 있더라도 자격이 있다. 【108-214】

2. 목사

1) 목사의 직무 구분과 임기

(1) 직무 구분과 임기

[1] 한 당회에서 부부가 담임 또는 전도목사와 부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는지와 부부 중 한 사람이 목사일 때 한 사람이 전도사로 시무할 수 있는지?

- 시무할 수 있다. 단, 전도목사인 경우에는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68-331】

[2] 전도목사 시무교회에서 부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지?

- 청빙할 수 없다.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므로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 즉, 전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청빙할 수 없다.

【68-331】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1조 목사의 직무 구분과 임기

4. 부목사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중임될 수 있고 담임목사 사임 시 함께 사임한다.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5. 부목사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가 가결하고 제직회의 찬성을 얻은 후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부목사의 계속 시무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의 찬성을 얻어 노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3] 이명하지 않고 타 노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를 본 노회에서 목사로 임직할 수 있는지?

- 임직할 수 없다.

【68-331】

[4]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당회의 결의없이 설교할 권한이 있는지?

- 담임목사가 공석인 교회의 임시당회장은 당회의 결의 없이 설교할 수 없다.

【68-331】

[5] 준목을 부목사로 임직 청원 시 목사 임직 청원은 당회 결의로 하는가, 공동의회 결의로 하는가?

- 공동의회 결의로 청빙하여야 한다. [68-331]

[6] 전도목사와 담임목사는 언제부터 당회장이 되는지?

- (1) 전도목사는 노회의 임명을 받아야 당회장이 된다.
(2) 담임목사는 노회의 청빙 허락을 받고 취임식 시 노회장이 선포한 때부터 당회장이 된다. [81-118]

[7] 자의에 의한 사임절차로써 시무 부교역자(부목사, 준목, 전도사)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당회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부목사는 『헌법』 정치 제4장 제26조 1.(시무사임)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2-159]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6조 목사의 시무 사임, 사직, 면직

1. 시무사임

목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무를 사임하려고 하면 이를 교회에 알리고 노회에 시무 사임 청원을 한다. 또는 지교회가 목사의 시무를 원치 않으면 ‘해약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 노회는 교인대표와 목사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8] 타의에 의한 사임절차로써 시무 부교역자(부목사, 준목, 전도사)가 교회에 유익이 없고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어 당회에서 사임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4.와 제22조 5.에 의거하여 당회장이 해임을 당회에 청원하고 당회에서 가결함으로써 해임된다. [82-558]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1조 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

4. 부목사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중임될 수 있고 담임목사 사임 시 함께 사임한다.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 5. 부목사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가 가결하고 제직회의 찬성을 얻은 후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부목사의 계속 시무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의 찬성을 얻어 노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9] 해약청원을 접수한 노회가 그것을 처리하면서 목사가 사임을 하지 않았을 때에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해당 목사의 '해임'을 처리할 수 있는지요? 목사해약청원을 처리하면서 재판 없이 '해임'이 아닌 '해약'이나 '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 해임할 수 없다. 혹 '해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면, 답변은 '해약할 수 있다'이다. 해약은 파송을 철회하는 것이며 노회의 결의로 할 수 있으며, 해임은 반드시 권징 처리회를 통해 해야 한다. [102-1045]

[10] 노회가 가결한 담임목사 해약은 언제부터 그 권한이 정지되는 것인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안 당회장권이나 사무권한이 지속되는 것인가?

- 1차 결의로부터 해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103-207]

[11] 담임목사 시무 사임 청원을 노회가 접수한 날부터 2년 이내인가요? 담임목사 시무 사임 청원을 노회가 의결한 날부터 2년 이내인가요?

- 노회가 허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다. [104-243]

(2) 담임목사

[1]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으나 “단, 담임목사 은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8.)에서 자원 은퇴할 수 있는 담임목사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목사로 청빙받을 수 있는지?

- 해 교회가 청빙할 시는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 [92-126]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8. 담임목사 사임으로 함께 사임된 부목사는 다음 담임목사 취임사까지 해 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없고 2년 이내에는 해 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단, 담임목사 은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담임목사 취임에서 노회의 허락이 있는 후 2개월 이내에 취임식을 거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 청빙은 유효하다. 그러나 담임목사 취임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노회는 그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지, 당회에 있는지, 노회 임원에게 있는지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3-381, 87-298】

[3]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당회장권을 정지한다”는 노회의 결의에 묶여 있는 담임목사는 설교할 수 있는지?

- 설교는 목사의 특권이므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설교할 수 있다.

【68-332】

[4]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1., 제12장 제65조와 제66조에서 1년 후 취임을 조건으로 한 담임목사 청빙 공동의회가 적절한 것인지?

- 적법하지 않다.

【73-146】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1. 조직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당회에서 후보인을 택한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투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교회는 입교인 과반수가 날인한 ‘담임목사 청빙서’와 ‘공동의회록 사본’과 ‘수도권 이외 지역 전임교역(전도사, 준목, 부목사) 경력증명서를 첨부한 ‘목사 청빙 청원서’를 각 2통씩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하고 교인대표는 노회에 출석한다. 단, 미조직 교회가 당회 조직을 허락받고 공동의회에서 장로가 파택되어 고시에 합격하였을 때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가 있다.

*** 『헌법』 IV.정치 제12장 제65조 공동의회 조직**

1. 공동의회는 교인의 총회로써 그 지 교회의 무흠 입교인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2.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 『헌법』 IV.정치 제12장 제66조 공동의회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경우
2.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4. 교단 소속에 관한 안전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지교회 예배 시의 담임목사의 직무는?

- 1) 예배는 당회가 예배모범에 따라 주관한다(『헌법』 정치 제9장 제45조 3. 예배).

- 2) 지교회 예배의 관할권은 노회가 담임목사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그 권한은 침해될 수 없다(『헌법』 정치 제4장 제19조 1. 목사와 예배).
- 3)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설교담당 분담결정은 협의사항이 아니라 『헌법』 정치 제4장 제19조 1.에 의한 담임목사(당회장)의 재량 사항이다.

【79-209】

*** 『헌법』 IV.정치 제9장 제45조 당회의 직무**

3. 예배

예배 모범에 의하여 예배를 주관하고 특별 집회를 개최하며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대로 다른 목사를 임시로 청하여 예배를 인도하게 한다.

*** 『헌법』 IV.정치 제4장 제19조 목사의 직무**

1. 목사와 예배

목사에게는 노회의 권한으로 목사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있다. 그것은 예배시에 사용할 찬송, 시편, 성경 구절의 선택과 목회 기도와 설교 및 축도의 책임이다.

- [6] 조직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담임목사가 강단에 서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러 교인들이 나누어져 각각 노회에 담임목사 해약청원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노회에서는 수습위원회를 파송하여 수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이 경우에 기존의 당회장의 당회장권은 있는지? ② 만약 당회장권이 살아있다면 수습위원회의 결의와 당회장의 의견이 상충될 때 어느 쪽이 우선인지?

- ① 당회장권이 있으며, ② 노회의 결의에 따른다.

【91-160】

- [7] 1) 담임목사 청빙시 임기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청빙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요(위배라면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1항, 제26조 1항에 근거하여 위배된다.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1조 목사의 직무 구분과 임기**

1. 담임목사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그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다.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6조 목사의 직무 사임, 사직, 면직**

1. 사무 사임

목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무를 사임하려고 하면 이를 교회에 알리고 노회에 시무 사임 청원을 한다. 또는 지교회가 목사의 시무를 원치 않으면 해약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 노회는 교인 대표와 목사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2) 민일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면 노회는 해 청빙건에 대하여 어떤 지도와 권한을 갖습니까?

- 노회가 법에 따라 지도한다. 【100-214】

(3) 전도목사

[1] 미조직교회가 전도목사 2인을 청빙할 수 있는지?

- 할 수 없다. 【72-403】

[2] 전도목사가 시무 중인 교회(미조직교회)가 당회 조직이 되어 조직교회가 되었을 경우 해 정기노회에서 담임목사 청빙 허락이 없으면 그 전도목사의 시무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 전도목사의 임기는 다음 정기 인사노회까지의 3년간이다. 단, 중도에 허락받은 전도목사도 만 2년 후 돌아오는 정기 인사노회로 임기가 만료된다. 그러므로 미조직교회가 중도에 조직되었고 담임목사의 청빙이 없더라도 다음 인사노회 시까지는 전도목사의 임기가 존속된다. 【88-831】

(* 제88회 총회 노회 수의 결과 『헌법』을 개정하게 되어 상충되지 않도록 보완함)

[3] 노회에서 시무 목사가 공식인 미조직교회에 파송하는 목사는 임시당회장인가, 준당회장인가?

- 1) 시무 목사가 공식일 때는 임시당회장
- 2) 시무 목사(전도목사)가 있을 때는 준당회장

【73-147, 87-298】

[4] 교회가 계속적으로 담임교역자 청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가 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도목사를 파송한 것에 대한 권한(적법성)이 있는지?

- 『헌법』 정치 제9장 제47조 3항에 의거하여 임시당회장을 노회가 파송할 수 있으나 전도목사 파송은 제4장 제21조 3항에 의거하여 적법하지 않다.

【92-128】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1조 목사의 직무 구분과 임기

3. 전도목사

전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교회 개척에 종사하거나 미조직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시무하는 목사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헌법』 IV.정치 제9장 제47조 당회장

3. 임시당회장은 시무목사가 공석일 경우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임명한다.

[5] 『헌법』 서식과 처리총람의 해석에 따라서 담임목사 청빙시는 ‘임시당회장’이 전도목사 계속시무 청원은 반드시 ‘대리당회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전도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서 당회조직이 허락되어 담임목사 청빙을 하게 될 때에도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당회장이 있으므로 ‘대리당회장’으로 해야 하는지요?

■ 『헌법』 정치 제9장 제47조 2., 3.에 따라 대리당회장으로 한다.

[95-29, 60, 168]

* 『헌법』 IV.정치 제9장 제47조 당회장

2.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신병이나 여행 등의 사정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그 노회에 소속한 목사 중에서 선임하여 당회장 임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다.
3. 임시당회장은 시무 목사가 공석일 경우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임명한다.

[6] 노회가 개척교회 전도목사(교회설립을 하지 않은 상태)를 준당회장으로 임명, 파송할 수 있는지요?

■ 할 수 없다.

[102-1042]

[7] 「정차처리총람집」 2.목사 (6) (1) 항에는 “전도목사는 노회의 임명을 받아야 당회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누가 임명합니까? 임시노회에서는 당회장 임명을 하지 않고 서류만 처리해 왔습니다.

■ 『헌법』 정치 제9장 제47조 1항과 5항에 의하여 당회장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명은 노회에서 한다.

[103-206, 207]

* 『헌법』 IV.정치 제9장 제47조 당회장

1. 당회장은 그 지교회의 시무목사가 된다. 담임목사는 자동적으로 당회장이 되나 그 외의 경우는 임명을 받아야 한다.

5. 준당회장은 미조직 교회의 당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회가 임명한다. 교회가 처리 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아직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1인이 준당 회장으로 당회 사무를 처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단, 재판권은 위탁판결에 맡겨야 하 며 기본재산 처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 전도목사는 곧 준당회장인가, 노회가 임명하여야 준당회장인가?

- 노회가 임명해야 준당회장이다. 【105-160】

[9] 노회로부터 교회개척을 허락받아 교회개척에 종사하는 목사는 전도목사로서 재직회원인가, 연권만 있는 무임목사인가?

- 전도목사이다. 【105-1017】

[10] 교회 개척에 종사하는 목사의 경우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계속 시무 청원을 해야 할 텐데, 그 계속 시무 청원의 청원 주체는 누구인가?

- 개척교회 목사 혹은 해당 위원회이다. 【105-1017】

[11] 개척교회 목사의 전도목사 청빙은 선교부가 청원한다는 타당한가?

- 해당 위원회가 한다. 【105-1017】

[12] '개척교회 목사의 전도목사 계속 시무는 선교부가 청원한다는 타당한가?

- 해당 위원회가 한다. 【105-1017】

(4) 부목사

[1] 부목사가 당회장을 대행할 수 있는지?

- 부목사는 담임목사 지도 하에서 그 교회를 조력하는 목사이며 위임이 없고 *임시 목사 내규에 준하며 담임목사 위탁이 있을 시 대행할 수 있다. 【40-71】
(* 여기서 임시목사라 한 것은 현행 전도목사를 지칭함 - 『헌법』 정치 제9장 제47조 2.)

[2] 장년을 앞둔 당회장이 대리 당회장을 청하여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 청원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집행하였을 시 공동의회가 합법적인가?

- 합법이다. 【72-96, 87-298】

[3] 은퇴를 앞둔 목사가 후임 교역자(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 공동의회 의장이 될 수 있는가?

- 될 수 있다. 【82-551】

[4] 1) 담임목사 사임 시 부목사는 ‘부목사 시무사임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4항,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시무사임청원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 부목사 시무사임 청원서를 노회가 수리하지 않으면 시무 자격이 유지되는지?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4항, 제22조 8항, 제91회 총회결의(91-160)에 의거하여 시무 자격이 없다. 【94-193】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1조 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

4. 부목사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중임될 수 있고 담임목사 사임 시 함께 사임한다.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8. 담임목사 사임으로 함께 사임된 부목사는 다음 담임목사 취임 시까지 해 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없고 2년 이내에는 해 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단, 담임목사 은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6조 목사의 시무 사임, 사직, 면직

1. 시무 사임

목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무를 사임하려고 하면 이를 교회에 알리고 노회에 시무 사임 청원을 한다. 또는 지교회가 목사의 시무를 원치 않으면 해약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 노회는 교인 대표와 목사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5]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 5항에서 “부목사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가 가결하고 제직회의 찬성을 얻은 후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로 되어 있는데, 담임목사 취임식 이전이라도 목사 임직 후 부목사 청빙이 넓은 의미의 법 해석으로 가능한가?

■ 가능하지 않다.

【105-158, 159】

(5) 기관 목사

[1]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두레누리 살림터의 기관목사 청빙 자격의 유무는?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5.에 의하여 가하며, 그 청빙 절차는 제4장 제22조 7.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83-177】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1조 목사의 사무 구분과 임기

5. 기관목사

기관목사는 총회, 노회, 관계기관 및 학교, 군대, 병원, 교도소, 산업시설, 복지기관 등 특수한 분야와 사회선교사로 시무하는 목사다.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 7. 기관목사의 청빙은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결의와 임명권자의 청빙에 의하여 특수한 경우는 본인의 파송 청원으로 노회가 허락한다.

[2] 기관목사가 헌의, 청원, 진정, 문의 등을 노회에 할 수 있는지?

- 기관목사는 헌의는 할 수 없고 청원, 진정, 문의는 할 수 있다.

【91-160】

[3] 기관목사가 사찰위원장, 노회장, 총회장을 할 수 있는지?

- 할 수 있다.

【91-160】

[4]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7조와 제9조에 의하면 기관목사의 경우에도 생보부담금 납부 의무와 생활비보조 신청권리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노회에 소속된 기관목사들이 다양한 활동영역에 사역하고 있는데, 총회 생활보장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관목사의 범위는?

- 기관목사의 범위는 『헌법』 정치 제4장 22조 7항에 의거하여 노회의 허락으로 『헌법』 정치 제4장 21조 5항의 기관에 시무하는 사람이며, 생보수혜대상자는 생활보장제위원회 결의에 따라 선정된다. 【92-127】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1조 목사의 사무 구분과 임기

5. 기관목사

기관목사는 총회, 노회, 관계 기관 및 학교, 군대, 병원, 교도소, 산업시설, 복지기관 등 특수한 분야와 사회선교사로 시무하는 목사이다.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7. 기관목사의 청빙은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결의와 임명권자의 청빙에 의하되 특수한 경우는 본인의 파송 청원으로 노회가 허락한다.

[5] 시찰에 속한 기관 목사가 시찰 위원이 될 수 있는지?

- 『헌법』 IV.정치 제10장 노회 제54조 노회의 직무 9.교회 시찰과, 「정치치리총람집」 2.목사 (5)기관목사 [3]에 의거하여, 노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107-168】

* 『헌법』 IV.정치 제10장 노회 제54조 노회의 직무

9. 교회 시찰

지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기 위하여 노회는 구역을 나누어 관내의 시무목사와 총대 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둔다. 시찰위원회의 그 구성과 정원은 노회가 정한다.

시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구역 내 교회의 교역자 청빙 건을 협의 지도하며 특히 약소 교회들이 연합하여 목사나 기타 교역자를 청빙하도록 권고 지도하여 교역자 없는 교회가 없도록 힘쓴다.
- 2) 구역 내 교회의 연합 사업을 기획 실시한다.
- 3) 지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경유시켜 전달한다. 단, 당회나 교인이 교회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직접 청원권은 침해하지 못한다.
- 4) 시찰 위원은 초청 여부를 불문하고 구역 내 교회 관계의 모든 집회를 방청하고 협의 지도할 수 있다.
- 5) 구역 내의 교회 상황과 위임받은 사건 및 처리 상황들을 노회에 보고한다. 이외의 시찰위원회의 임무는 노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찰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임의로 치리 관계의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나 노회가 위임한 사건에는 그 위탁받은 대로 실행하여 노회의 권한과 행사를 대행할 수 있다.

(6) 원로 목사

[1] 목사 정년 은퇴 연한의 기준을 목사 정년의 생일로 하는지, 아니면 노회에서 규정한 기준으로 하는지?

- 생일이 지난 정기 인사 노회 시까지로 한다. 【72-96】

[2] 자원 은퇴하려는 목사는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75-172】

[3] 65세 미만의 목사가 신병으로 사직하는 경우 원로목사라 할 수 있는가?

-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교회의 직원) 2.와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제106조(목사의 사직원 처리)에 의거하여 원로목사라 할 수 없다. 【82-159】

* 『헌법』 IV.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2.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사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

* 『헌법』 V.권징조례 제11장 제106조 목사의 사직원 처리

무효한 목사가 『헌법』 정치 제4장 제26조 3.(사직)에 의하여 노회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한 회기동안 여유를 두고 그 사유를 상세하게 살핀 후 결정하되 그가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유익하게 사무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직원을 수리하고 그를 노회 명부에서 삭제하며 입 교인의 이명 증서를 주어 그가 원하는 지교회로 보낼 것이다.

[4] 자원 은퇴한 목사에게 주어지는 당회장의 권한은?

- 『헌법』 정치 제9장 제47조 6항에 의거하며, 그 당회장의 권한은 전도목사에 준하는 권한으로 한다. 【91-158】

* 『헌법』 IV.정치 제9장 제47조 당회장

6. 자원 은퇴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시 당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이미 공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의 경우 공로목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원로목사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공로목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인지요?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6항에 의거하여 원로목사가 된다. 【93-183】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1조 목사의 사무 구분과 임기

6. 원로목사

원로목사는 정년 또는 자원 은퇴한 목사이다.

[6] 명예목사의 유예기간이 2009년까지라 함은 그 자격과 권리(호칭과 은봉을 포함)가 2009년까지이고 2010년부터는 그 자격과 권리가 상실되는 것인지요?

- 명예목사의 자격은 2009년까지 추대할 수 있으며, 그 권리 중 은봉은 계속되나 명예목사의 제도가 2010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목사의 직제 구분이 없어지므로 원로목사가 된다. [93-183]

[7] 어떤 목사가 명예목사의 자격을 충족시키고 지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2009년에 노회에 청원하였는데, 노회의 일정이 여의치 않아 2010년에 들어서 노회가 허락을 한 경우에 명예목사 자격이 있는 것인지요?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6항에 의거하여 명예목사 제도는 2009년까지이다. [93-183]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1조 목사의 사무 구분과 임기

6. 명예목사(2009년까지 유예기간으로 한다)

명예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사무한 목사가 그 사무를 사임할 때 지 교회가 그 공로와 명예를 보존하려고 공동의회의 결의로 은봉을 정하고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으로 추대하는 목사이다. 이 경우 그는 교회의 치리권이 없다.

[8] 70세 정년이 지난 은퇴 목사가 사임하지 않고, 개교회가 정한 정관과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어 소집할 수 있는 회의(공동의회 등)를 소집하여 결의한 안건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 유효하지 않다. [104-1065]

[9] 목사의 자원은퇴를 기을 정기노회에서 할 수 있는가?

- 노회가 정할 일이다. [108-214]

(7) 무임 목사

[1] 무임목사가 대리 당회장, 임시 당회장, 준당회장으로 될 수 있는지?

- 무임목사는 『헌법』 정치 제10장 제55조 1. 2)에 의해 연권회원이므로 대리 당회장,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없으며, 『헌법』 정치 제9장 제47조 5.에 의해 시무 목사가 아니므로 준당회장이 될 수 없다. [72-96]

* 『헌법』 IV.정치 제10장 제55조 노회의 회원

1. 2) 무임목사와 정년 은퇴한 목사는 연권만을 가진다.

* 『헌법』 IV.정치 제9장 제47조 당회장

5. 준당회장은 미조직 교회의 당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회가 임명한다. 교회가 치리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아직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1인이 준당회장으로서 당회 사무를 처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단, 재판권은 위탁 판결에 맡겨야 하며 기본재산 처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목사가 건강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계속 무임으로 있거나 3년 이상 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목사직이 자동적으로 해직된다”의 “해직”은 노회가 해직 결의 절차 없이도 서기가 처리할 수 있는가?

- 위의 질의에 해당하는 목사는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7.에 의거하여 노회의 해직 결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해직된다. 그러나 노회 서기가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헌법』 정치 제4장 제26조 3.에 따라 처리한다. 즉, 그 목사의 해직 안전을 3년 만기 직전에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가 당사자를 권고하여 사직케 하거나 이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3년 기일이 경과한 후에 자동으로 사직 처리한다.

[68-95]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1조 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

7. 무임목사

무임목사는 노회가 맡긴 상임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목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거나 3년 이상 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목사직이 자동적으로 해직된다.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6조 목사의 사무 사임, 사직, 면직

3. 사직

목사가 그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교회 발전에 유익이 없는 줄 알면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처리한다.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리고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처소가 있어도 3년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하여 처리한다.

[3] 무임 목사가 자원은퇴가 가능한지요?

-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 2항에 의거하여 가능하다. 【104-243】

* 『헌법』 IV.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2.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사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

[4] 무임목사가 자원은퇴 하였을 시에도 의결권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가?

- 『헌법』 IV.정치 제10장 제55조 노회의 회원 1. 1)에 의거하여, 무임목사가 자원은퇴 하였을 시에도 의결권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106-157】

* 『헌법』 IV.정치 제10장 제55조 노회의 회원

1. 1) 시무목사와 자원 은퇴한 목사는 의결권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목사의 임직 자격

[1] 군중사관 후보생의 조기 안수 혜택은?

- 목회 경력 2년이 되지 못했을 때는 그 기간이 되기까지 노회 정회원권을 중차하여 허락한다. 【70-367】

(* 3년에서 2년으로 수정- 목사 임직경력 2년)

[2] 군중사관 후보생이 준목고시에 완전 합격했을 경우 군목 입대 연도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임직할 수 있는지?

- 군중사관 후보생이 준목고시에 합격하고 국방부의 소집 통보가 총회에 접수된 후 노회에 통보되면 심의하여 임직할 수 있다. 【70-43】

[3] 목사 임직 안수시 누가 안수함이 가한지?

- 목사가 안수한다. 【50-61】

[4] 목사의 자격 조항 중 단독 목회 경력 조항 삽입은?

- 각 노회에서 권장하기로 한다. 【68-332】

[5] 신학대학 입학 전 노회 인허 전도사 자격으로 목회한 것은 교역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시무한 것만 목사 임직시 교역 경력으로 인정한다. 【68-330】

(* 신학대학 졸업 전 노회 고시에 합격한 전도사의 효력은 그 노회에 한한다.)

[6] 신학대학원 재학 시 교역경력은 인정되는지?

- 1986년도 이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신학대학원 재학시 전도사 자격이 있는 신학대학 출신 대학원생이 교역한 것은 인정되나, 전도사 자격이 없는 신학대학원생이 교역하는 것은 교역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헌법』 정치 제7장 제39조). 【68-330】

*** 『헌법』 IV. 정치 제7장 제39조 전도사**

1.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장의 임명으로 지교회를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로서 당회가 허락하면 언론회원이 될 수 있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이 위임하면 제직회의 대리 회장이 되며 예배 인도의 책임도 대행한다.

2.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는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남녀로서 총회 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기타 신학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총회가 운영하고 있는 목회신학대학 졸업자로 한다.

3. 전도사의 청빙과 임기

전도사의 청빙은 당회장의 추천으로 당회가 결의하고 제직회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전도사의 임기는 1년이며 계속 시무절차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찬성으로 하며 매년 시행하도록 한다.

[7] 총회 직속 기관의 유급 직원의 교역 경력 인정은?

- 1. 총회 본부와 교육원의 유급 직원, 총회 직속 기관인 한신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요원
- 2. 남·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유급 직원
- 3. 노회 남·여신도연합회, 청년회 연합회 유급 직원
- 4. 중·고등학교 성경교사, 기독교연합기관의 유급 직원은 노회가 전도사 자격자로 파송하였을 경우 교역 경력으로 인정한다. 【68-331】

[8] 목사의 자격 중 노회 지도회의 2년 이상의 전담 교역이 있어야 하는데 '전담 교역'의 의미는?

- (1) 『헌법』 정치 제4장 제20조 2.의 '전담 교역'의 '전담'의 의미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교역에만 전임하는 것을 말한다.
- (2) 총회, 노회 등 기관에 사역하는 것도 목사의 자격에 포함된다.
- (3) 1986년 이전에 한신대학 신학과에 입학하여 후에 졸업한 목사후보생에 대해서는 그 자격이 고시규정 전문에 의거하여 2000년까지 유효하다. 【81-117】

*** 『헌법』 IV. 정치 제4장 제20조 목사의 자격**

- 2.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한 준목으로서 노회와 총회 지도회에 2년 이상의 전담 교역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단 군목으로 입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7. “무임목사는 노회가 맡긴 상임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의 “상임 시무처”란?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1. 담임목사, 2. 동역목사, 3. 전도목사, 4. 부목사, 5. 기관목사대로 노회가 정식으로 허락 및 파송한 시무처가 상임 시무처이다.

【68-95】*** 『헌법』 IV. 정치 제4장 제21조 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1. 담임목사**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그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다.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 동역목사

동역목사는 교회 합병으로 다른 목사와 협동 시무하는 목사로서 그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고 순번으로 당회장직을 수행하며 일방이 시무를 사면할 경우 자연 전권으로 시무한다.

3. 전도목사

전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교회 개척에 종사하거나 미조직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시무하는 목사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부목사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중임될 수 있고, 담임목사 사임 시 함께 사임한다.

5. 기관목사

기관목사는 총회, 노회, 관계 기관 및 학교, 군대, 병원, 교도소, 산업시설, 복지기관 등 특수한 분야와 사회선교사로 시무하는 목사다.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10]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과 협력하지 않는 교단(단체)에서 목사안수위원으로 활동해도 되는지요?

■ 활동할 수 있다. [96-185]

* 『헌법』 IV.정치 제4장 제19조 목사의 직무

2. 목사의 성례 집행

본 교단 목사는 두 가지 성례전, 곧 세례와 성찬례를 당회의 결의 또는 노회의 허락으로 집행할 권한이 있고 새로 세례받은 사람들을 지교회에 입적시킬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다른 교파, 교회, 교회연합회, 기타 특수한 경우에 요청을 받으면 자기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한 성례를 집행하거나 참례할 수 있다.

3) 목사 청빙 및 청빙 허락

[1] 청빙받은 목사가 현재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시무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청빙서만 노회 개최 전에 접수하여도 이를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할 수 있다. [60-120, 87-299]

[2] 조직교회가 특별한 경우 전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지?

■ 할 수 없다. [60-120]

[3] 타 노회 목사를 청빙하는 지교회 청빙 허락 청원서를 받아 법대로 결의하여 조회서와 청빙서를 소속 노회에 보내서 그 노회가 청빙받은 목사에게 청빙서를 전달하고 이명 증서를

본 노회 서기부에 발송하여 접수되었을 시 어떻게 하는가?

- 그 노회는 다시 모여 그 목사를 받기로 결의하고 취임식을 거행해야 한다.

【60-121】

[4] 목사가 법에 의하여 기소되어 재판중에 있을 때 노회의 허락없이 교회의 청빙을 받아 시무할 수 있는지?

- 재판중에 있는 목사라 하더라도 청빙을 받을 수 있으며 노회가 허락하면 시무할 수 있다.

【72-97】

[5] 행정의 보류를 선언한 상태에서 해 당회장이 타 교회로 청빙되어 이동할 수 있는가?

- 『헌법』 정치 제4장 제23조 1.에 의하여 노회가 허락하면 이동할 수 있다.

【74-135】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3조 청빙 허락**

1. 동일노회 목사 청빙

노회는 제출된 ‘목사 청빙 청원서’를 접수하고 허락할 것을 결의하면 청빙 받는 목사에게 ‘청빙서’를 교부하고 2개월 이내에 취임식을 거행한다.

[6] 기소되어 재판하고 있는 목사를 모교회에서 청빙하고자 하여 공동의회를 할 때 재판중에 있는 재판국장이 임시 당회장이 되어 공동의회를 주관할 수 있는지?

- 당회가 결의하였으면 재판국장이라도 대리 당회장으로 공동의회를 주관할 수 있다.

【72-97】

[7] 『헌법』 정치 제4장 제23조 3.(타 교파 목사의 편입)의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개혁신교회”를 어떻게 규정지를 것인가?

- 원칙적으로 세계개혁신교회커뮤니언(WCRC)에 가입한 교단으로 한다.

【59-75】

[8] 『헌법』 정치 제4장 제23조 3. 타 교파 목사의 편입 란 중 ‘타 개신교파’와 ‘타 교파’를 어떻게 규정지를 것인가?

- 타 개신교파에 대해서는 제59회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세계개혁신교회커뮤니언(WCRC)에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

회(합동정통)로, 타 교파에 대해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성회, 구세군대한본영, 대한성공회, 한국정교회로 한다. 【82-555】

(* 편집자주 :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 정치 제4장 제23조 청빙 허락 3. 타 교파 목사의 편입 개정의 건이 허락됨)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3조 청빙 허락**

3. 타 교파 목사의 편입

타 교파 소속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소속될 노회의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관할 노회에 가입을 신청한다.
- 2) 목사 2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국가가 공인한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노회의 가입 청원 후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헌법』을 포함한 위탁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점은 총회 고시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본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을 경우 위탁교육은 면제한다.
- 4) 위탁교육 이수 후 목사 편입고시(헌법, 면접)에 합격한 후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9] 담임목사의 청빙을 위한 투표는 인준의 투표인지, 선임의 투표인지?

- 인준의 투표이다. 【81-118, 87-299】

[10] 「총회 일반회의 규칙」 제40조(투표 불참 및 무효표 처리) 3. ‘인준 시에는 총투표수에 계산하여 다수에 속한다.’와 4. ‘선임 시는 총투표수에 계산하여 반대에 속한다.’에서 “인준”과 “선임”의 의미는?

- 정해진 사람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때는 인준이고 (예. 목사청빙 투표), 다수에 서 1인 또는 정해진 수를 투표할 때는 선임이다. (예. 장로선거 투표)

【82-563, 87-299】

[11] 담임목사를 청빙하려고 후보인을 택하기 위하여 당회원이 여러 후보인을 놓고 논의하다가 투표로 결정하자고 하여 투표하였을 시 이것은 ‘인준’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아니면 ‘선임’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 이것은 인준이나 선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 결의로 해석해야 한다.

【82-563】

[12] 목사 청빙 등 인사문제는 어디에서 다루어야 하는가?

- 총회 헌법에는 교역지도위원회가 없으므로 목사청빙 등 인사문제는 정치부에서 다루어야 한다. [82-162]

[13] 전도목사 계속 시무 청원은 누가 해야 하는가?

- 반드시 대리당회장으로 사회하고 대리당회장 이름으로 청원해야 한다. [84-108]

[14] 미조직교회가 해 교회 장로 후보자가 장로고시에 합격할 것을 전제로 하고 담임목사 청빙 허락 청원서를 제출해 노회는 장로 합격자를 먼저 발표하고 다음 순서로 담임목사 청빙 허락 청원을 허락하는 것이 적법한지?

-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1.에 의거하여 적법하지 않다. [90-292]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1. 조직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당회에서 후보인을 택한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투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교회는 입교인 과반수가 날인한 ‘담임목사 청빙서’와 ‘공동의회록 사본’과 ‘수도권 이외 지역 전임교역(전도사, 준목, 부목사) 경력증명서를 첨부한 ‘목사 청빙 청원서’를 각 2통씩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하고 교인 대표는 노회에 출석한다. 단, 미조직 교회가 당회 조직을 허락받고 공동의회에서 장로가 피택되어 고시에 합격하였을 때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가 있다.

[15] 노회에서 당회조직 허락을 받은 교회가 본 교단 소속 무임장로를 선출하였을 때 무임장로의 취임을 전제로 한 담임목사 청빙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 [90-293]

[16] 무임장로의 취임을 전제로 한 담임목사 청빙이 가능한지?

- 노회에서 당회 조직 허락을 받은 교회가 본 교단 소속 무임장로를 선출하였을 때에는 담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할 수 있다. [90-293]

(* 편집자주 : 「정치치리총람집」 2.목사 4)담임목사 취임식 4번 질의와 이어짐)

[17]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지교회에서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청빙을 하여 목사 임직을 받을 수 있지?

- 『헌법』 정치 제4장 제20조 2항, 제24조, 「정치치리총람집」 2.목사 2)목사의 임직 자격 (8)의 해석과 『헌법』 정치 제4장 제18조 2항에 따른다.

[92-128]

*** 『헌법』 IV.정치 제4장 제18조 목사의 의의**

2. 목사의 직분

목사는 본래의 인간성으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인간으로나 일반 신자와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맡은 직책 때문에 일반 신자와 구별된다. 전적으로 교회를 담임하고 섬긴다는 의미에서 그 직책은 교회에서 가장 존엄하고 유용한 전문가적 직책이다. (이하 생략)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0조 목사의 자격**

2.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한 준목으로서 노회와 총회 지도하에 2년 이상의 전담 교역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단, 준목으로 입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4조 목사의 임직**

목사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노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노회의 주관으로 임직식을 거행한다. 임직식의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18] 총회 산하기관(총회 본부나 총회 교육원 등)이 직원인 준목을 목사임직(안수) 후 기관목사로 청빙하고자 할 때 노회의 목사임직(안수)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6항(7항)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의 결의와 임명권자가 청빙하고, 『헌법』 정치 제24조에 따라 노회의 주관으로 임직식을 거행한다.

[94-194]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6. 목사 청빙서는 청빙 받은 목사의 소속 노회에 제출하고, 그 노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청빙 받은 목사에게 그것을 교부한다.
7. 기관목사의 청빙은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결의와 임명권자의 청빙에 의하되 특수한 경우는 본인의 파송 청원으로 노회가 허락한다.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4조 목사의 임직

목사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노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노회의 주관으로 임직식을 거행한다. 임직식의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19] 남편 목사가 은퇴한 후 부인이 연속해서 목회해도 되는지?

- 적절한 절차로 청빙되면 할 수 있다. [101-259]

[20] 부인이 노회가 운영하는 신학원 졸업자로서 노회가 자체적으로 인정한 전도사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부교역자가 아니라, 담임목회자로 사무하갔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해당 노회에서는 할 수 있다. [100-216]

4) 담임목사 취임식

[1] 미조직교회에서 장로 후보자가 장로고시에 합격하여 장로 임직을 해야 되는데 같은 날 장로 임직식과 담임목사 취임식을 해도 되는지?

- 장로 후보자가 노회 장로고시에 합격하였고 다음 노회 시 담임목사 청빙청원이 허락되었으면 장로임직식과 담임목사 취임식을 같은 날 할 수 있다.

[90-292]

[2] 미조직교회에서 장로 후보자가 노회 장로고시에 합격하였고 다음 노회 시 담임목사 청빙청원이 허락되었을 때, 장로 임직식과 담임목사 취임식을 같은 날 할 수 있다면 그 순서는?

- 같은 날 장로 임직식과 담임목사 취임식을 할 때, 당회장이 장로 임직식을 먼저 하고 다음에 노회장이 담임목사 취임식을 해야 한다.

[90-293]

[3] 당회원이 한 명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여 노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이 허락되었는데, 담임목사 취임 전에 장로가 사임하여 당회록에 그 사임이 기록되었는바 담임목사 취임식을 할 수 있는지?

- 담임목사 취임할 수 있다. [91-158]

[4] 무임장로의 취임을 전제로 한 담임목사 청빙이 가능하다면 노회장이 담임목사 취임식을 잡례하고 같은 날 그 담임목사가 장로 취임을 해야 합니까?

- 목사가 장로 취임식을 먼저 하고 같은 날 노회장이 담임목사 취임식을 잡례한다.

【90-293】

(* 편집자주 : 「정치치리총람집」 2. 목사 3)목사의 청빙 및 청빙 허락 16번 질의에 이어짐)

[5] 장로의 유고로 인한 폐 당회가 된 가운데 그 이후로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조직 교회가 된 경우에 담임목사 취임식을 거행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경과한 것에 한하여 해야 하는지?

- 『헌법』 정치 제9장 제44조 2항에 의거하여 두 정기노회를 경과하였으면 취임식을 거행해야 한다.

【92-128】

* 『헌법』 IV. 정치 제9장 제44조 당회의 조직

2. 시무장로가 공석이 되어 폐당회가 되면 즉시 노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정기노회 기간에 재조직 준비를 못하고 두 정기노회를 경과하면 담임목사는 자동으로 전도목사가 되며, 당회 조직 시까지 준당회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장로

[1] 피택된 장로가 피택 6개월 전에 고시를 받을 수 있는가?

- 고시 청원은 할 수 있으나 피택 6개월 전에 고시를 받을 수 없다.

【71-122】

[2] 장로 정년 은퇴 연한의 기준이 장로의 정년 생일로 하는지, 아니면 해 연도 말일까지 하는가?

- 연도 말일로 한다.

【75-468, 87-299】

[3] 『헌법』 정치 제5장 제34조 3.“자의 사임 혹은 자의 사직자는 1년이 경과한 후, 본인이 청원할 때”의 문구 중 “자의 사직자”에 자원은퇴도 포함시킬 수 있는가?

- 자원 은퇴자는 자의 사직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

【86-152】

* 『헌법』 IV.정치 제5장 제34조 장로의 복임과 복직

3. 자의사임 혹은 자의사직자는 1년이 경과한 후, 본인이 청원할 때 당회가 심사하고 공동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복임, 복직한다.

[4] 『헌법』 정치 제5장 제35조에 “원로장로는 정년이 되어 은퇴한 장로”로 규정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자원 은퇴한 장로도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가?

- 자원은퇴 장로의 사무경력이 10년 이상일 때에 당회는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86-151, 88-832】

* 『헌법』 IV.정치 제5장 제35조 원로장로

- 원로장로는 정년이 되어 은퇴한 장로이며 제직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단, 자원은퇴 장로의 사무경력이 10년 이상일 때에 당회는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5] 『헌법』 정치 제9장 제44조의 사무장로가 사무 사임하면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준당회장 의 임명을 받아야 하는가, 정기노회에 보고해야 하는가?

-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85-149】

*** 「헌법」 IV.정치 제9장 제44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교회의 치리회로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며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조직 성원이 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선정한다.
2. 시무 장로가 공석이 되어 폐당회가 되면 즉시 노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정기노회 기간에 재조직 준비를 못하고 두 정기노회를 경과하면 담임목사는 자동으로 전도 목사가 되며, 당회 조직시까지 준당회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미조직 교회가 당회를 조직하려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고 장로를 선출하여 노회의 고시와 임직 후 당회를 조직한다.

[6] 장로 사임 후 두 정기노회 기간을 지나도록 당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그동안은 당회장인가, 준당회장인가?

- 당회장이다. [85-149]

[7] 장로 사임 후 두 정기노회 기간을 지나도록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 소집할 수 있다. [85-150, 88-168]

*** 「헌법」 IV.정치 제12장 제65조 공동의회 조직**

1. 공동의회는 교인의 총회로써 그 지교회의 무흠 입교인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2.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 「헌법」 IV.정치 제12장 제66조 공동의회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경우
2.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3. 상회의 지사가 있을 경우
4. 교단 소속에 관한 안건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 장로가 시무 사임서를 제출하였는데, 보류 중에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 장로가 1인일 때는 소집할 수 없다. [85-150]

[9] 시무장로 사표 제출 중에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공동의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 당회 결의가 없어도 소집할 수 있다. [85-150, 88-168]

[10] 타 노회에서 이명하여 해 노회의 교회에서 다시 취임하여 시무하는 장로는 임직 일을 타 노회에서 임직한 날로 계산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명하여 해 노회의 교회에서 신임을 받아 취임하여 시무하는 새로운 날을 임직한 날로 계산해야 하는가?

- 장로는 당회에 속하나 임직은 범교단 차원이므로 임직한 날로 계산해야 한다. [85-150]

[11] 당회 조직 허락을 노회로부터 받았고 공동의회에서 법 절차에 따라 장로로 피택되었다면 정당한 것인가?

- 정당하다. [86-152]

[12]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 조직 허락을 받아 장로 후보를 피택하고 노회고사를 치루었는데 이때 피택된 장로 후보가 목사 사모일 경우에 장로 임직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86-152, 88-168]

[13] 배부된 투표용지가 투표하기 전에 투표위원에게 되돌려졌을 때 그 표는 계수하는가, 아니면 계수하지 않은가?

- 투표시 투표함 내에 있는 표는 계수하고, 투표함 내에 있지 않은 표는 계수하지 않는다. [86-152]

[14] 장로 선출할 때 투표 없이 구두 가부를 물어 선출할 수 있는가?

- 장로 선출은 반드시 투표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로 선출한다. [88-168]

* 「헌법」 IV.정치 제5장 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1. 장로 선출은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사람을 선임한다.
2.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를 조직하고자 하면 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을 때 노회의 허락을 얻어 장로를 선출한다.
3. 장로의 증원은 입교인 20인에 1인 비례로 증원할 수 있다. 장로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4. 사임, 사직, 면직, 이명 등의 사유로 무임으로 있는 사람은 다시 선임 후 시무할 수 있

다. 전입자와 타 교단에서 임직한 사람은 1년 이상 신도로서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사람으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15] 『헌법』 정치 제5장 장로 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4.에서 “전입자는 1년 이상 신도로서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자라야 선출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때 전입자는 타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다가 전입 온 자인가, 아니면 무흠입교인으로 있다가 전입 온 자인가?

- ‘전입자’란 『헌법』 정치 제5장 장로 제30조 장로의 자격에 합한 자를 말한다.

[88-169]

* 『헌법』 IV.정치 제5장 제30조 장로의 자격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담전 3:1-7에 해당하고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라야 한다.

* 『헌법』 IV.정치 제5장 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4. 사임, 사직, 면직, 이명 등의 사유로 무임으로 있는 사람은 다시 선임 후 시무할 수 있다. 전입자와 타 교단에서 임직한 사람은 1년 이상 신도로서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사람으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16] 본 교단 소속 무임장로가 공동의회에서 시무장로로 선출되었을 때에는 취임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 본 교단 소속 장로이므로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

[90-293]

[17] 장로가 시찰위원장, 노회장, 총회장을 할 수 있는지?

- 할 수 있다.

[91-160]

[18] 장로 취임 집례를 노회장이 해야 하나까? 그 교회 목사가 해야 하나까?

- 장로 취임식은 당회의 사항이므로 그 교회 목사가 한다.

[90-293]

[19] 『헌법』 정치 제5장 제31조 장로의 휴무, 사임, 사직, 면직 휴양 3.권고사항에서 “시무장로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할 경우 또는 교인의 다수가 그 시무를 원치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 결의로 사임된다.”는 법을 근거로 공동의회에서 장로 권고 사임을 결의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하는 것이 옳은가, 3분의 2로 하는 것이 옳은가?

- 『헌법』 정치 제12장 제69조에 의거하여 위 공동의회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다. 【92-128】

＊ 『헌법』 IV.정치 제12장 제69조 의결 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하고, 재산 취득의 권은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며, 교회의 교단 탈퇴 및 재산 처분의 권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단, 유지재단 등록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 [20] 『헌법』 정치 제5장 제31조 4항 전입자의 1년 기산일은 임직한 교회에서 제직할 날부터, 개척 청원을 노회가 허락한 날부터, 교회 설립을 노회가 허락한 날부터, 설립공인예배를 드린 날부터 중 언제부터인가?
- 개척 청원을 노회가 허락한 날부터이다. 【100-67】

- [21] 1) 『헌법』 정치 제5장 제30조 장로의 자격지를 제31조 1항에 의거하여 당회가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선출할 “수”를 결의할 때, 성별 구분 없이 선출할 “수”를 결의하는 것인지요?
 2) 성별을 구분하여 남자만 몇 명, 또는 여자만 몇 명, 혹은 남녀 각각 몇 명이라고 결의해도 되는지요?
 3) 지교회의 여건에 따라 위의 1)과 2)를 선택하여 결의해도 되는지요?
- 『헌법』 정치 제5장 제31조 1항에 의거하여 당회가 결의하면 가능하다. 【101-262】

＊ 『헌법』 IV.정치 제5장 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1. 장로 선출은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은 사람을 선임한다.

- [22] 「총회 규칙」과 「정치처리총람집」과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은 장로의 정년에 연도 말 일로 되어 있고, 재임기간 중 정년에 해당되면 선임될 수 없고, 임기 중 정년에 해당될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총회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임기 중 정년에 해당될 자들도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요?
- 『헌법』 정치 제1장 제6조에 의거하여 해 노회가 결정한다. 【102-205】

* 『헌법』 정치 제1장 제6조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품, 자격, 권위, 선거, 임직에 관한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어떤 회에서든지 직원을 선거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23] 장로가 타 교회 임직예식(장로, 권사, 안수집사)에서 안수할 수 있는가?

- 해당교회 당회가 허락하면 할 수 있다.

【105-158】

[24] 독립교단에 소속된 장로가 기장교단에 가입하면서 장로 임직 절차(공동의회 투표, 노회 장로교육 및 고시) 통해 장로로 취임한 것이 적절한 절차인가? 위법인가?

- 적법하다.

【107-1148】

4. 전도사·목사후보생·목사수련생

[1] 여전도사 채용에 관한 법 준수에 대하여?

- 각 교회로 하여금 준수케 한다(『헌법』 정치 제7장 제39조 3. 참조).

[68-332]

* 『헌법』 IV. 정치 제7장 제39조 전도사

3. 전도사의 청빙과 임기

전도사의 청빙은 당회장의 추천으로 당회가 결의하고 제직회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전도사의 임기는 1년이며 계속 시무절차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찬성으로 하며 매년 시행하도록 한다.

[2] 시무처를 잃은 해 노회의 전도사 자격은?

- 해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전도사의 자격은 해 노회 내에서는 시무처를 잃었을지라도 자격이 유효하다.

[82-160]

[3] 지교회에서 전임사역을 하지 않고 총회 산하기관(총회 본부나 총회 교육원 등에서 전임 사무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노회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1항, 「정치치리총람집」 2. 목사, 2)목사의 임직 자격, [기총회 직속 기관의 유급 직원의 교역 경력에 의거하여 총회 산하기관은 해 기관에서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할 수 있고, 소속 노회가 해당 기관을 목회현장으로 허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94-194]

*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목회실습)

1. 수련생은 목회실습을 하는 동안 소속한 노회의 지도를 받고, 소속 교회에서 수련과정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속 교회가 아닌 곳에서 목회실습을 원하는 수련생은 소속 노회의 허락으로 다음의 각 호에서 수련과정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수련방법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 1) 총회 산하기관과 유관 에큐메니컬 협력 및 선교기관
 - 2) 총회 사회선교사 운영위원회가 허락한 특수선교지 또는 기관
 - 3) 개척 및 단독 목회
 - 4) 해외

[4] 일반대학 출신자가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할 때, 노회의 목사 후보생이 된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험에 합격한 후 노회 목사후보생이 되어야 하는지?

- 『헌법』 정치 제7장 제40조 4항에 의거하여 목사후보생은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신학생들이므로 입학시험에 합격한 후 목사후보생이 되어야 한다.

[94-195]

* 『헌법』 IV.정치 제7장 제40조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4. 노회가 공인하는 목사후보생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2학년생부터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신학생과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총회 위탁교육과정에 있는 신학생이다.

[5] 타 신학대학 및 타 신학대학원생을 노회 목사후보생으로 공인할 수 없는가?

- 없다.

[82-161]

[6] 1) 노회 목사후보생이 아니더라도 준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가?

- 없다.

2) 또한 목사후보생이어야만 할 경우 언제 목사후보생으로 공인해 줄 수 있는가?

- 위탁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이다.

[82-162]

[7] 타 신학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전담교역 경력은 타 신학대학원 졸업 이후인가, 총회 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1년 이상 위탁 필수이수과목 24학점을 이수한 이후부터인가?

- 위탁 이수과목 24학점을 이수한 이후부터이다.

[82-162]

[8]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는 목사후보생이 아닌지, 또한 노회가 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졸업한 이후라도 준목인허 전까지는 목사후보생으로서 계속해서 노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82-162]

[9] 외국 국적 유학생 신분으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후보생이 될 수 있는지?

- 될 수 없다.

[98-176]

[10] 외국인, 외국 국적(시민권)을 가진 자가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마치고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가?

- 「총회 정치치리총람집」 '1.교회 2) 교회의 직원 [2]'에 의거하여 응시할 수 없다. 【99-68】

[11] 신학대학원 졸업 후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전도사가 개척교회 담당교역자로서 역할수행 및 생보수혜자로 총회 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 「헌법」 IV.정치 제7장 제39조 전도사 2.전도사의 자격과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9조(심사기준) 1. 2)에 의거하여, 수혜 자격이 있다. 【106-157】

* 「헌법」 IV.정치 제7장 제39조 전도사

2.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는 무함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남녀로서 총회 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기타 신학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총회가 운영하고 있는 목회신학 대학 졸업자로 한다.

*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9조(심사기준)

1.2) 개척 교회에서 단독 목회하는 목사, 준목, 전도사

5. 당회 · 공동의회

[1] 『헌법』 정치 제9장 제51조에 있는 “한 지역 안에 둘 이상의 당회가 있으면 유익한 공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다”의 ‘한 지역에 대한 범위와 2개 시찰위원회에 속한 25개 교회 이상이 연합 당회를 조직하고 있는 것이 ‘한 지역 범위에 속하는지?

- 한 지역은 시찰 구역으로 하되 인접한 시찰 구역의 원하는 당회로 한다.

【73-381】

[2] 당회가 선임한 교회재산관리위원장을 임시 당회장 명의로 당회원들과는 협의 없이 교체할 수 있는가?

- 당회 결의없이 임시당회장은 교회재산관리위원장을 교체할 수 없다.

【68-96】

[3] 『헌법』 정치 제9장 제44조의 “두 정기노회를 경과하면 담임목사는 자동으로 전도목사가 된다”라는 내용 중 1회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 정기회는 인사 노회를 기준으로 1회기이다.

【84-108】

* 『헌법』 IV. 정치 제9장 제44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 교회의 치리회로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며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조직 성원이 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선정한다.
2. 시무장로가 공석이 되어 폐당회가 되면 즉시 노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정기노회 기간에 재조직 준비를 못하고 두 정기노회를 경과하면 담임목사는 자동으로 전도목사가 되며, 당회 조직시까지 준당회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미조직 교회가 당회를 조직하려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고 장로를 선출하여 노회의 고시와 임직 후 당회를 조직한다.

[4] 어떤 경우 폐당회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담임목사가 취임하기 전에 장로가 사임하여 폐당회되는 경우와 담임목사 취임 후에 장로가 사임하여 폐당회 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

- 『헌법』 정치 제9장 제44조 2항에 근거하여 노회 허락 후 폐당회 효력이 있다.

【91-158】

* 『헌법』 IV. 정치 제9장 제44조 당회의 조직

2. 시무장로가 공석이 되어 폐당회가 되면 즉시 노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정기노회 기간에 재조직 준비를 못하고 두 정기노회를 경과하면 담임목사는 자동으로 전도목사가 되며, 당회 조직시까지 준당회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5] 당회가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의 내용과 준당회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의 내용의 한계는 무엇인가? 『헌법』 정치 제9장 제47조 5항에 준당회장의 직무의 한계(『헌법』 정치 제9장 제45조의 당회의 직무 중 처리할 수 있는 인간과 처리할 수 없는 인간을 구분는 무엇인가?)

- 권징조례와 재판권 및 기본재산 처리는 할 수 없다. [91-159]

* 『헌법』 IV. 정치 제9장 제47조 당회장

5. 준당회장은 미조직 교회의 당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회가 임명한다. 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아직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1인이 준당회장으로서 당회 사무를 처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단, 재판권은 위탁 판결에 맡겨야 하며 기본재산 처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노회가 문제 교회의 담임목사와 장로의 신임을 묻기 위해 해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 소집할 수 없다. [93-185]

[7] 노회가 해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면, 노회의 결의로 구성된 전권위원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

- 공동의회 소집은 『헌법』 정치 제12장 제66조에 의거하여 당회장이 소집하여야 하고, 노회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66조 2항에 의거하여 당회에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93-185]

* 『헌법』 IV. 정치 제12장 제66조 공동의회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경우
2.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4. 교단 소속에 관한 안전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 회원이 공동의회에 불참하고 제삼자에게 회원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요?

- 『헌법』 정치 제12장 제67조에 의거하여 공동의회 회원권은 위임할 수 없다.

【93-186】

*** 『헌법』 IV.정치 제12장 제67조 공동의회의 개회 성수**

당회는 공동의회의 의안, 일시, 장소를 1주일 이전에 공고하고 그때에 회집된 회원 수대로 개회한다.

[9] 위임권을 가지고 행사한 공동의회 안건이 결의된 사항이 유효한지요?

- 위임된 회원권이 가부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이면 무효이며, 영향이 없으면 다수표에서 제한다.

【93-186】

[10] 미조직 교회의 “당회 조직 허락”이 임시노회에서는 아니되는지요?

- 『헌법』 정치 제10장 제54조 노회의 직무 2.청원안건과 4.사업에 의거하여 할 수 있다.

【95-166】

*** 『헌법』 IV.정치 제10장 제54조 노회의 직무**

2. 청원안건

각 당회가 규정대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진정, 문의 건 등을 접수 처리한다.

4. 사업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 병합, 이관, 폐지와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등의 안건을 심의 결정하며, 전도, 교육, 봉사, 재정 관리 등 일체를 지도하며 그러한 사업을 직영도 한다.

[11] 1) 임시당화장이 제직을 임명할 수 있는가?

- 당회가 결의하면 할 수 있다.

【97-177】

2) 임시당화장이 예결산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 당회가 결의하면 할 수 있다.

【97-177】

3) 교회 재산을 임시당화장 앞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

- 할 수 없다.

【97-177】

*** 『헌법』 IV.정치 제9장 제45조 당회의 직무**

5. 임직

장로의 임직을 주관하고 집사와 권사를 임명하며, 전도사,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 관리인, 기타 각종 임시 직원들을 임명한다.

9. 재정 및 재산 관리

교회의 재정 정책을 수립 감독하여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12]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에서 당회장이 해약청원의 대상자일 경우 당회에서 거론하거나 당회장에게 통보하는 절차 없이 부전지를 붙여 목사해약청원서를 상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요?

■ 당회장에게 반드시 안건을 거론하거나 통보해야만 한다. 【102-207】

[13] 주일 오후 예배 시 구두로 광고하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 구두 광고는 공고(광고)의 수단이 될 수 없다. 【104-242】

[14] 사무장으로 권고 사임의 건을 다루기 위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는 제직회의 결의를 받고 공동의회 의장이 당회의 결의 없이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한 것은 불법인가?

(『헌법』 정치 제12장 제66조, 제13장 제70조)

■ 합법이다. 【104-242】

*** 『헌법』 IV.정치 제12장 제66조 공동의회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경우
2.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4. 교단 소속에 관한 안건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헌법』 IV.정치 제13장 제70조 제직회의 직무**

제직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수지 및 감사
3. 선교, 봉사, 구제를 위한 활동
4. 기타 필요한 일

[15] 공동의회 개표 과정에서 투표수와 개표 수가 맞지 않아 공동의회 소집을 재공고하여 다시 모인 것은 불법인가?

- 공동의회에서 차기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하였다면 적법하다. 【104-242】

[16] 목사 1인, 시무장로 3인으로 구성된 조직교회가 당회의 결의 없이 공동의회에서 시무장로 3인의 권고 사임을 결의한 것은 합법인가?

- 『헌법』 정치 제5장 제33조 3.과 제12장 제66조 1. 2., 제68조 4.에 의거하여 제직회에서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하였다면,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104-242】

*** 『헌법』 IV.정치 제5장 제33조 장로의 휴무, 사임, 사직, 면직, 휴양**

3. 권고 사임

시무장로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할 경우 또는 교인의 다수가 그 시무를 원치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의 결의로 사임된다.

*** 『헌법』 IV.정치 제12장 제66조 공동의회 소집**

1.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경우
2.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 『헌법』 IV.정치 제12장 제68조 공동의회의 안전**

4. 제직회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안전 단, 무흠 입교인의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안전 중 교회의 교단 탈퇴의 건은 제외한다.

[17] 당회의 결의 없이 대리당회장을 세울 수 있는가?

- 『헌법』 정치 제9장 당회 제47조 당회장 2.에 의거하여 세울 수 없다.

【105-160】

*** 『헌법』 IV.정치 제9장 제47조 당회장**

2.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신병이나 여행 등의 사정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그 노회에 소속한 목사 중에서 선임하여 당회장 임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다.

[18] 미조직 교회의 당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회가 임명하는 준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세워 공동의회를 사회할 수 있는가?

- 『헌법』 정치 제9장 당회 제47조 당회장 2.에 의거하여 사회할 수 없다.

【105-160】

* 『헌법』 IV.정치 제9장 제47조 당회장

2.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신병이나 여행 등의 사정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그 노회에 소속한 목사 중에서 선임하여 당회장 임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다.

[19] 1) 개 교회에서 당회장이 공동의회에서 교회 정관을 개정하여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교단 탈퇴 여부를 당회에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가?

- 『헌법』 IV.정치 제12장 공동의회 제68조 공동의회의 안건에 의거하여, 공동의회의 안건은 당회가 부의하여야 하므로 적법하지 않다. 【107-163】

* 『헌법』 IV.정치 제12장 제68조 공동의회의 안건

공동의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부의한 사항
2. 교회 재정의 예산 및 결산 채용
3. 직원 선거
4. 제직회사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안건 단, 무흠 입교인의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안건 중 교회의 교단 탈퇴의 건은 제외한다.
5.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

2) 개 교회에서 당회장이 공동의회에서 교회 정관을 개정하여 교단 탈퇴 후, 당회 재판 없이 공동의회에서 가장 소속인 교인을 치리나 출교(제명)하였다면 적법한가?

- 『헌법』 IV.정치 제8장 치리회 제41조 치리회와 정치, 제9장 당회 제45조 당회의 직무 8.권장에 의거하여, 치리회 재판 없이는 치리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다. 【107-163】

* 『헌법』 IV.정치 제8장 치리회 제41조 치리회와 정치

교회의 치리에는 명백히 제정된 정치의 조문과 조직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에 따라야 한다.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치리회에 있다(행 15).

* 『헌법』 IV.정치 제9장 당회 제45조 당회의 직무 8.권징

교인 중 범죄자가 있을 때에는 권징조례에 의하여 권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해별한다.

[20] 교인이 자택이나 요양원에서 치료나 요양을 이유로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구두나 서면으로 교회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목회자가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에 공동의회 회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가?

- 『헌법』 IV.정치 제9장 당회 제45조 당회의 직무 2.교적과 『헌법』 V.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105조 장기 결석자의 지도'에 의거하여, 당회 결의 없이는 정지할 수 없다. 【107-167】

* 『헌법』 IV.정치 제9장 당회 제45조 당회의 직무 2.교적

2. 교적

당회는 교인의 교적을 관장하고 교인의 이명증서(세례 교인, 아기세례 교인)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했을 때는 곧 보내온 당회에 접수 통지를 낸다.

* 『헌법』 V.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105조 장기 결석자의 지도

본 교회 입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교회에 출석치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이 출석하도록 권면하고, 6개월이 경과하도록 계속 듣지 않으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먼저 통지한 후 처벌할 수 있다. 그 후 그 교회에 다시 출석하면 해별할 수 있다.

6. 노회

1) 노회의 회원

[1] 무임전도사가 노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있는지?

- 『헌법』 정치 제10장 제55조 4.에 의거하여 초청되지 않는 한 노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없다. 【82-160】

* 『헌법』 IV.정치 제10장 제55조 노회의 회원

4. 노회가 초청하는 전도사, 여신도회 대표, 남신도회 대표, 청년회 대표, 교회학교교사회 대표, 기타 노회가 초청하는 사람은 노회에서 언권을 가진다.

[2] 목사가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을 때 노회의 회원권이 있는지?

- 당해 안전에 대하여서는 회원권이 정지되며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은 노회가 결의하여야 정지된다(『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제99조). 【72-97】

* 『헌법』 V.권징조례 제11장 제99조 소송 당사자의 회원권 제한

어느 처리회를 막론하고 교인이나 직원이 소송 중에 있을 때에는 그 처리회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케 할 수 있다.

[3] 국제협력선교동역자의 노회 회원권은?

- 『헌법』 정치 제15장 제79조 1. 2.에 의거한다. 【71-331】

* 『헌법』 IV.정치 제15장 제79조 국제협력선교동역자

1. 총회는 협약을 맺은 국제협력교회로부터 국제협력선교동역자가 파송되면 먼저 파견서를 접수하고 소정의 준비교육과정을 마친 후에 해당 노회와 기관에 배치한다.
2. 목사인 국제협력선교동역자는 해당 노회의 정회원이 된다. 평신도 선교동역자는 노회에서 언권회원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고 지교회에서는 교인의 자격과 권리를 갖는다.

[4]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있는 전도사들이 노회 준회원 자격이 있는지?

- 『헌법』 정치 제10장 제55조 3.에 의거하여 노회의 준회원 자격이 없다.

【94-193】

* 『헌법』 IV.정치 제10장 제55조 노회의 회원

3. 준목은 노회 준회원으로 언권을 가진다.

[5] 교회가 65세 전에 교회에서 은퇴예식을 한 장로를 노회 총대 회원으로 천서했을 경우, 노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가?

- 은퇴예식을 했으면 시무장로가 아니므로, 노회 총대 회원으로 천서할 수 없다.

【109-헌법위원회 보고】

* 『헌법』 IV.정치 제2장 교회 제12조 교회의 직원 2.지교회의 개척

교회를 개척할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시작한다.

* 『헌법』 IV.정치 제5장 장로 제33조 장로의 휴무, 사임, 사직, 면직, 휴양 2. 자의 사임과 사직

시무장로가 자의로 사임 또는 사직하고자 하면 해 당회의 허락으로 사임 또는 사직할 수 있다.

* 『헌법』 IV.정치 제10장 노회 제53조 노회의 조직

3. 전년도 통계 보고에 의한 무흠 입교인 2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시무장로 6인 이상이면 3년까지 총대 장로를 파송할 수 있다.

2) 노회의 직무

[1] 『헌법』 정치 제10장 제54조 9. 3)의 당회나 교인이 교회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직접 청원권은 무엇인가?

- 『헌법』에 명시된 모든 청원은 직접 청원권에 속한다.

【69-38】

* 『헌법』 IV.정치 제10장 제54조 노회의 직무

9. 교회 사찰

- 3) 지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경유시켜 전달한다. 단, 당회나 교인이 교회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직접 청원권은 침해하지 못한다.

[2] 각종 청원서, 진정서, 행정심판건(소원건), 당회가 처리한 사항에 대한 상회 상소건은 시찰위원회를 경유해야만 하는가?

- 당회나 교인이 청원서, 행정심판건(소원건), 진정서, 상소건 등을 제출하고자 할 때 모든 안건은 반드시 시찰위원회를 경유해야 한다. 시찰위원회는 검토하여 서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나 사건 내용의 전부를 판단하지 못한다. 만일 시찰위원회가 경유를 거부할 경우 부전지를 부쳐 노회에 직접 제출한다. 【69-38】
- (* 편집자주 : 제100회 총회에서 소원은 행정심판으로 개정되었음)

[3] 지교회(당회)가 행정 보류를 결의하고 노회의 행정 지시를 받지 않았을 때 『헌법』 정치 제10장 제54조 1. 노회가 해 교회에 행정적 규제를 내릴 수 있는가?

- 지교회가 정당한 노회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74-135】

* 『헌법』 IV. 정치 제10장 제54조 노회의 직무

1. 행정적 총찰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지교회와 목사, 준목, 전도사,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등을 총찰한다.

[4] 교회가 행정을 보류하고 상회비 및 노회 의무금을 불이행했을 때 당회장 및 당회원에게 어떤 법적 제재를 내릴 수 있는가? (예 - 노회 정회원 총대 및 기타 회원권의 문제)

- 해 노회가 결의하여 권한을 중지시킬 수 있다. 【74-135】

[5] 전도사가 노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가?

- 상정할 수 없다. 【82-160】

[6] 총회에 상소 또는 재심을 청구할 때 노회장 혹은 서기가 노회나 임원회의 결의없이 임의로 서류를 만들어 노회장 직인을 찍어 총회에 접수한 서류를 합법적 서류로 보는가?

- 노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 없이 노회장과 서기가 임의로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당노회의 소관사항이다. 【82-161】

[7] 장로 1인, 목사 1인으로 당회가 구성된 경우 장로에 대한 송사가 있을 시 당회장이 당회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반드시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해야 하는가?

- 당회 결의 없이 당회록을 기록할 수 있으며 당회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한하

여 당회 결의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

[82-558]

[8] 당회나 시찰회의 '경유나 거부 확인 없이' 해약청원서나 유임청원서를 바로 노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요?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6조 2항에 따른다. [102-207]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6조 목사의 사무 사임, 사직, 면직

2.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의 제출은 재적 무흠 입교인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 진정서로 제출하되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당회와 시찰회를 경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회나 시찰회가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직접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

[9] 시찰장이 그 제척 대상자(목사해약청원의 대상자)일 경우 시찰회 서기가 직접 시찰회의를 소집하여 목사해약청원서를 경유할 수 있는지요?

■ 「총회 일반회의 규칙」 제1장 제1조와 제4조에 따른다. [102-207]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 제1장 제1조 (소집권자)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소집하며 부회장도 유고가 되면 서기가 소집한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 제1장 제4조 (회장의 제척)

회장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토의와 표결에 사회하지 못한다.

[10] 시찰장이 목사해약청원의 대상자일 경우 시찰회 서기가 시찰회 경유 없이 노회에 바로 목사해약청원서를 접수시키게 할 수 있는지요?

■ 『헌법』 정치 제4장 제26조 2.에 따른다. [102-208]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6조 목사의 사무 사임, 사직, 면직

2.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의 제출은 재적 무흠 입교인의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 진정서로 제출하되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당회와 시찰회를 경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회나 시찰회가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직접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

[11] 장로가 1인인 교회에서 장로권고사직을 이행하여 그것을 근거로 노회에 폐당회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노회가 폐당회보고서에 대한 처리가 아닌 장로권고사직 문제에 관여하여 권고사직 대상자의 소원이나 다른 절차 없이 그 권고사직 처리가 불법이라 판정하여 권고사직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지요?

■ 청원 및 행정심판 등 정당한 절차 없이는 할 수 없다. 【102-208】

* 『헌법』 V.권징조례 제6장 제63조 행정심판의 방식

행정심판은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와 그 이유서를 행정심판 대상 처리회와 상급 처리회에 제출한다.

[12] 노회에 현의안을 접수할 때, 정기노회 전에 서기에게 접수해야지만 현의안으로 심의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기노회에서 3분의 2이상 결의하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현의안으로 심의할 수 있는가?

■ 모두 가능하다. 【106-157】

[13] 노회에 현의는 당회만이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위원회도 할 수 있는가?

■ 처리회 혹은 위원회가 할 수 있다.

【109-헌법위원회 보고】

[14] 당회가 총회의 법규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청원하면, 노회가 심의하여 현의하거나 기각할 수 있는가?

■ 할 수 있다.

【109-헌법위원회 보고】

3) 노회의 회집

[1] 임시노회 회집과 안건은?

■ 『헌법』 정치 제10장 제58조 2.에 준한다.

【59-76】

* 『헌법』 IV.정치 제10장 제58조 노회의 회집

2. 임시노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목사 2인과 교회가 각기 다른 당회의 장로 2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임시 노회는 10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 통지를 보내고 통지한 의안만 처리한다.

[2] 노회 통합의 법적 절차는?

- 규칙 문제가 아니고 『헌법』 정치 제10장 제53조 및 제11장 제61조 5.에 의하여 합할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각 노회가 합의하고 각 교회에 수의하여 가결한 후 총회에 청원하여 결의되는 대로 총회가 통합한다. 【49-29】

*** 『헌법』 IV.정치 제10장 제53조 노회의 조직**

1. 일정한 지역 안에 10인 이상의 시무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10인 이상의 장로 총대로서 총회의 허락을 얻어 조직한다.
2. 총대 장로 수는 매 당회 1인을 원칙으로 하나 무흠 입교인 200명 이상 되는 교회나 시무 목사가 2인 이상이면 총대 장로 2인을 파송할 수 있다.
3. 전년도 통계 보고에 의한 무흠 입교인 2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시무장로 6인 이상이면 3인까지 총대 장로를 파송할 수 있다.

*** 『헌법』 IV.정치 제11장 제61조 총회의 직무**

5. 노회 관할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그 구역을 정한다.

[3] 임시노회 소집은 누가 하는가?

- 임시노회 소집은 노회 규칙에 의해 노회장 또는 대리자가 소집한다.

【83-177, 87-300】

[4] 1) 노회 시 결의 방법에서 결의 성수를 개회 성수에 준하여 정회원인 목사, 장로 각 5인이 있어야 결의할 수 있는가?

- 『헌법』 IV.정치 제10장 노회 제56조 노회의 성수'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 제2장 회의 제11조(결의 성수)'에 의거하여, 결의할 수 있다.

【107-168】

2)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 제2장 회의 제11조(결의 성수)에서 명기하고 있는 바 정회원 목사, 장로를 구분하지 않고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면 결의할 수 있는가?

- 『헌법』 IV.정치 제10장 노회 제56조 노회의 성수'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 제2장 회의 제11조(결의 성수)'에 의거하여, 개회 성수가 유지되어야 결의할 수 있다. 【107-168】

*** 「헌법」 IV.정치 제10장 노회 제56조 노회의 성수**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당회가 각기 다른 시무목사와 총대 장로 각 5인 이상이 출석하면 노회는 개회 성수가 된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 제2장 회의 제11조(결의 성수)**

성수가 되어 개회하였을지라도 회의 도중에 성수가 되지 못하면 회의를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잠시 동안은 토의할 수 있고 표결 시에는 반드시 성수가 되어야 하며 정회, 폐회 등 의는 예외이다.

[5] 노회 회의 시 「헌법」 IV.정치 제10장 노회 제56조(노회의 성수)에 의해 개회된 후,

1) 개회 성수만 유지하면 결의 성수가 되어 표결하여 결의할 수 있는가?

- 「헌법」 IV.정치 제10장 노회 제56조 노회의 성수'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 제2장 회의 제11조(결의 성수)'에 의거하여, 개회 성수가 유지되어야 한다. 【109-헌법위원회 보고】

*** 「헌법」 IV.정치 제10장 노회 제56조 노회의 성수**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당회가 각기 다른 시무목사와 총대 장로 각 5인 이상이 출석하면 노회는 개회 성수가 된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 제2장 회의 제11조(결의 성수)**

성수가 되어 개회하였을지라도 회의 도중에 성수가 되지 못하면 회의를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잠시 동안은 토의할 수 있고 표결 시에는 반드시 성수가 되어야 하며 정회, 폐회 등 의는 예외이다.

2) 처음 개회 시 모인 수에서 과반수 유지되어야 결의 성수가 되어 표결하여 결의할 수 있는가?

- 개회 성수가 유지되어야 결의할 수 있다. 【109-헌법위원회 보고】

3) 전 회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결의 성수가 되어 표결하여 결의할 수 있는가?

- 아니다. 【109-헌법위원회 보고】

4) 기타

[1] 교회 수습 전권위원들이 문제된 교회 수습을 위해 총회 헌법 및 노회 규칙을 유안하면서
라도 교회 수습을 할 권한이 있는가?

- 총회 헌법은 유안할 수 없고, 노회 규칙은 해 노회가 유안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으면 할 수 있다. 【67-106】

[2] 노회 수습 전권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처리되어진 인간은 노회를 대항하는 것이므로 보고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회에 청원하여 심의 결의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 전권위원은 처리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67-106】

[3] 전권위원의 권한과 한계는?

-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의 범위 안에서 위임하여 준 권한 안에서 처리한다. 【67-106】

[4] 총회 산하 단체인 남신도회전국연합회 임원직에 은퇴장로가 직을 맡을 수 있는지?

- 남신도회전국연합회의 규칙에 의하되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은퇴장로도 임원직을 맡을 수 있다.
(『헌법』 정치 제1장 제6조, 제2장 제12조) 【67-106】

* 『헌법』 IV.정치 제1장 제6조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품, 자격, 권위, 선거, 임직에 관한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어떤 회에 서든지 직원을 선거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 『헌법』 IV.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1. 교회의 향존 직원은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이다. 교회는 그 밖에 준목, 전도사, 서리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시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
3. 타국 시민권자는 재한 외국인 교회와 다문화 선교기관의 직원이 될 수 있다.

[5] 총회 산하 단체의 임원 자격에 대한 문의

- 산하단체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그 단체의 일이므로 자체 규정대로 하며,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자체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78-260】

[6] 미조직교회 목사(준당회장)가 노회에 총회 헌의인을 제출할 수 있는가?

- 『헌법』 정치 제9장 제47조 당회장 5.에 의거하여 제출할 수 있다. 【89-154】

* 『헌법』 IV.정치 제9장 제47조 당회장

5. 준당회장은 미조직 교회의 당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회가 임명한다. 교회가 치리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아직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1인이 준당회장으로서 당회 사무를 처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단, 재판권은 위탁판결에 맡겨야 하며 기본재산 처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7] 『헌법』 제54조 노회의 직무 중 '제2항', "각 당회가 제출하는 안건들(헌의, 청원, 진정, 문의 건 등)을 접수 처리한다"에서 각 당회가 노회에 헌의, 청원을 할 때 당회가 모이지 않고 준당회장이 직접 안건을 노회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

- 할 수 있다. 【91-159】

* 『헌법』 IV.정치 제10장 제54조 노회의 직무

2. 청원 안건

각 당회가 규정대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진정, 문의 건 등을 접수 처리한다.

[8] 노회로의 이명이 교회 설립청원서와 함께 접수된 것이 절차상 문제라면 해당 노회에서는 목사 이명에 대한 건과 교회 설립청원에 대한 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 불가능하다. 【98-175】

[9] 노회와 총회의 헌의는 처리회(당회, 노회) 혹은 위원회가 하는 것인가? 당회장, 노회장 혹은 위원장이 하는 것인가?

- 처리회 혹은 위원회가 한다. 【105-160】

[10] A노회에서 불법적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하여 장로직이 면직된 자가 타 교단에 가입하였다가 해벌 받지 않은 채 B노회에 가입하여 시무할 수 있는가?

- 시무할 수 없다. 【105-1012】

[11] A노회가 규칙으로 타 노회 행정 관할구역을 일방적으로 포함하여, B노회의 고유한 행정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교회를 회원교회로 가입시켜 그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가?

- 침해할 수 없다. 【105-1012】

[12] 노회 규칙의 관할지역에 기타지역을 추가하여 다른 노회의 관할지역에서 교회개척 또는 교회 설립, 노회 가입을 자유롭게 하도록 개정하여도 『헌법』 IV.정치 제53조 1항에 적합한가?

- 적법하지 않다. 【105-1013】

* 『헌법』 IV.정치 제10장 제53조 노회의 조직

1. 일정한 지역 안에 10인 이상의 시무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10인 이상의 장로 총대로서 총회의 허락을 얻어 조직한다.

[13] 타교파(통합) 목사가 개인적으로 노회에 가입할 수 있나?

- 『헌법』 정치 제4장 제23조 청빙 허락 3. 타교파 목사의 편입에 의거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 여부는 노회의 권한이다. 【106-157】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3조 청빙허락

3. 타교파 목사의 편입

타 교파 소속 목사가 본 교단에게 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소속될 노회의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관할 노회에 가입을 신청한다.
- 2) 목사 2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국가가 공인한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노회의 가입 청원 후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헌법을 포함한 위탁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점은 총회 고시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본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을 경우 위탁교육은 면제한다.
- 4) 위탁교육 이수 후 목사 편입고시(헌법, 면접)에 합격한 후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7. 총회

[1] 분립 노회 소집은 누가 하나?

- 분립 노회 소집은 총회 결의로 총회장이나 분립위원이 할 수 있다.

【63-132】

(* 분립위원은 총회가 정한 분립위원을 의미함.)

[2] 총회 소집자는 누구인가?

- 『헌법』 정치 제11장 제63조 2.에 의거한다.

【74-111】

* 『헌법』 IV.정치 제11장 제63조 총회의 회집

2. 회장은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한다.

[3] 총회에 제출된 ‘노회조직 청원서’의 처리는 어떻게 할지?

-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되지 않은 ‘노회 조직 청원서’는 『헌법』 정치 제11장 제61조 2. 및 5.에 따라 반려한다.

【77-191】

* 『헌법』 IV.정치 제11장 제61조 총회의 직무

2. 의안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상고, 행정심판, 문의, 위탁판결 등의 각 안건들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5. 노회 관할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그 구역을 정한다.

[4] 노회 분립 시, 기존 노회 임원의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전원 개설햐야 하는지?

- 노회 분립으로 『헌법』 정치 제11장 제61조 5.에 의하여 새 노회들이 설립되므로, 분립 이전의 기존 노회 임원의 기득권은 상실된다. 그러나 각자 노회의 결의로 기득권을 인정하고 결원만 보선(선출)하는 것은 그 노회의 자유이다. 【80-152】

* 『헌법』 IV.정치 제11장 제61조 총회의 직무

5. 노회 관할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그 구역을 정한다.

[5] 회원이 아닌 자는 그 회의 의장이 될 수 없는데, 노회 분립위원이 분립 노회에 참석하여 의장으로서 사회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당선 선포를 할 수 있는지?

- 노회 분립의 관할권은 총회에 있다.(『헌법』 정치 제61조 5. 노회 관할) 따라서 총회의 노회 분립위원은 총회가 선임, 파송하여 노회를 분립하고 설립하는 일을 맡겼으므로 할 수 있다. 〈참조:「정치치리 총람집」7-11〉

[6] 노회분립 현의 정족수는?

- 노회분립 현의는 총회에 청원한 안건이므로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83-605, 87-300】

[7]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총회가 그 심의를 유보하였을 경우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유효한지?

- 유효하다. 【89-155】

[8] 후보 등록 전에 총회 총대였던 자가 등록 후 무임목사가 되었을 때 총대 자격이 있는지?

- 총대 자격이 없다. 【89-155】

[9] 총회시 결정된 인간심의회 부장이 유고될 경우 해당 노회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실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 될 수 없다. 【91-161】

[10] 총회시 보고하여 결정된 인간심의회 부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충원을 해야 하나요?

- 충원할 수 없다. 【91-161】

[11]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규칙」 제3장 제8조(선임 및 임기) 8.(「총회 유지재단 유지관리 시행세칙」 제5조 2항)의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에 등록하는 목사, 장로는 소속 교회의 재산이 총회유지재단 또는 노회 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헌법에 명시된 회원권을 제한하는 것이 기본적인 파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규칙」 제3장

제8조(선임 및 임기) 8.(「총회 유지재단 유지관리 시행세칙」 제5조 2항)과 관계없이 후 보통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규칙」 제3장 제8조(선임 및 임기) 8.(「총회 유지재단 유지관리 시행세칙」 제5조 2항)은 제92회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따라야 한다.

【93-185】

(* 편집자 주 : 제107회 총회에서 「총회 유지재단 유지관리 시행세칙」 제5조 2.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규칙」 제3장 제8조 (선임 및 임기) 8.로 개정됨)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3장 제8조 (선임 및 임기)**

8.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에 등록하는 목사, 장로는 소속 교회의 재산(교회의 본당과 대지 포함)이 총회(노회)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한다.

[12] 총회에서 헌법위원회에 연구를 위임한 안건에 대하여 연구를 위임한 것이니 개정하기로 한 안건과 현행대로 하기로 한 개정안도 같이 현의하여 그 이유를 제안설명하고 같은 절차로 의결해야 각 법규가 명시한 개정 절차에 맞는 것으로 보는데, 총회에 연구결과만 보고하고 현행대로 하기로 한 개정안을 현의하지 않은 것은 법제부와 총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요?

- 「총회 규칙」 제6장 제13조 1.과 「헌법위원회 규정」 제1장 제2조에 의거하여 헌법위원회는 총회가 연구하도록 위임한 안건에 대하여 연구결과 개정이 필요한 것은 개정 절차를 따라 총회에 현의안으로 제출하고 연구결과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헌법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총회에 제출하는 것임으로 법제부와 총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94-194】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규칙」 제6장 제13조 (상임위원회)**

1. 헌법위원회

- 1) 위원은 29인(여성 위원 1인 추가)으로 하고 『헌법』 정치 제16장 제80조 1.에 의하여 조직하되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 폐회 기간 중 헌법과 제 규칙, 규정 제정 및 개정안을 연구하여 총회에 현의할 수 있다.
- 3) 총회 폐회 기간 중 헌법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

*** 「헌법위원회」 규정 제1장 제2조 (임무)**

1. 본회는 법규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현의할 수 있다.

2. 총회가 개정하기로 의결한 법규의 조문을 정리한다.
3. 총회 폐회 기간 중 법규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
4. 총회가 연구를 위임하면 그 결과를 법규 개정안은 현의하고, 기타 안건은 보고서로 제출한다.

[13] 1) 2009년 12월 은퇴하는 장로가 제94회 총회 부총회장예 후보등록이 가능한지요?

-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2)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면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장로의 정년은 『헌법』 정치 제12조 교회의 직원 2항과 「정치치리총람집」 3. 장로 [2]에 따라 70세 정년이 되는 해 연도 말일이다.

3) 관리헌법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2항에 의해서 부총회장의 자격이 12월 말로 종료되는데 남은 임기는 어떻게 하나요? 부총회장 보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석이 되는 것이지요?

- 보선 규정이 없으므로 공석이 된다.

4) 이런 상황에 후보자의 등록이 가능합니까?

- 가능하다.

5) 총회장 후보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부총회장 후보와 동일하다.

[94-195]

* 『헌법』 IV.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2.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사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

[14] 총회 실행위원이 헌법 질의를 할 수 없는가?

- 헌법 질의는 노회와 상임위원회 결의(회의록 첨부)로 질의할 수 있으며, 그동안 관례적으로 헌법위원들의 개인 질의를 허용했으나, 지난 제93회 총회의 결의(93-868)에 따라 개인은 질의를 할 수 없다.

[94-195]

[15] 1) 제95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대가 20명 이상인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의 여성 총대를 파송하여야 한다.’에서 20인 이상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이라는 뜻은 노회원 20명당 1명씩 비율로 늘어나는 것인지, 여성 총대 목사, 장로가 각 1인 이상이 되면 되는 것이지요?

■ 총대가 20명 이상인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이 포함되면 된다.

(* 편집자 주 : 제100회 총회에서 20명이 10명으로 개정됨. 여기서 총대 수는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를 합한 총인원 수를 의미한다.-제100회 회의록 983쪽 참고)

[96-184]

2) 노회 안에 총대로 파송할 여성 회원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 「총회 규칙」 제2장 제5조(회원)에 의하여 노회는 여성 총대를 파송하여야 한다.

[96-184]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규칙」 제2장 제5조 (회원)

1. 정회원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각 노회로부터 파송된 총대를 회원으로 하되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하고 당해년도 상회비 납부노회 총대 중에서 총대 점명 후 회원권이 발동한다. 각 노회의 총대 파송 비율은 전년도 통계보고에 의하여 무흠 입교인 500명마다 목사, 장로 각 1인씩으로 하고, 250명 이상의 단수에 대해서는 1인씩 추가할 수 있다. 단 총대가 10명 이상인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의 여성 총대를 파송하여야 한다. 총회는 목사인 국제협력선교동역자를 정회원으로 할 수 있다.

[16] 『총회제반규칙집』 「선교기금 관리세칙」 제11조(위약) 3항 “상환기일을 3년 이상 경과할 시는 그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서 채무를 총회 상회비에 포함하여 변제하여야 한다.”에 의거 해당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채무를 총회 상회비에 포함하여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총회 상회비 미납으로 총대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 제한할 수 없다.

[98-174]

[17] 노회 규칙을 먼저 개정한 후 당회가 분립을 청원해야 하는지요? 노회의 분립 청원을 총회가 허락하고 총회 분립위원이 답사한 후 총회장이 분립을 선언한 다음에 노회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요?

■ 『헌법』 정치 제10장 제53조, 제11장 제61조에 의거하여 노회의 분립 청원을 총회가 허락하고 총회 분립위원이 답사한 후 총회장이 분립을 선언한 다음에 노회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104-243】

* 『헌법』 IV.정치 제10장 제53조 노회의 조직

1. 일정한 지역 안에 10인 이상의 시무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10인 이상의 장로 총대로서 총회의 허락을 얻어 조직한다.
2. 총대 장로 수는 매 당회 1인을 원칙으로 하나 무흠 입교인 200명 이상 되는 교회나 시무목사가 2인 이상이면 총대 장로 2인을 파송할 수 있다.
3. 전년도 통계 보고에 의한 무흠 입교인 2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시무장로 6인 이상이면 3인까지 총대 장로를 파송할 수 있다.

* 『헌법』 IV.정치 제11장 제61조 총회의 직무

5. 노회 관할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그 구역을 정한다.

[18] 노회와 총회의 현의는 치리회(당회, 노회) 혹은 위원회가 하는 것인가? 당회장, 노회장 혹은 위원장이 하는 것인가?

- 치리회 혹은 위원회가 한다.

【105-160】

8. 헌법 개정

[1] 노회 수의 처리 방법은?

- 『헌법』 정치 제16장 제81조 3. 제82조 2.의 명문 규정에 따라 투표함이 가하다.

【83-177】

* 『헌법』 IV.정치 제16장 제81조 교리헌법 개정

3. 개정안은 노회 수의 3분의 2와 모든 노회 총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또 본 조항을 개정하려고 할 때도 이에 준한다.

* 『헌법』 IV.정치 제16장 제82조 관리헌법 개정

2.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모든 노회 총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9. 공천 관계

[1] 노회 분립에 따른 총회 실행위원회 위원 및 타 위원회의 위원을 즉시 선정할 수 있는가?

- 분립된 두 노회는 총회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각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노회장 이 장로일 경우 : 노회장, 목사 부노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나 총회의 타 위원은 다음 총회 때 배정하여 선출한다.

【72-98, 88-836】

[2] 「총회 규칙」 제7장 제18조 6.의 “총회 산하 유급 실무 직원은 총회 총대와 총회의 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단, 재단 이사는 예외로 한다.”에서 총회 총대와 총회의 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하는 총회 산하 유급 실무 직원의 범위는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가?

- 총회 예산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기관(예 - 현재는 총회 본부)이다.

【73-147】

[3] 은퇴목사가 노회 상비부서에 들어갈 수 있는가?

- 공천할 수 없다.

【63-131】

[4] 무임목사는 공천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

- 무임목사는 회원 자격을 요하지 않는 부서에는 될 수 있다.

【72-403】

[5] 대내외 부서의 총회장과 총무에 대한 당연직 공천 범위는?

- 총회장은 「총회 규칙」 제3장 제7조 1. 2)에 의하며, 총무는 직책상 위원(예-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일 경우와 대외기관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되 그 외의 대내외 부서의 위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76-226】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규칙」 제3장 제7조 (임무)

1. 총회장

- 2) 총회의 모든 부, 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의하며 지도할 수 있다. 총회장은 임기 중 실행위원회 위원장, 직책상 위원 및 대외관계 위원직을 제외하고 위원이 되지 못한다.

[6] 질병으로 은퇴한 사람이 총회 기구의 위원이나 이사를 맡을 수 있는지?

- 폐질로 인하여 은퇴한 사람은 그 직(위원, 이사 등)을 맡을 수 없다(『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6.). 【80-150】

*** 『헌법』 IV. 정치 제4장 제21조 목사의 사무 구분과 임기****6. 원로목사**

원로 목사는 정년 또는 자원 은퇴한 목사이다.

[7] 생활보장제 수혜자가 부정 수혜로 고소되어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의해 부정 수령금액의 반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노회의 각 위원회 활동과 총회 위원으로 될 수 있는지?

- 총회 재판국 판결대로 해 위원회에서 환수할 일이며, 노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자격 유무는 해 노회가 결정할 일이다. 【80-152】

[8] 재판국 구성 공천에서 “한 노회에서 2인 이상 선임될 수 없다”는 의미는?

- 반드시 1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81-490】

[9] 총회가 한신학원 이사회 이사로 파송하지 않은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 선임할 수 없다. 【84-108, 101-261】

[10] 정년(70세 이상)이 된 사람이 공직에 선임될 수 있는지?

-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2.에 의거하여 선임될 수 없다. 단, 총회가 인준한 한신학원 이사회가 해당 정관에 의해 시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참조 : 「총회 규칙」 제6장 제13조 18. 7). 【84-108】

*** 『헌법』 IV. 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2.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사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6장 제13조 (상임위원회)****20.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

- 7) 소정의 정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1] 총회 감사가 안전심의부의 부장이나 부원 및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이 될 수 있는가?

■ 될 수 없다. [86-151]

* 「총회 감사 규정」 제2장 제6조 (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회 산하 모든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한 태도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12] 총회 산하기관 직원은 총회 공천위원이 될 수 있는가?

■ 될 수 없다. [86-152]

[13] 1) 대내, 대외 위원 및 이사가 임기 중 그 직을 사임하고 그 후 새롭게 공천된 위원 및 이사가 잔여기간 동안 그 직무를 이행한 경우에 이를 초선으로 간주하는가?

■ 초선으로 간주한다.

2) 만일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활동한 직무를 초선으로 인정할 경우, 4년 임기 중 1년 미만의 잔여임기를 마치고 재공천되었을 때에 연임으로 간주하는가?

■ 연임으로 간주한다.

3) 연임 후에 또 다시 공천될 경우 삼선으로 간주하는가?

■ 삼선으로 간주한다. [88-848]

[14] 총회 공천위원회 위원이 해 노회 생활보장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당연직으로 공천되는 '생활보장재위원회'나 해 노회 국제협력선교위원장(혹은 해당 부서장)으로 선임되어 당연직으로 공천되는 '국제협력선교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 「공천위원회 규정」 제5조(공천업무) 4.에 의거하여 총회 공천위원회 위원은 총회 공천위원회 위원 이외에 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88-173]

* 「공천위원회 규정」 제5조 (공천업무)

4. 각 노회에서 파송되는 공천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는 업무만 맡을 수 있으며 기존의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5] 각 노회 '생활보장재위원회'나 각 노회 '국제협력선교위원회'도 대내외 1인 1부서 공천 원칙에 적용되는지?

■ 대내외 1인 1부서 공천 원칙이 적용된다.

【88-848, 89-155】

[16] 총회 안전심의부장으로 선출되어 자동적으로 위원회에 공천된 사람의 경우, 1인 1부서 원칙에 구애를 받지 않는지?

■ 각 위원회 규정(「신도위원회 규정」 제3조, 「선교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자동 공천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인 1부서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다.

【92-124】

*** 「신도위원회 규정」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아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 공천 6인(목사 3인)
2. 총회 신도부장
3. 각 신도회 대표 2인

*** 「선교위원회 규정」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에 의하여 15인을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1. 총회 안전심의부 선교부 부장
2. 산학자 1인
3. 목회자 3인(여성목회자 1인 이상 포함)
4. 도시빈민 목회자 1인
5. 농어촌 목회자 1인
6. 특수선교 목회자 1인
7. 여신도회 대표 2인
8. 남신도회 대표 2인
9. 부흥선교단 대표 1인
10.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후원협력교회협의회 대표 1인
11. 이주민선교운동본부 대표 1인

[17] 위원장을 선임할 때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 경우, 잔여 임기가 1년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 잔여 임기 동안 선임할 수 있다.

【92-124】

[18] 총회 후에 모이는 정기 실행위원회까지 조직되지 않은 상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총회에 준하는지, 해당 상임위원회 정기회에 준하는지요?

-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정치치리총람집」 11.기타 [7항과 「헌법위원회 규정」 제3장 회의 제6조의 의거하여 해 상임위원회 정기회에 준한다. 【92-182】

*** 「헌법위원회 규정」 제3장 제6조 (회의)**

본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한다.

[19] 총회 본회의에서 공천위원회에 재공천을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재공천할 수 있는지요?

- 공천위원회는 「공천위원회 규정」 제2조 (목적)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맡겨진 공천 사무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회가 최고 의결기구로서 공천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본회가 직접 재공천하였다 하더라도 절차의 문제가 없다. 단, 총회가 공천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다루는 것에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회부 동의를 구하여 처리할 수 있다. 【93-183】

*** 「공천위원회 규정」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총회에서 맡겨진 공천 사무만을 전담한다.
2. 총회 폐회 기간 중 생긴 결원은 본 위원회가 보선한다.
3. 총회 폐회 기간 중 생긴 긴급한 인선 공천도 본 위원회가 한다.

[20] 정치치리총람의 '총회가 한신학원 이사회 이사로 파송하지 않은 사람'(「총회제반규칙집·정치치리총람집」 9.공천관계 [9])의 의미는 무엇인가?

- 이사회 추천이사 개방형 이사는 이사장이 될 수 없다. 【101-15】

[21] 「총회 규칙」 제13조의 각 상임위원회도 위원회 추천위원(이사)을 위원장(이사장)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지요?

- 총회가 허락하면 할 수 있다. 【101-262】

[22] 1) 정년이 안되어 자원 은퇴한 목사가 시찰 위원을 제외한 시찰을 대표하여 노회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노회 공천위원을 할 수 있는지요?

- 은퇴한 목사는 시찰회 소속이 아니므로 할 수 없다.

2) 정년이 안되어 자원 은퇴한 목사가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지요?

- 될 수 있다.

【101-264】

[23] 공천된 위원이 생활보장제 현금을 8개월 동안 미납함으로 노회 공천위원이 사임서 없이 교체하여 공천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다.

【102-205】

[24] 1) 대내외 위원 및 이사가 임기 중 무임이 된 경우와 자원 은퇴한 경우, 위원 및 이사의 자격이 있는가?

- 「총회 공천업무 시행세칙」 제3조(공천 자격) 2.에 의거하여 무임이 된 경우는 자격이 없고,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2.와 제10장 제55조 노회의 회원 1. 1)에 의거하여 자원 은퇴한 경우는 정년 70세까지 자격이 있다.

2) 자격이 없는 경우, 공천위원회가 사임서 없이 사임 처리하고 보선할 수 있는가?

- 무임의 경우 사임서 없이 자동 처리된다.

【106-157】

* 「총회 공천업무 시행세칙」 제3조 (공천 자격)

2.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대원이 아니어도 공천될 수 있다. 단, 무임목사는 공천에서 제외된다.

* 「헌법」 IV.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2.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사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

* 「헌법」 IV.정치 제10장 제55조 노회의 회원

1. 1) 시무목사와 자원 은퇴한 목사는 의결권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5] 공천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공천이 되고, 총회가 인준한 총회의 산하 상임위원회에 파송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정관이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파송위원을 거부할 수 있는가?

■ 결격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107-168】

10. 권징

[1] 총회 폐회 후 총회 본부에 접수된 재판건은 직접 총회 재판국으로 이관하는지, 아니면 총회 실행위원회를 경유하여 재판국에 맡겨지는지?

- 총회 실행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가 위임한 사건을 심리 판결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따라서 총회 폐회 기간 중에는 총회를 대행하는 총회 실행위원회의 위탁이 필요하다.

(『헌법』 권징조례 제8장 제2절 제81조)

「총회 규칙」 제10조(실행위원회) 및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제5조(임무) 3.에 의거하여 총회 실행위원회는 총회를 대리하여 접수된 재판건을 총회 재판국에 위탁 하되,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할 수도 있다.

1. 제소의 사안에 따라서는 화해시킬 수 있다.
2. 제소의 사유가 권징의 취지에 뚜렷하게 위배되거나, 당사자는 물론 교회에도 덕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이를 반려할 수도 있다. 총회 실행위원회의 처리에 불복이 있을 때는 당사자는 부전하여 다음 총회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69-38, 98-888]

(* 편집자주 : 제98회 총회에서 기소결정위원 신설)

(* 편집자주 : 제106회 총회에서 3. 개정)

* 「헌법」 V.권징조례 제8장 제2절 제81조 총회 재판국의 임무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건을 심리 판결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

*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제5조 (임무)

3. 총회에 제출된 1심 재판건(고소, 고발, 위탁판결, 직할판결, 행정심판)에 대한 기소는 기소결정위원이 결정하지만, 상소(고소, 고발)와 항고(행정심판)는 접수하는 대로 총회 재판국으로 하여금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한다. 기소결정위원은 부총회장 2인, 총회 서기, 헌법위원장, 법제부장으로 한다. 기소결정위원 업무 지침은 별도로 둔다.

[2] 1) 재판 중에 있는 피고에게 노획의 결의도 없이 재판국이 다른 고소인의 제소를 병합분리 심리할 수 있는지?

- 할 수 없다.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위임받은 사건을 심리·판결한다(『헌법』 권징조례 제8장 제1절 제76조 노회 재판국의 임무).

*** 「헌법」 V.권징조례 제8장 제1절 제76조 노회 재판국의 임무**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위임받은 사건을 심리 판결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2) 임시당회장이 당회와 노회의 기소 여부 처리도 없이 노회 재판국에 직접 기소할 수 있는가?

- 할 수 없다. 노회 재판국은 상설 기구가 아니라 노회가 위임한 사건의 처리와 보고로 끝나는 한시적 기구다(『헌법』 권징조례 제2장 제14조 기소의 결정 1.).

*** 「헌법」 V.권징조례 제2장 제14조 기소의 결정**

1.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된 때에는 처리하는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원심의 기소는 최종심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3] 총회 폐회시에는 기소 결정권이 총회 실행위원회에 있는가? 총회 재판국에 있는가?

- 접수 여부는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나 기소 결정권은 재판국에 있다.

【75-171, 98-888】

***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제5조 (임무)**

3. 총회에 제출된 1심 재판건(고소, 고발, 위탁판결, 직할판결, 행정심판)에 대한 기소는 기소결정위원이 결정하지만, 상소(고소, 고발)와 항고(행정심판)는 접수하는 대로 총회 재판국으로 하여금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한다. 기소결정위원은 부총회장 2인, 총회 서기, 헌법위원장, 법제부장으로 한다. 기소결정위원 업무 지침은 별도로 둔다.

(* 편집자주 : 제98회 총회에서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제5조 3항 신설, 제106회 총회에서 3항 개정)

[4] 교인이 당회, 사찰위원회, 노회 경유 없이 총회에 직접 상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가?

- 제출할 수 없다. 반드시 노회를 경유해야 한다. 단, 노회가 거부할 시는 부전자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헌법』 권징조례 제5장 제55조).

【75-171】

* 「헌법」 V.권징조례 제5장 제55조 상소의 방식

상소를 하려는 사람은 판결을 한 치리회에 상소장과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원심 재판이 노회일 경우 노회에 상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교인이 직접 총회에 상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가?

- 할 수 없다. 반드시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헌법』 권징조례 제5장 제55조).

【75-371】

* 「헌법」 V.권징조례 제5장 제55조 상소의 방식

상소를 하려는 사람은 판결을 한 치리회에 상소장과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원고가 목사를 피고로 고소 또는 고발 시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고소장, 죄증 설명서 및 증거, 증인 등을 작성하여 『헌법』 정치 제10장 제54조 9. 3)에 의거 해당 시찰위원회를 거쳐 노회에 제출할 고소건은 당회를 경유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 『헌법』 정치 제4장 제26조 2.와 제10장 제54조 6.에 의거하여 반드시 당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76-371】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6조 2.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의 제출은 재적 무흠 입교인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 진정서로 제출하되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당회와 시찰위원회를 경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회나 시찰위원회가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직접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

* 「헌법」 IV.정치 제10장 제54조 노회의 직무

6. 권징

지교회가 제출하는 소송, 상소, 행정심판, 위탁 판결 등에 관한 일들을 처리하며 교회 권징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한다.

[7] 고소장 양식은 참고 사항인지 아니면 법적 효력이 있는가?

- 『헌법』 권징조례 제3장 제21조 3.과 제22조 2.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이 있다.

【76-371】

* 「헌법」 V.권징조례 제3장 제21조 피고의 이익

3. 고소 또는 고발장과 죄증 설명서가 양식대로 되지 않거나 법의 적용에 잘못이 있을 때

* 「헌법」 V.권징조례 제3장 제22조 이익에 대한 결정

2. 이익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익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 1) 재판의 합법적인 개정을 위한 연기
 - 2) 소송의 각하
 - 3) 고소(고발)장의 정정 또는 보완의 시기

[8] 노회의 초청언권회원이 노회 결의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청구서를 직접 총회에 제출할 수 없다. [72-404]

[9] 노회에서 권징조례에 의해 판결한 것은 소급 취소할 수 있는가?

- 법적으로 판결한 것은 소급 취소할 수 없다. [73-381]

* 「헌법」 V.권징조례 제7장 제68조 재심 청구

제1심 또는 상소심에서 유죄 판결된 사건의 증거 조사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임이 드러났거나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상소기간 만료에 관계없이 판결한 치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 V.권징조례 제7장 제69조 재심의 청구 기한

재심은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10] 본 교단의 해 노회에서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제1절 제102조와 제11장 제2절 제108조에 의해 목직직을 면직당하여 타 교단에 가입하였다가 해별받지 않은 채 타 노회에 가입하여 시무할 수 있는지?

- 1) 「헌법」 권징조례 제10장 제97조의 「해별은 책별받은 자의 관할 치리회가 시행한다」에 의하여 해 노회에서 해별하여야 한다.
- 2) 해별받은 후에는 본 교단 내 타 노회에도 가입하여 복직할 수 있으며 인수례 없이 임직직을 하여야 한다. (「헌법」 정치 제4장 제28조 5.)

3) 시무는 복직 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헌법』 권징조례 제10장 제96조 1., 2.)

[73-147]

※ 「헌법」 V.권징조례 제11장 제1절 제102조 직원의 면직 처벌

직원이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안전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 「헌법」 V.권징조례 제11장 제2절 제108조 관할 이탈 목사의 처리

현저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교단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무단으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증서 없이 타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를 노회명부에서 삭제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단,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또는 출교할 수 있다.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8조 목사의 복직

5. 사직 목사의 복직을 허락할 때에는 안수례 없이 임직 때와 같이 서약을 한다.

※ 「헌법」 V.권징조례 제10장 제96조 면직의 해별 및 시무

1. 면직의 해별로 복직된 자는 3년이 경과해야 시무할 수 있다.
2. 전향의 시행에는 시무 청빙 또는 시무 신임을 요한다.

[11] 노회를 거쳐 제출된 산하단체의 업무에 관련된 행정심판(소원사)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산하단체의 업무는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제67조(제6장 제62조)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의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반려한다.

※ 「헌법」 V.권징조례 제6장 제62조 행정심판의 사유

행정심판은 당회나 노회가 그 소관인 행정사항의 결정이나 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결정이나 처리가 위법할 때에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소속 교인, 치리 회원 또는 치리회가 상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2] 당회가 청원한 위탁판결은 당회 판결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회의 제2심 판결 효력을 가진 것인지?

- 위탁 판결 및 직할 판결은 그 사건의 상소심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52조) 따라서 제2심의 판결 효력을 갖는다.

[80-153]

* 「헌법」 V.권장조례 제4장 제52조 위탁판결 등의 효력

위탁 판결 및 직할 판결은 그 사건의 상소심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3] 재심청구의 기각은 재판의 판결로 볼 수 있는가?

- 원심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판결로 볼 수 있다. [80-153]

[14] 원심 판결 통보 후 20일 이내에 재심 청원을 하고 그 재심 청원이 기각된 사건의 상소기간
기준은 원심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인지, 재심 청원 기각 통고 받은 날로부터 20일인지?

- 재심 기각 통보받은 날부터 20일이다. 단, 재심 내용에만 한한다. [80-153]

[15] 총회 재판국의 최종 판결이 있는 후 총회에서 채택되기까지 그 판결의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 판결한 총회 재판국이 채택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즉시 유효하다. [82-160]

[16] 총회 재판의 판결 효력의 시기는?

- 판결한 총회 재판국이 당사자에게 통보한 즉시 유효하다. [82-558]

[17] 재판 판결은 언제 시행해야 하는가?

- 「헌법」 권장조례 제4장 제48조에 의거하여 즉시 시행해야 한다. [84-108]

* 「헌법」 V.권장조례 제4장 제48조 판결의 확정

1. 당회 재판, 노회 재판의 판결은 상소기간의 경과 후 즉시 확정된다. 단, 상소가 기간
내에 제기된 때에는 그 확정이 정지된다.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채용 즉시에 확정된다.
3. 교회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는 사회 법정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8] 총회가 채택하여 확정된 총회 재판국 판결을 당사자인 노회, 당회 또는 개인이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 「헌법」 정치 제8장 제43조에 의거하여 권징해야 한다. [82-558]

＊ 「헌법」 IV.정치 제8장 제43조 치리회의 권한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만일에 불복하거나 범법한 사람이 있다면 교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되 최종의 중벌은 교리에 패역한 사람이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출교시키는 일이다.(마 18:15-20, 고전 5:1-5) 치리회는 성경의 권위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여 책벌하며, 교회의 규례와 헌법을 범한 사람을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본 교단 관할 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각 치리회는 헌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9] 총회에 상소심 재판 판결을 요청하는 것을 총회 실행위원회의 접수 없이 총회 상설 재판국이 직접 접수, 심리 판결할 수 있는가?

- 할 수 있다. [82-161]

＊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제5조 (임무)

3. 총회에 제출된 1심 재판건(고소, 고발, 위탁판결, 직할판결, 행정심판)에 대한 기소는 기소결정위원이 결정하지만, 상소(고소, 고발)와 항고(행정심판)는 접수하는 대로 총회 재판국으로 하여금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한다. 기소결정위원은 부총회장 2인, 총회 서기, 헌법위원장, 법제부장으로 한다. 기소결정위원 업무 지침은 별도로 둔다.
(＊ 편집자주 : 제106회 총회에서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제5조 3항 개정에 따라 수정됨)

[20] 상설 재판국이 심리 판결한 문건을 총회에 보고하였을 때 총회가 삭제 결의한 것을 새로 조직된 상설 재판국에 위임, 혹은 계류시키지 않은 것을 심리할 수 있는가?

- 제81회 총회가 결의한 내용인 즉, 재판국 구성에 위법이 있으므로 해당 안건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그 재판국이 주문한 판결 내용을 삭제한 것이므로 이 안건을 계류안건으로 보고 새로 구성된 재판국이 심리할 수 있다. [82-160]

[21] 「헌법」 권징조례 제3장 제25조의 내용 중 “변호인”은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이면 누구든지 선임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선임 대상이 될 수 있다. [86-152]

＊ 「헌법」 V.권징조례 제3장 제25조 변호인 및 대리인의 선임

1. 원고나 피고는 본 장로회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1인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당회와 노회의 재판은 해 노회 내의 목사장로 중에서, 총회의 재판은 교단 내의 목사장로 중에서 각각 선임해야 한다.

3. 변호인을 선임한 때에는 변호인 선임 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4. 성범죄 재판의 경우, 피해자를 대신하여 교단 내의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대리인 1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2] 정년이 지난 목사, 장로도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가?

- 선임될 수 있다. [86-152]

[23] 총회 재판국 판결문 주문에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한 것은 적법한가?

- 적법하지 않다. [87-191]

[24] 총회 『헌법』 정치 제16장 제80조 3.에 의하면 “총회 폐회 동안에는 총회 헌법위원회가 헌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총회 재판국도 총회 헌법 해석을 할 수 있는가?

- 재판국은 양심에 따라 총회 헌법과 규칙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으나, 『헌법』 정치 제16장 제80조 3.에 의거하여 총회 헌법과 규칙에 대한 해석은 헌법위원회의 임무이다. [87-192]

* 「헌법」 IV.정치 제16장 제80조 헌법위원회

3. 헌법위원회는 총회 폐회기간 동안 헌법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

[25] 피고가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제6조 2.에 의거하여 재판위원 기피신청을 적법하게 냈을 때 재판국이 심의와 기각 여부의 결정과 통고도 없이 심의 종결하여 판결할 수 있는가?

- 『헌법』 권징조례 제1장(총칙) 제7조(기피에 대한 처리)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88-169]

(* 편집자주 : 고소 고발 건에만 한정됨)

* 「헌법」 V.권징조례 제1장 제7조 기피에 대한 처리

1. 재판위원의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재판회는 기피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재판회는 기피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그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재판위원을 교체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6] 재판국이 단 한차례의 재판에도 피고인측에 증거 제시와 참석 통보도 없이 원고측의 증언에만 따라 한 재판이 합법인가?

- 재판회는 반드시 『헌법』 권징조례 제3장(소송절차) 제20조(심리의 절차)대로 재판하여야 한다. [88-170]

(* 편집자 주: 고소, 고발 건에만 한정된다).

* 「헌법」 V.권징조례 제3장 제20조 심리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로 한다. 단, 원고가 소송 계류 중에 관련 사건에 관한 유인물을 유포하면 그 간은 기각할 수 있으며, 피고가 유인물을 유포하면 재판국은 처벌할 수 있다.

1. 고소 또는 고발장 및 죄증 설명서와 낭독
2. 기소이유의 설명
3. 원고 및 피고의 심문
4. 증거의 채택과 조사
5. 변론
6. 판결

[27] 1) 교인들이 해 사찰위원회의 사찰위원장인 당회장에 대한 해약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진정인들이 부전지를 부쳐 노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재판국이 이에 대한 판결에서 경유 심사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 적법한 처리인가? 이는 『헌법』 정치 제10장 제54조 9. 3)의 조문에 위배되는 판결이 아닌가?

- 『헌법』 정치 제4장(목사) 제26조(목사의 직무 사임, 사직, 면직) 2.(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에 합하는 해약 청원서는 유효하며, 『헌법』 정치 제10장 제54조(노회의 직무) 9.(교회 사찰) 3)은 준수되어야 한다. [88-171]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6조 목사의 직무 사임, 사직, 면직

2.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의 제출은 재적 무흠입교인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 진정서로 제출하되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당회와 사찰회를 경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회나 사찰회가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직접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

* 「헌법」 정치 제10장 제54조 노회의 직무

9. 교회 시찰

- 3) 지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경유시켜 전달한다. 단, 당회나 교인이 교회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직접 청원권은 침해하지 못한다.

2) 서류심사의 대상자가 심사자로 되었을 때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가?

- 해약 청원서의 대상자가 서류심사자일 때 제척 사유가 된다. [88-172]

[28] 개 교회의 장로선출에 대한 공동의회 결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회나 총회 재판국이 공동의회 결정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 있는가?

- 교회에서의 불법한 결정과 선언은 적절한 절차에 의해 다시 고쳐져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순결과 평화를 위함이며 교도하기 위함이다(참조 : 『헌법』 정치 제1장 교회 정치 원리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88-172]

* 「헌법」 IV.정치 제1장 제2조 교회의 자유

어느 교파나 교회 단체든지 교회 정치 제도와 교인의 입회 규칙 및 교역자와 교인의 자격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제정 선포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하거나 해이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의 권리를 오용한 것일 뿐, 그것으로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향유하는 보호와 안전 이상의 아무 도움도 요구하지 않는다.

* 「헌법」 IV.정치 제1장 제5조 교리와 법규

이상의 원칙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교회는 교인과 교역자의 건전한 신앙 지도를 위하여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좋은 성품과 생활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이해에 대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지교회는 교리와 법규에 따라야 한다.

* 「헌법」 IV.정치 제1장 제7조 치리권

교인에 대한 치리권 행사는 온 교회가 하든지 택하여 세운 대표로 하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뜻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임을 어느 치리회든지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양심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치리회의 모든 결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 곧 성서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치리회가 인간성에 따른 약점 때문에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제정된 법을 경시하거나 경솔하게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법은 신중히 제정하여

야 하며, 일단 제정된 법은 그 법이 절차를 따라 개정되기까지는 준수되어야 한다.

*** 「헌법」 IV.정치 제1장 제8조 권징**

위에 적은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원리들이 올바르게 준수되고 권징이 엄격하게 실시된다면 교회는 영광과 복락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국법상의 징벌이 아니고 도덕적이며 신령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권징 자체의 정당성과 만민의 공인성, 그리고 세계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축복 속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29] 총회 실행위원회가 ‘고소장’을 기각할 수 있는가?

-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제14조 기소의 결정 1.에 의거하여 기각할 수 있다.

[89-155]

*** 「헌법」 V.권징조례 제2장 제14조 기소의 결정**

1.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된 때에는 처리하는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원심의 기소는 최종심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30] 행정심판 경우도 「헌법」 권징조례 제68조(제62조) 재심 청구에 의거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

- 할 수 있다.

[89-155]

*** 「헌법」 V.권징조례 제7장 제68조 재심 청구**

재1심 또는 상소심에서 유죄 판결된 사건의 증거 조사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임이 드러났거나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상소 기간 만료에 관계없이 판결한 처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1] 특별재판국이 판결한 사건에 대해 재심할 수 있는가?

- 할 수 있다.

[89-155]

[32] 「헌법」 권징조례 제6장 행정심판 제63조 행정심판의 방식(제7장 소원 제68조 소원의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

- 1) 「헌법」 권징조례 제6장 행정심판 제63조 행정심판의 방식(제7장 소원 제68조(소원의 방식)에 의하여 “행정심판은(소원에는) 사유 발생 후 30일(20일) 내에 행정심판청구서와 그 이유서(소원장과 그 이유서)를 행정심판 대상(소원

대상 치리회와 상급 치리회에 제출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소원)은 대상 치리회와 상급 치리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사유 발생 후’란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인지 한 날부터이다.
3) ‘30일(20일) 내’란 시찰회에 통보 접수한 날이다. [91-161]

* 「헌법」 V.권장조례 제6장 제63조 행정심판의 방식

행정심판은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와 그 이유서를 행정심판 대상 치리회와 상급 치리회에 제출한다.

(* 편집자주 : 제100회 총회 헌법개정과 노회수의 결과에 따라 제68조는 제63조로 변경, 소원은 행정심판으로 개정되었음)

[33] 사회법정에 제소하였거나 판결된 내용으로 치리회에 고소장 및 고발장을 냈을 경우에 치리회는 이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반려해야 하는지?

- 해당 치리회가 반려할 수 있다. [94-193]

[34] 피청구인(피소원인)이 개인이 될 수 있는지, 피청구인(피소원인)이 개인일 경우 행정심판청구서(소원장)의 적법성이 있는지, 소속 및 직업란의 소속 및 직업이 행정심판청구서의 피청구인(소원장의 피소원인)이 속한 그 치리회 또는 결의한 기관의 대표로 보아야 옳은지요?

- 「헌법」 권장조례 제62조 행정심판의 사유(제67조 소원의 사유)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소원)의 대상은 당회나 노회이다. [93-184]

* 「헌법」 V.권장조례 제6장 제62조 행정심판의 사유

행정심판은 당회나 노회가 그 소관인 행정 사항의 결정이나 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결정이나 처리가 위법할 때에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소속 교인, 치리 회원 또는 치리회가 상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5] 「헌법」 권장조례 제10장 제91조의 처리를 “3분의 2로 결정하는 것인지,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다수로 결정하는 것인지요?

- 「헌법」 권장조례 제10장 제91조, 제92조에 따라서 시별해야 한다. [93-184]

* 「헌법」 V.권장조례 제10장 제91조 시별 치리회

판결이 확정된 책벌은 피고의 소속된 치리회가 시별한다. 시별하지 않은 치리회는 총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 「헌법」 V.권징조례 제10장 제92조 시벌의 방법

1. 공개되지 않은 죄는 치리회석에서 또는 위원을 파송하여 시벌한다.
2. 공개된 범죄는 치리회가 교회 또는 기타 공석에서 시벌 공포한다.
3. 시벌된 사람은 책벌인 명부에 기입한다.

[36]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규정 제101조 직원의 가중처벌에서 “정직이나 수찬 정지를 당한 직원이 1년 안에 회개치 않으면 재판 없이 면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1) 1년 안에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인가?

■ 해당 치리회이다.

2) 면직처분을 하는 담당 주체가 누구인가? 대개 당회나 노회 재판국은 상설 재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이나 수찬 정지를 판결하고 노회에 보고하고 재판국은 해산하는데 1년 지난 뒤에 누가 면직처분을 내리는가?

■ 해당 치리회이다.

3) 권징조례 제45조에 의하면 면직판결은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요한다고 하였는데 면직처분을 위해서 다시 재판국을 만드는 것인가?

■ 해당 치리회이며, 「헌법」 정치 제26조 4항, 제33조 4항에 의하여 목사나 장로의 면직은 재판에 의하여야 한다. 【93-184】

* 「헌법」 IV.정치 제4장 제26조 목사의 시무 사임, 사직, 면직

4. 면직

목사의 면직은 범죄 사실이 있을 때 노회가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하여 처리한다.

* 「헌법」 IV.정치 제5장 제33조 장로의 휴무, 사임, 사직, 면직, 휴양

4. 면직

장로의 면직은 범죄 사실이 있을 때 당회가 권징조례에 의해 재판하여 처리한다.

[37] 1) 시무 정직자 명부 처리방법에 대해 정직 기간 동안 ① 노회의 회원으로 등재해야 하는가? ② 등재해야 한다면 어떻게 시무 구분을 하는가?

■ 노회의 회원으로 등재해야 하며, 시무 구분은 무임(정직)으로 표기한다.

2) 시무 정직자의 책벌 범위에 대해 정직기간 동안 목사의 정직되는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모든 직무가 정직 된다면 목사의 칭호는 유지되는가?

- 목사의 칭호는 유지되나, 『헌법』 정치 제4장 제19조에 해당하는 모든 목사의 직무는 할 수 없다.

3) 시무정직 기산일 및 종료일, 종료시 절차에서 ① 시무정직 기산일은 재판 판결일부터인가? 시별 선포일부터인가? ② 시무정직 종료 시 자동 복권인가? 해별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거쳐야 한다면 어떤 절차인가?

- 시무정직 기산일은 『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48조 2항, 정치치리총람 10.권징 [15]~[17]에 의거하여 판결통보 받은 날부터이며, 시무정직 종료는 『헌법』 권징조례 제10장 제94조, 제97조에 의거하여 시별한 치리회의 해별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시무정직 종료 후(해별절차를 거치든지, 자동복권이든지) 목사직만 복권되는 것인지, 시무직까지 복권되는 것인지요?

- 해별절차를 거치면 목사직은 복권되나 시무직은 복권되지 않는다.

[94-26, 193]

* 「헌법」 IV.정치 제4장 제19조 목사의 직무

1. 목사와 예배
2. 목사의 성례 집행
3. 목사의 치리
4. 목사의 교육과 심방
5. 특수목회

* 「헌법」 V.권징조례 제4장 제48조 판결의 확정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채용 즉시에 확정된다.

* 「헌법」 V.권징조례 제10장 제94조 해별의 조건

책벌된 사람이 회개의 증거가 확실할 때에는 치리회석 또는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해별할 수 있다.

* 「헌법」 V.권징조례 제10장 제97조 해별 치리회

해별은 책벌 받은 사람의 관할 치리회가 시행한다.

[38] 당회나 노회가 『헌법』 권징조례 제6장 제62조 행정심판의 사유(제7장 제67조 소원의 사유)에 해당되면 소속 교인, 처리회원, 또는 처리회가 상회에 행정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총회가 행정심판(소원)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 총대 회원이나 노회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헌법』 권징조례 제62조(제67조)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소원)의 대상은 당회나 노회이므로 총회는 행정심판(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총회나 총대 회원은 차기 총회에 변경 청원을 현의할 수 있다. [94-194]

* 「헌법」 V.권징조례 제6장 제62조 행정심판의 사유

행정심판은 당회나 노회가 그 소관인 행정 사항의 결정이나 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결정이나 처리가 위법할 때에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소속 교인, 처리 회원 또는 처리회가 상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9] 교회가 노회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 위탁판결을 청원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판비용 및 공탁금은 교회가 부담해야 합니까? 아니면 노회가 부담해야 합니까? 만약 노회가 공탁금 및 재판비용을 부담하고 제소자가 패소하여 공탁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노회는 제소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헌법』 권징조례 제8장 제82조 1항에 의거, 제소자인 교회가 공탁금 및 재판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98-175]

* 「헌법」 V.권징조례 제8장 제82조 공탁금

1. 총회 재판국은 제소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0] 총회 재판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편으로 통보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인편(총회 재판국장)으로 전달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 『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47조에 의거, 서면으로 수령했음을 입증하면 우편이나 인편도 가능하다. [98-176]

* 「헌법」 V.권징조례 제4장 제47조 판결의 통고

재판회는 판결을 조속히 원고와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고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41] 1) 노회의 당연직 언권위원과 언권위원이 노회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는지?

2) 노회의 당연직 언권위원과 언권위원이 지 교회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는지?

3) 지 교회의 은퇴한 교인이 타 지 교회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는지?

- 개인의 위법이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고소, 고발할 수 있으나 당회나 노회의 위법은 고발할 수 없다. 당회나 노회의 위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행정심판청구는 회원만이 할 수 있다. [100-66]

* 「헌법」 V.권장조례 제2장 제9조 범죄의 고소, 고발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범행을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이를 고발할 수 있다. 단,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 사건 및 상대방 인 신공격에 관한 내용을 유인물 화하여 소송 제기 전에 유포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건을 기 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방하는 사람이 속한 처리회에서 처벌할 수 있다.

* 「헌법」 V.권장조례 제6장 제62조 행정심판의 사유

행정심판은 당회나 노회가 그 소관인 행정 사항의 결정이나 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결정 이나 처리가 위법할 때에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소속 교인, 처리 회원 또는 처리회가 상회 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2] 1) 「헌법」 권장조례 제63조의 제출 기한 30일을 경과한 당회, 노회의 위법은 고소 고발할 수 없다는 명시가 없으니 「헌법」 권장조례 제12조의 3년 시한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적용할 수 없다. 「헌법」 권장조례 제63조는 행정심판 관련 규정이고, 권장조 례 제12조는 고소, 고발 관련 규정이다.

2) 당회와 노회의 위법은 처리회의 범죄로 권장조례 제63조의 30일을 경과하면 「헌법」 권장조례 제12조의 시한 안에 고소, 고발할 수 있는지요?

- 할 수 없다. 「헌법」 권장조례 제63조는 행정심판 관련 규정이고, 「헌법」 권장 조례 제12조는 고소, 고발 관련 규정이다.

3) 총회의 위법은 행정심판(소원) 대상이 아닌데 「헌법」 권장조례 제9조의 대상도 아니 라면, 「헌법」 권장조례 제3조의 처리회에서 제외한다고 명시가 없으니 그 범죄는 고 소 고발 대상인지요?

- 총회 결의사항은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헌법』 권징조례 제9조에서 “피해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고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교회의 위법을 노회 연권회원은 고발할 수 없고 정회원만 할 수 있는지요?

- 지교회의 위법에 대한 고발은 지교회의 소속교인만이 할 수 있다.

【101-262】

* 「헌법」 V.권징조례 제2장 제9조 범죄의 고소, 고발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범행을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이를 고발할 수 있다. 단,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 사건 및 상대방 인신공격에 관한 내용을 유인물 화하여 소송 제기 전에 유포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방하는 사람이 속한 치리회에서 처벌할 수 있다.

* 「헌법」 V.권징조례 제2장 제12조 고소, 고발 등의 시한

고소, 고발은 범죄 사실이 있은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단, 성범죄는 그 기한을 10년까지 인정한다.

* 「헌법」 V.권징조례 제6장 제62조 행정심판의 사유

행정심판은 당회나 노회가 그 소관인 행정 사항의 결정이나 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결정이나 처리가 위법할 때에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소속 교인, 치리 회원, 또는 치리회가 상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 V.권징조례 제6장 제63조 행정심판의 방식

행정심판은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와 그 이유서를 행정심판 대상 치리회와 상급 치리회에 제출한다.

[43] 교회의 해약 청원이나 노회 재판국을 통해 사무해임이 결의된 후 사무해임된 당사자가 불복하고 상회의 재판국에 재판(행정심판)을 청원하거나 동일 사안을 사회 재판부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인하여 총회 재판국이 다루지 아니 하였을 때, 해 교회가 목사 청빙을 청원 할 수 있는지요?

- 상회의 재판국에 재판 청원이 고소, 고발 사건일 경우에는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일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 재판국이 다루지 아니하였을 때는 노회 재판이 확정판결이므로 할 수 있다.

[44] 1) 해약청원서를 다루도록 구성된 전권위원회가 당회장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요?

- 정지시킬 수 없다. 단 당회장권 정지에 관하여 노회가 권한을 위임하였으면 할 수 있다.

2) 전권위원회가 당회장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면 전권위원회가 노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임시당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요?

- 임명할 수 없다.

3) 전권위원회가 임시당회장을 노회의 허락이 없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다면 임시당회장이 지교회 장로직을 면직할 수 있는지요?

-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할 수 없다. 【101-263】

[45] 해약청원의 처리는 재판 없이 노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재판국을 열어 재판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 해약청원은 재판 절차 없이 노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해약청원은 권징조례에 따른 책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102-204】

[46] 노회 재판국에서 사무정지를 내리면 언제부터 사무정지가 되는 것인지, 상소를 할 수 있는 20일 동안은 당회장권이 지속되는 것인가?

- 최종 심의가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103-207】

[47] 면직당한 목사가 복권의 절차 없이 본 교단 목사로 타 노회에 가입하여 목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 수행할 수 없다. 【104-1067】

[48] 공동의회에서 권고 사임된 장로 2인의 행정심판청구의 건이 노회에 접수된 상황에서 당회장은 장로의 권고 사임을 노회에 보고하고 결원된 장로의 파택을 결행한 것은 불법인가요? (『헌법』 정치 제44조 2항)

- 불법이 아니다. 【104-242, 243】

* 「헌법」 IV. 정치 제9장 제44조 당회의 조직

2. 사무장로가 공석이 되어 폐당회가 되면 즉시 노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정

기노회 기간에 재조직 준비를 못하고 두 정기노회를 경과하면 담임목사는 자동으로 전도목사가 되며, 당회 조직 시까지 준당회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49] 『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51조(직할 판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위탁 판결 청원이 없어도 하급 처리회의 관할 소송 사건을 상회가 직접 기소를 결정하고 심리 판결하여 하급 처리회에 통보하거나 판결 지시를 할 수 있다. 1. 하급 처리회가 심리 판결하여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을 때, 2. 하급 처리회의 심리 판결이 곤란하고 위탁판결 청원도 난처한 사건일 때”로 되어 있다. 3. 성범죄 사건은 하급 처리회를 거치지 않고 상회에 직접 고소, 고발할 수 있다.

“노회 결의를 어긴 이유로 지교회의 직원과 신도를 노회가 직할 재판할 수 있는가?”

- 『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51조 직할 판결의 조건을 충족하면 직할 재판을 할 수 있다. 【105-158】

[50] 노회 산하 사업기관의 임원이며 지교회의 직원과 신도가, 기독교 사학을 지키려는 노회에, 노회의 규칙과 결의와 명령에 불복종하고 노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경우로, 상급 처리회인 노회가 지교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하급 처리회의 심리 판결이 곤란하고, 위탁 판결 청원도 난처한 사건이라 판단하여, 상급 처리회인 노회가 직접 기소하여 직할판결을 하고 하급 처리회에 통보하여 지교회가 이를 이행하였다면 적법한가?

- 『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51조 직할 판결의 조건을 충족하면 직할 재판을 할 수 있다. 【105-158】

* 『헌법』 V.권징조례 제4장 제51조 직할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위탁 판결 청원이 없어도 하급 처리회의 관할 소송 사건을 상회가 직접 기소를 결정하고 심리 판결하여 하급 처리회에 통보하거나 판결 지시를 할 수 있다.

1. 하급 처리회가 심리 판결하여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을 때
2. 하급 처리회의 심리 판결이 곤란하고 위탁판결 청원도 난처한 사건일 때
3. 성범죄 사건은 하급 처리회를 거치지 않고 상회에 직접 고소, 고발할 수 있다.

[51] 개 교회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를 결의한 당회장은 노회원인가?

- 『헌법』 V.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108조 관할 이탈 목사의 처리에 의거하여, 노회 명부에서 삭제할 것인지는 노회가 결의할 사항이다.

*** 『헌법』 V.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108조 관할 이탈 목사의 처리**

현저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교단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무단으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증서 없이 타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를 노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단,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또는 출교할 수 있다.

【107-164】

- [52]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한 처리회가 청구이유 유무를 결정할 때 처리회는 ① 노회재판국인가? ② 본회(전체회의)인가? ③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유관기관(정치부)인가?

■ 처리회는 노회이다.

【107-164】

- [53] 노회 본회(전체회의)로부터 행정심판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임받은 정치부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이유 있음을 결의하여 본회에 보고 시, 기소나 재판국 구성을 요청하였다면 본회는 이 기소나 재판국 구성을 수용해야 하는가?

■ 노회 본회에서 결정한다.

【107-164】

- [54] 노회 본회가 정치부의 기소나 재판국 구성을 거부하여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였다면, 노회원이 아닌 행정심판 청구인은 상급심(최종심)인 총회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가?

■ 『헌법』 V.권징조례 제6장 행정심판 제62조 행정심판의 사유에 의거하여, 노회에 대한 행정심판은 노회원이어야만 가능하다.

【107-164】

*** 『헌법』 V.권징조례 제6장 행정심판 제62조 행정심판의 사유**

행정심판은 당회나 노회가 그 소관인 행정 사항의 결정이나 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결정이나 처리가 위법할 때에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소속 교인, 치리 회원 또는 처리회가 상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55] 상급심(최종심)인 총회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방식은 ① 당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총회로의 행정심판청구서(권징조례서식 제21호)인가? ② 노회장을 피항고인으로 하는 항고인(권징조례서식 제23호)인가?

■ 노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총회 행정심판은 할 수 있다.

【107-164】

[56] 1) A교회에서 세례교인을 공동의회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그 결과로서 “공동의회에서 제명된 자는 교회의 교인이 아니므로 교회에 출입할 수 없고 교회에 대한 재산권 및 기타 그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 개정한 후, 재판 없이 교인을 처리하고 출교하였다면 적법한가?

- 『헌법』 IV.정치 제8장 처리회 제41조 처리회와 정치, 제9장 당회 제45조 당회의 직무 8.권징에 의거하여, 재판없이 교인을 처리하고 출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107-164】

* 『헌법』 IV.정치 제8장 처리회 제41조 처리회와 정치

교회의 처리에는 명백히 제정된 정치의 조문과 조직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에 따라야 한다.

교회의 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처리회에 있다(행 15).

* 『헌법』 IV.정치 제9장 당회 제45조 당회의 직무 8.권징

교인 중 범죄자가 있을 때에는 권징조례에 의하여 권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해별한다.

2) A교회가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 결의 후 위의 1)과 같은 일을 행시하고, 언론지상이나 노회에 탈퇴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교단 탈퇴를 당회에 위임하였다고 해서 공동의회에서 행한 교단탈퇴 결의가 적법한 일인가?

- 적법하지 않다. 【107-164, 165】

[57] 『헌법』 권징조례 제8조 권징의 종류에 해당하는 책벌을 재판 절차 없이 『헌법』 정치 제68조 공동의회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 처리할 수 없다. 【107-165】

* 『헌법』 IV.정치 제12장 공동의회 제68조 공동의회의 안건

공동의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부의한 사항
2. 교회 재정의 예산 및 결산 채용
3. 직원 선거
4. 제직회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안건 단, 무흠 입교인의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안건 중 교회의 교단 탈퇴의 건은 제외한다.

5.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

* 『헌법』 V.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8조 권징의 종류

1. 재판 결과 범죄가 있다고 확인된 때에는 판결로 책벌을 정하며 그 기한은 정하지 않는다.
2. 책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직원에 대하여
 - (1) 시무 정지 (2) 시무 해임 (3) 정직 (4) 면직
 - 2) 신도에 대하여
 - (1) 권계 - 가장 가벼운 징벌로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그러한 범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 (2) 견책 - 스스로 근신하게 하고 회개토록 하는 것이다.
(교회의 회원권이 유보된다.)
 - (3) 수찬 정지 -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수찬정지는 중한 징벌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출교 - 교회의 회원권 박탈과 참여를 금지하는 최고의 징벌. 성도의 교제도 단절된다.
3. 직원에게는 신도에 대한 책벌을 단과 또는 병과할 수 있다.

[58] 일부 지교회의 장관에 실제로 권징조례의 권징의 종류에 해당하는 책벌사항(예:면직, 출교) 등을 다른 명칭(예 : 자격정지, 제명)으로 표현하여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명칭을 달리하여 재판을 통하여 처리해야 할 권징이 재판 절차 없이 공동의회에서 의결 처리할 수 있는가?

■ 처리할 수 없다. 【107-165】

[59] 노회에 제출한 고소(고발) 건을 재판 없이 기소 기각 결정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총회에 제출한 경우, 고소 건에 대한 판결로 판단하여 『헌법』 권징조례 제5장 제57조(상소의 사유)에 의거한 상소의 건인가? 『헌법』 권징조례 제6장 제62조(행정심판의 사유)에 의거한 행정심판 건인가?

■ 행정심판 건이다. 【107-168】

* 『헌법』 V.권징조례 제5장 상소 제57조 상소의 사유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제반 법규를 위반하는 판결을 하였을 때
2. 치리회의 구성이 위법인 때
3. 제척될 재판 위원이 재판에 관여한 때
4. 증거 조사가 본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사실 오인이 있을 때
6. 증거에 의하지 않고 확증 없이 사실을 인정할 때
7. 책벌에 불복할 때

*** 「헌법」 V.권징조례 제6장 행정심판 제62조 행정심판의 사유**

행정심판은 당회나 노회가 그 소관인 행정 사항의 결정이나 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결정이나 처리가 위법할 때에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소속 교인, 치리 회원 또는 치리회가 상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0] 1) 성범죄 사건 재판 시, 원고와 피고를 분리해서 심리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가?(적법한가?)

- 재판국 결의에 의해 진행한다. 【107-167】

2) 성범죄 사건 재판 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원고(피해자)를 대신하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가?(적법한가?) 절차는 무엇인가?

-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 「헌법」 V.권징조례 제3장 소송절차 제25조 변호인의 선임」을 적용한다. 【107-167】

*** 「헌법」 V.권징조례 제3장 소송절차 제25조 변호인 및 대리인의 선임**

1. 원고나 피고는 본 장로회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1인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당회와 노회의 재판은 해 노회 내의 목사장로 중에서, 총회의 재판은 교단 내의 목사장로 중에서 각각 선임해야 한다.
3. 변호인을 선임한 때에는 변호인 선임 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4. 성범죄 재판의 경우, 피해자를 대신하여 교단 내의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대리인 1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61] 『헌법』 V.권장조례 제8장 재판국 제2절 총회 재판국 제82조 공탁금에 의하면, “1. 총회 재판국은 제소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성범죄 소송에 대한 재판비용 또는 공탁금은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제82조 6.을 원심인 노회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한 경우 상소인에게도 적용되는지요?

■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당한 피고인은 재판비용 또는 공탁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107-168, 169】

* 『헌법』 V.권장조례 제8장 재판국 제2절 총회 재판국 제82조 공탁금

6.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소송에 대한 재판비용 또는 공탁금을 면제한다.

[62] 당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동의회에서 「교회 정관」 중 “공동의회 결의로 행정처분(권고 사업)을 받은 직분자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교회 갈등을 유발할 때 공동의회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 ○○○노회에 속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의한 후, 개정된 「교회 정관」에 따라 공동의회를 통해 교인을 제명하였다. 이는 『헌법』 V.권장조례 제1장 총칙 제3조(범죄의 성립)와 제2장 소송 당사자와 소의 제기 제9조(범죄의 고소, 고발)에 따른 ‘고소, 고발의 사유’에 해당되는가? 『헌법』 V.권장조례 제6장 행정심판 제62조(행정심판의 사유)에 따른 ‘행정심판의 사유’에 해당되는가?

■ 고소, 고발 사유와 행정심판 사유 모두 가능하다. 【109-헌법위원회 보고】

* 『헌법』 V.권장조례 제1장 총칙 제3조 범죄의 성립

신도, 직원, 치리회의 신앙과 행위가 성경에 위배되거나 규례를 위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범죄가 성립된다.

* 『헌법』 V.권장조례 제2장 제9조 범죄의 고소, 고발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범행을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이를 고발할 수 있다. 단,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 사건 및 상대방 인신공격에 관한 내용을 유인물 화하여 소송 제기 전에 유포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방하는 사람이 속한 치리회에서 처벌할 수 있다.

* 「헌법」 V.권징조례 제6장 제62조 행정심판의 사유

행정심판은 당회나 노회가 그 소관인 행정사항의 결정이나 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결정이나 처리가 위법할 때에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소속 교인, 치리 회원 또는 치리회가 상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3] 1) 총회 헌법에서는 “제명”이 책벌에 해당될 수 있는가?

- 『헌법』 V.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8조 권징의 종류 2.에 의거하여, 책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직원에 대하여는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이고, 신도에 대하여는 권계, 견책, 수찬 정지, 출교이다. 【109-헌법위원회 보고】

2) ‘제명’과 ‘출교’가 동일한 책벌인가?

- 제명은 책벌의 종류가 아니다. 【109-헌법위원회 보고】

11. 기타

[1] 한국장로교협의회 회원 교단 총회장이 본 교단의 총회시 참석할 수 있는가?

- 할 수 있다. 【57-58】

[2] 총회 시 북한 교회 대표가 참석할 수 있는가?

- 북한 교회 대표를 총회에 초청할 수 있다. 【73-373】

[3] 교단이 인정할 수 없는 사이비 연합사업(초교파 기독교연합회 포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

- 각 노회가 엄히 규제하고 교육부로 하여금 사이비 종교, 또는 유사 단체를 회보를 통해 수시로 주지시킨다. 【62-143】

[4]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 및 제출서류는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마감해야 하는가?

- 총회 사업과 사무를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므로 모든 노회는 그 정기노회에서 총회에 보낼 보통 사건들을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에 사정에 따라 돌발하는 사건은 총회 개회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고 교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건은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51-32】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규칙」 제4장 제9조 (총회)

4. 총회 각 부서, 위원회 및 노회가 제출하는 청원, 현의 문의 등 모든 서류는 소정 양식에 따라 안전별로 2통씩 총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목사가 불신자의 결혼과 신자와 불신자간의 결혼에 주례할 수 있는가?

- 불신자 간의 결혼에는 범죄성이 없는 신성한 결혼일 경우는 할 수 있고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에는 해당 당회의 결의에 따라 한다. 【51-32】

[6] 자율 단체는?

- 부흥선교단, 군목단 【71-331】

[7] 총회 사업부서 및 위원회의 총회 후 첫 회의 소집자 명칭은 전 위원장으로 하는지, 위원장으로 하는지?

- 첫 회의 소집은 전 위원장이 하되, 공문을 보낼 때에는 “위원장”으로 명기하여 보낸다. 【57-185, 88-167】

[8] 총회장이 임직자에게 임직패를 줄 수 있는가?

- 임직패를 축하패로 명의 변경하고 패 대금은 해 교회가 감당한다. 【71-319】

[9] 총회 실행위원회와 총무간의 보고에서 사업 보고와 헌의권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 사업 보고는 총무가 하고 헌의 안건은 총회 실행위원회를 거쳐 헌의한다. 【72-403】

[10] 지교회의 재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교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후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지교회의 재산을 처리할 때 지 교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후 반드시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42】

[11] 해외 교회에 파송하는 대표의 선정은 어디서 하는지?

- 1. 교단을 대표하는 회의 참석을 위한 대표의 파송은 총회 실행위원회가 한다.
- 2. 해외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송을 위한 추천은 국제협력선교위원회가 한다. 【77-191】

[12] 총회 헌법위원회가 내린 유권 해석의 효력 발생 시기는 헌법위원회 결의 즉시인지 또는 총회에 보고 채택 시인지?

- 해석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82-160】

[13] 총회나 노회에 서류를 접수할 시 1차 접수하였다가 서류 미비로 반려된 건을 서류 구비하여 2차로 접수하였을 경우 1차 접수일을 접수일자로 보는가, 아니면 2차 접수일자로 보아야 하는가?

- 1차 접수일자를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 【82-558】

[14] 헌법 및 교회행정 서식에서의 (직인)란과 (인)란에는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 (직인)란은 반드시 직인을 사용해야 하며, (인)란에는 싸인과 무인을 쓸 수 있다.
[84-108]

[15] 「총회 연금 운영세칙」 제4조(자격의 취득)에 의하면 “1.총회 산하 지교회 또는 기관에서 시무하는 정규 교역자는 의무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라는 규정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뜻하는가?

- 교회와 교역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87-334, 733]

[16] 「정차·치리총람집」 자체만을 개정할 수 있는가?(현재까지 개정한 선례가 있는가?)

- 할 수 있다. [91-160]

[17] 총회본부 및 산하기관 직원의 시무 정년 월일은 언제인가?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취업세칙」 제65조(정년) 1.[에 의거 정년(65세)이 되는 월의 말일로 한다. [98-174]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취업세칙」 제7장 퇴직·해고 등 제65조 (정년)

1. 직원의 정년은 만 65세에 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

(* 편집자주 : 「총회본부 처무 규정」 “제2장 제6조(해직) 3. 정년에 달한 경우(65세)”가 제106회 총회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취업세칙」이 제정되어 제7장 퇴직·해고 등 제65조(정년) 1.로 수정됨.)

[18] 교회의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하는 것이 재산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재산 취득 및 처분과는 다른 재산 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인지와 그에 따른 결의 성수는?

- 교회의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하는 것은 『헌법』 정치 제14장 재정 제76 조재산의 보존에 의거하여 편입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99-68]

* 「헌법」 정치 제14장 제76조 재산의 보존

1. 총회 소유 부동산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에 등록하여 보존한다.
2. 노회와 지교회의 재산은 노회 관리하에 보존하되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3. 지교회 소유 부동산은 노회의 감독하에 교회의 당회가 관리하며, 지교회의 부동산을

매도, 교환, 소유권 변경, 담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면 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지교회가 본 교단을 탈퇴할 때에는 교인의 지분 및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19] ‘일시’에 대해 ‘주일’의 시간적 의미는 1일 24시간을 적용하여, 1주일(168시간)을 정확히 따져서 계산해야하는 것인가? 혹 통념상 1주일이라고 하는 공고된 날로 1주일(ex: 10월 7일 주일 오전 11시 공고 후 1주일이 경과한 10월 14일 주일)이 경과한 날 오전, 오후와 상관없이 개회해도 되는 것인가?

- 공고한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일에 공고하였을 시, 토요일이 1주일이 되는 날이다. 주일은 8일째에 해당한다. 【104-241, 242】

[20] ‘공고’의 의미는 통상 주보나, 게시판에 대자보 형태의 공고를 의미하는 것인가?

- 주보나 대자보(벽보, 기타 게시 공고), 교회 신문 형태를 의미한다.

【104-242】

[21] 주보 게시 없이 문자, 구두 광고 등의 다른 수단도 공고로 해석될 수 있는가?

- 없다.

【104-242】

[22] ○○교회가 제출한 기재 승인(교회담보대출) 서류는 서식 및 증빙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제출서류 중 2018.8.26. 공동의회록과, 2018.11.11. 공동의회록이 「총회 유지재단 유지 관리 시행세칙」 제10조(기채승인 신청) 2항의 소속기관회의록(당회, 제직회)에 근거하여 적법한지? 유지재단이 기채승인을 할 수 있는지?

- 기채승인은 공동의회의 결의로도 가능하다.

【104-243】

[23] 동성애, 동성혼이 본 교단 『헌법』의 신앙고백서에 근거하여 볼 때 부합하는가? 위배하는가?

- 신앙고백서대로 하기로 하다.

【107-1145, 1146, 1147, 1148】

[24] 총회 산하기관에서 시무하는 교역자의 생활보장제 부담금은 소속 기관이 납부해야 하는가?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가?

-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7조(재원형성) 2.에 의거하여, 소속 기관이 납부해야 한다. 【108-1149】

***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7조(재원형성)**

2. 총회 산하기관은 해 기관에 시무하는 목사, 준목, 전도사의 봉급 실수령액의 5%를 의무적으로 총회에 납부한다.

총회제반규칙집 / 정치처리총람집

2025

펴 낸 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펴 낸 곳 한기장 교육출판

발 행 인 이훈삼

인 쇄 일 2025년 5월 30일

발 행 일 2025년 5월 30일

주 소 (03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층 총회본부

전 화 02)3499-7625

팩 스 02)3499-7630

홈페이지 www.prok.org

E-mail prok3000@hanmail.net

가 격 21,000원

General Assembly /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Printed in Korea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www.prok.org